

정책보고서

합리적인 정부기관 장래운영방안 연구

김수봉 선우덕 박종서
심규현 강형구 김지연 김혁우

행 정 안 전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국민을 위해 봉사하던 정부기관 종사자들이 업무 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유가족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도 당황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장례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장례 절차나 수준은 유족들의 종교, 관습 및 기대에 따라 다르지만, 급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장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나 편람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시간적 낭비뿐만 아니라, 비용적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본 연구는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장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마련된 정부기관葬에 대한 매뉴얼은 합리적인 장례운영 모델을 제시함은 물론, 표준 장례매뉴얼 보급을 통해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기관葬을 효율적으로 장례진행을 가능하게 하여 유족 및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사정책연구센터 김수봉 연구위원 책임하에 선우덕 연구위원, 박종서 부연구위원, 김지연, 김혁우 연구원과 외부연구진으로는 수년간 장례 현장 경험을 갖고 있는 건국대병원의 심규현 팀장, (주)대명라이프웨이의 강형구 팀장에 의해 완성되었다. 연구진행 과정에서 조언을 해주셨던 을지대학교의 이필도 교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김시덕 과장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연구진은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준 본 연구원의 김승권 선임연구위원, 이삼식 연구위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2011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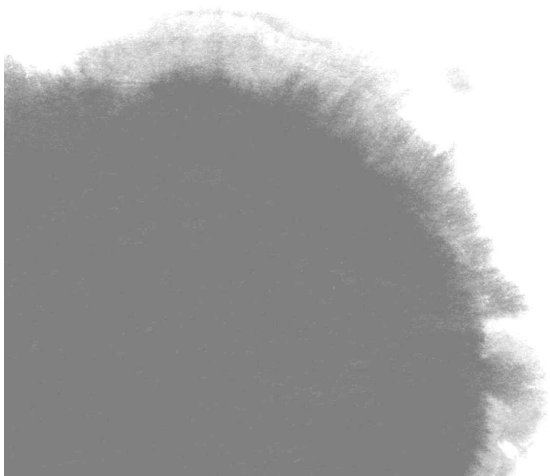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8
제2장 정부기관의 장례운영 사례	13
제1절 한국의 정부기관 장례운영	31
1. 근대의 장례운영	3
2. 현대의 장례운영	4
3. 국내 사례분석	5
제2절 주요 선진국의 사례분석	38
1. 미국	39
2. 독일	54
3. 일본	61
제3장 합리적 정부기관 장례운영 방안	72
제1절 정부기관장 관련 용어 해설	27
제2절 정부기관 장례 규정 표준안 검토	87
1. 기본방향	78
2. 정부기관장 규정(안) 주요내용	88
3. 정부기관장 규정(예)	8
제3절 정부기관장 운영방안(매뉴얼)	89
1. 매뉴얼구성의 기본방향	89
2. 정부기관장의 흐름	9
3. 매뉴얼 세부내용	9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6

[부록 1] 국가장법	166
[부록 2]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부록 3] 건전가정의례준칙	14
[부록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8
[부록 5] 사망조위금 신청 절차와 사망진단서	2

Contents

01

서론



제1장 서론

제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경제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정부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종사자들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대국민서비스의 증가는 관련 종사자들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사망 위험 또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수반되는 장례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던 정부기관 종사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사망이 발생하면 유가족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도 당황하게 되고, 장례과정에서도 절차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업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국방, 치안, 화재 진압 등의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에서는 장례에 대한 지침 또는 편람 등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으나, 일반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물론 장례는 유족들의 종교, 관습 및 기대수준 또한 다양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장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각 기관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던 고인을 보내는 마지막 단계인 장례 절차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에서 추진한 장례실시 현황을 체

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장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결과로 마련된 정부기관장 매뉴얼은 합리적인 장례운영 모델을 제시함은 물론, 표준 장례매뉴얼 보급을 통해 새로운 장사문화발전 방향 제시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장례진행을 가능하게 하여 유족 및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합리적인 장례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기관장이 주관하는 장례행사를 치룬 경험이 있는 행정부, 입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의 장례운영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선진 외국의 정부기관 장례사례를 고찰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각 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 심층조사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장례운영모델 개발하고 이를 매뉴얼로 작성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회의 및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장례운영방안 수립 및 표준 매뉴얼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먼저 행정기관 장례의 현황을 분석한다. 사례조사를 통해 국회장, 장관장 등 행정기관의 장례실태 및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장례 경험이 있는 각 기관이 사용한 장례명칭, 대상, 기간, 영결식 장소, 장례위원회, 비용지원, 관계 내부 규정 등을 알아 볼 것이다. 분석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본 연구의 결과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도 준용하여 사용될 것을 염두에 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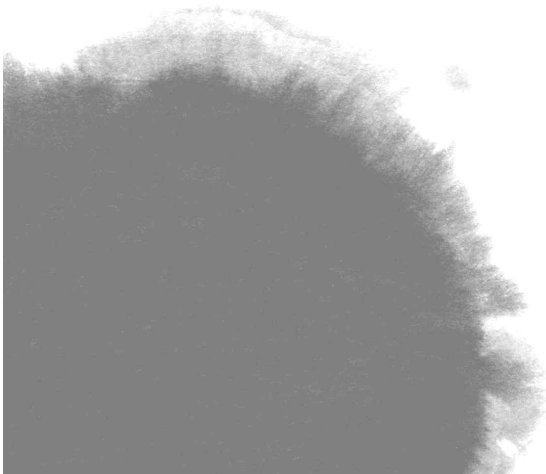
둘째로 주요 선진국의 행정기관 장례운영사례를 분석한다. 물론 자료와 시간의 한계 그리고 본 연구 주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다양한 선진국 사례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접근 가능한 해외 문헌자료 등을 통해 기관장 등 관련 행정기관 장례사례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전·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례 사례를 축적하는 것도 본 연구의 의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셋째, 정부기관葬의 합리적 운영방안 수립을 위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 보고자 한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장례대상자 선정기준, 장례기간, 장례절차, 장례위원회 구성, 비용지원 범위 등에 대한 결정이 상황과 시기마다 각기 달라진다. 따라서 장례운영에 대한 매뉴얼 마련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장례운영 매뉴얼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다. 장례명칭, 장례의식, 장례절차, 장례규모 및 영결식 장소, 장례위원회 운영방법 등이 포함된 정부기관 장례 매뉴얼안을 제시한다.

정부기관의 장례운영 사례



제2장 정부기관의 장례운영 사례

제1절 한국의 정부기관 장례운영

1. 근대의 장례운영

조선시대는 건국과 동시에 유교식 관혼상제의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건국 초기인 세종 대에 시작하여 성종 5년(1474) 《國朝五禮義》가 편찬되어 의례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내용에 논란이 있어 영조 20년(1744)에는 이를 수정한 《國朝續五禮義》를 편찬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이 왕실 상례의 존엄성과 세부적인 절차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영조 34년(1758)에는 이를 보완한 《國朝喪禮補編》을 편찬하였다.

조선시대의 상례규정은 국왕의 죽음을 처리하는 國喪을 중심으로 되어있었으며, 조정의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상례는 규정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국왕을 제외한 관리들과 일반 백성의 상례는 ‘대부사서인상례’로 규정하여 일반인의 상례와 동일한 방법으로 치르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리를 보내 치제하도록 하여 일반 백성의 상례와는 형태를 달리하게 하였다.

순종의 국장(1926)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러한 규정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순종의 국장은 일제강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식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나, 조화 사용 방법과 분향 방법 등은 일본식과 서양식이 혼재하는 국장이 되었다.

1927년 월남 이상재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거행되었는데, 당시의 상황을 요약하면 영구는 쌍두마차가 끌었으며 전국 각 계급의 유지 대표자 800명이 그 영구를 호위하면서 따랐다. 행렬의 맨 선두에는 기마에 오른 경호부장이 앞서고, 그 뒤에는 선생의 영정을 모신 소년군이 따랐으며, 영구 뒤로는 소년 척후대(보이스카우트 전신)가 각종 악기로 조가를 연주하면서 따랐다. 그리고 그 뒤로는 남녀 학생 3천명이 행렬을 지어 따랐으며, 그 다음에는 200개의 조기와 300개의 만장대, 그 뒤로는 무수한 일반 행렬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광복 이후, 근대국가의 기틀을 잡기 위한 소용돌이와 몸살 속에서 더 이상 유교식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의례는 존속될 수가 없었다. 1947년 몽양 여운형의 인민장 역시 태극기, 합창대, 조기, 검은띠를 두른 영정사진, 만장대, 생화대를 선두로 大興, 뒤이어 主葬 유가족 순이었다. 물론 명정이 등장하고 사람들은 흰 광복과 베옷을 입어 전통이 계승되었지만 상당 부분 서구식이 등장하고 있다.

1949년 7월 5일 김구 선생의 장례 또한 국민장으로 치러졌으며 이미 유교식 전통은 많이 쇠퇴한 상태이다. 남아 있는 사진들을 보면 태극기, 근조 깃발, 서양식 군악대 등이 등장하고 있다. 검은 띠를 두른 영정이 등장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백범김구지구라고 쓴 명정이 등장하고, 태극기를 든 여학생들은 교복차림이고, 흰 광복과 누런 삼베를 입은 사람들과 운구하는 사람들은 두건을 쓰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변화는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새로운 단제장의 모델로 정착하기에 이른다. 즉, 말하자면 형식적으로나마 자주적인 근대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건설하면서 완전히 전통적인 예전의 모델에서 벗어나 근대 공화국의 이념에 부응하는 현대적인 국가의례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항기와 일제시기에 행해진 국가의례는 해방 이후 현대적인 국가 예전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현대의 장례운영

우리나라 가정의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주자가례》에 근원을 둔 《사례편람》에 따라 전해 내려온 의례이다. 그러나 이 의례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국

민의 생활정서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정부는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간소화·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1969년 1월 16일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실시하였다.

가. 총괄

현행법상 장례행사에 관한 법률은 「국가장법」과 대통령령인 「군예식령」, 「건전가정의례준칙」 등이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하위 법인 규칙이나 조례로 정하고 있다. 우선 최근 개정된 국가장은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를 진행한다. 한편 군인이 사망한 경우 군예식령에 절차에 따라 장례를 진행하며, 장례식의 유형에는 국군장, 합동참모본부장, 육·해·공군장, 부대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장례식의 결정권자 및 주관자는 각각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각 군 지휘관이 된다.

한편 구체적인 행사는 시행 지침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건전가정의례준칙 상례(喪禮)편에서 정하고 있는 상례의 유형, 장일(葬日), 상기(喪期), 상복, 발인제의 식순 등을 준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정부기관장(葬)은 정부기관의 장(長)이 주관하는 장례를 의미하는 바, 정부기관에는 중앙정부기관 및 소속기관이 포함된다. 장례행사에 관한 규칙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기관으로서는 국토해양부와 외교통상부가 있다. 한편 입법부인 국회도 국회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의회의 경우에도 규칙이나 조례를 통해 장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장(葬)은 정부기관의 예규, 규칙 또는 내부 지침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장례를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족이 주관하여 추진하는 가족장과는 다르며, 해당기관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 명의로 장례행사를 주관하는 공공성이 강한 장례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8월부터 2차례에 걸쳐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을 대상으로 기관장 관련 법적근거와, 형식, 절차 등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해당 기관들은 최근 3년간 약 30여회 이상의 기관장을 치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를 요약하면 <표 2-1> 과 같다.

<표 2-1> 최근 3년간의 기관장 사례

구분			해당기관(횟수)
헌법기관			국회(3)
중앙행정기관			국토부(2), 외교부(1), 농식품부(1), 산림청(2), 해경청(3)
지방자치 단체	집행기관	광역시	광주(1), 경기(1), 전남(1), 충남(1)
		기초	안양시(1), 양산시(1), 남해군(2), 의정부시(1)
	의회	광역시	전남(1), 경남(1)
		기초	의왕시(1), 여주시(1), 곡성군(3), 대전 중구(2), 남해군(1)

나. 정부기관장

1) 법적 근거

정부기관장에 관한 통일된 정부 지침 또는 규정은 없지만 일부 정부기관 및 소수의 자치단체에서는 기관장을 치른 경험을 통해 그 필요성을 자각하고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정부기관에서는 예규 또는 규칙으로, 소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또는 훈령을 작성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2-2> 기관장의 법적 근거

법 형식	해당기관
대통령령	국방부(군예식령)
훈령	국회, 외교부, 국토부, 해경청
규칙	광역시(전남, 경남, 전북), 기초(의왕, 곡성, 대전 중구, 부천, 목포)
조례	안양시, 진도군, 남해군

2)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정부기관장의 대상은 대부분 현직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인 외교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직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상근인력(안양시, 부천시 등)을 포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공훈을 남긴 시민들도 포함(진도군, 목포시 등)하고 있어 전직의 경우를 포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고 있다.

한편 정부기관葬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중앙기관은 실·국장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사무총장 또는 사무처장/과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또는 의장이 결정한다.

〈표 2-3〉 정부기관장 선정기관 및 결정방법

구분	선정기관	결정방법
국가장	국무회의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
국토해양부葬	대상자선정위원회	위원장 1인(1차관)과 10인 이내의 위원(실국장급)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외교통상부葬	-	실국장회의의 심의
국회葬	-	국회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결정
서울특별시의회의회葬	-	시의회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
목포시葬	장의심의위원회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의 제청이나 시민·관련 단체의 추천으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장의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市長), 부위원장 1명, 15명 이내의 위원(목포시인사위원회위원, 인사위원회위원 외의 국·소·단장)
부천시청葬	-	대상자(순직공무원)를 명시한 것 이외의 특별히 결정하는 규정이 없음

3) 장례기간

장례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하여 3일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경우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등의 경우에는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대외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장례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회의장의 경우에도 장례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시민/군민장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5일, 7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례기간	해당기관
장례위원회 결정	국회, 외교부
가정의례준칙 적용(3일)	대전 중구의회, 부천시, 안양시, 전북, 경남
3일이내	해경청, 전남, 곡성군
5일이내	국방부, 국토부, 진도군(군민장)
7일이내	목포시, 진도군(군장)

장례에 소요되는 장례비용에 대한 규정을 보면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경우와 일정 범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정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도 비용부담액을 정해주는 경우와 별도의 항목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로 세분할 수 있다.

5) 요약

장례행사를 효율적으로 계획, 집행하기 위해서는 결정기구인 장례위원회와 집행부인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유족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간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경우 장례위원장을 포함한 장례위원회의 구성원은 장·차관, 실·국장 등 고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처리를 위해 운영지원과장이 간사업무를 맡는다. 한편 장례위원회의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위원회는 실장, 과장급으로 구성된다. 단, 소속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담당 기관의 장과 과장급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집행위원회 간사는 서무담당이 맡는다.

또한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또는 부시장이고, 집행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맡는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고 있으며,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장례행사를 치르게 된다.

그러나 장례위원회의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하고, 위임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겪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3일 동안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례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표 2-5> 주요 기관장 사례 비교

근거	대상자(범위)	장례형식	장례기간	장례 결정 절차
외교통상부장에 관한 규정	외교통상부 전, 현직 공무원	외교통상부장	장의위원회 결정	심사, 국장회의 심의후 장의위원회 구상
국토해양부장에 관한 규정	-업무 수행중에 사망한 경우 -국토해양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퇴직후 사망한 경우	국토해양부장	5일 이내	○국토해양부장대상자 선정위원회의결 - 위원장 1차관, 위원 실.국장 (10인 이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2/3이상 찬성으로 의결
해양경찰 의식규칙	전사 및 순직자, 현저한 공적을 남긴 경찰관	해양경찰장, 해양경찰관서장	3일 이내	각급관서 지휘관이 결정하고 주관은 장의식을 결정한 지휘관이 실시
부천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부천시청장	건전가정의례준칙 준용	- 장의위원회에서 결정
의왕시의회장에 관한 조례	현직의원	의왕시의회장	영결식 (1일)	- 장의위원회에서 결정
안양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무상 사망 공무원	안양시청장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인정편람 준용	-공무상법위결정장의위원회구성 -장례식집행위원회구성
전라남도의 회장에 관한 규정	현직의원	도의회장	3일	장의위원회에서 결정
목포 시민장에 관한 조례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공훈을 남긴 시민의 추앙을 받는 자	목포시민장	7일 이내	장의 위원회에서 결정(시장,의장제청또는 시민, 관련단체의 추천)
목포시장에 관한 조례	목포시 소속 공무원으로 공무수행 관련 사망한 자	목포시장	7일 이내	장의위원회에서결정(시장,의장제청또는 시민, 관련단체의 추천)
곡성군의회장에 관한 규정	현직의원	곡성군의회장	3일 이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
진도군 군장 및 군민장에 관한 조례	진도군수의직에있는자 진도군또는사회에 현저한공적을남긴자	진도군장 진도군민장	7일 이내 5일 이내	장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족의 동의를 얻어 결정
대전광역시중구의회장에관한규정	현직의회의원	대전광역시중구의회장	가정의례준칙 적용	1.의회운영위원회의결의 2.의장이결정
경상남도의 회장에 관한 규정	도의원	경상남도의회장	가정의례준칙 준용	사무처장의제청으로 경상남도의회의장이결정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	일반인(군정발전에 공훈을 세운 사람) 남해군민의추앙을 받은사람)	군민장		장의위원회 심의
	공무원(현직 남해군 공무원)	군장		장의위원회 심의
전라북도의 회장에 관한 규정	전라북도의회 의원	.장의위원회구성 .집행위원회구성	가정의례준칙 준용	운영위원회의결의또는 의회사무처장제청으로의장이결정
국회장에 관한 규정	*국회의장직에 있던 자 *현직국회의원	국회장	유족과 협의	국회사무총장의제청으로국회의장이 결정 (예외:유가족이별도의장을행하기로한때)

다. 정부기관葬 개선 사항

사례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기관장에 대한 근거 법의 부재로 대상자 및 선정기구, 장례행사 조직 및 비용지원 등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행정적인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 부처 내에서도 직급, 장례장소, 조문객수 등에 따라 비용지원의 차이가 상당하여 정부차원의 통일된 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장례의 절차 및 방법, 장례위원회 운영 등 기관별 차이로 행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장례절차의 통일성 부족으로 각양각색의 정부기관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기관장의 대상, 비용지원 등에 대한 정부기관장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장례행사의 의식 및 절차, 규모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표 2-6> 정부기관장 주요 개선 사항

① 문제점	② 개선사항	③ 비 고
○장례 절차의 통일성 부족으로 장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진행	○통일화된 절차, 방식 등 세부절차 규정	외교통상부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순직한 경우에는 통상 공직자 의사기등을 고려하여 부처장(기관장)등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통일된 규정이 없어 운영방법과 예산집행 등이 부처별로 상이하고, ○부처내에서도 순직자의 직위(급), 장례식장 장소·규모·장의용품·조문객수 등에 따라 비용차이가 상이하하여 정부차원의 통일된 규정이 필요	○공무원이 공무수행중에 순직한 경우에 전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통일된 예산집행 등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장의 규정 제정 필요 ⇒행정안전부에서 상훈 규정과 유사하게 제정	국토해양부
○장관장(葬) 시행기준 및 절차 부재로 혼선 초래 ○국가예산 지원범위 규정 부재로 혼선 초래	○범 정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의식규칙의 체계 및 통일성 결여	○정부차원의 의식규칙 재정비로 행사 절차의 통일성 유지 필요	해양경찰청
○장의관련 매뉴얼이 없어 지자체별 장례준비 어려움	○표준장의 매뉴얼 제작 (장례절차등통일)	전라남도
○종교적 의식절차에 따른 혼선초래	○행정기관에서 준비하는 장의에 대해 의식절차 표준화	전라남도
○일부 유족 장의차량 지원 요구	○의회장의 지원 범위 구체적 명시 필요	대전 중구의회
○임기시작 3개월도 안된 선출직(의원 등)은 장의를 지원하는데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공무원은 장의 지원이 없음	○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의 또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경상남도
○ 헌화시 꽃송이 방향 상이로 일부 혼선	○고인의 신위(영정)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전국적 통일 필요	경상남도
○ 자치단체장 유고 시 장례지원 등에 관한 근거 없음	○ 자치단체장 유고시 장례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필요	경상남도
○ 영결식 진행 순서 및 절차 등 표준 장의매뉴얼 마련 필요		경상남도
○영결식장구성규모등	○ 영결식장 설치시 규모 및 형태 등 전국적 통일 필요	광주광역시

3. 국내사례 분석

가. 국장 및 국민장 사례

1970년대 경제성장기 이후 정부기관의 장례운영은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한 국장과 국민장의 빈도가 많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1969.7.19), 육영수여사(1974.8.15), 박정희 대통령(1979.10.26), 윤보선 대통령(1990.7.18) 및 최규하 대통령(2006.10.26)의 사례가 있었으며, 최근 209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장이 거행되었다.

국장, 국민장에 대한 근거법률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었으나 최근 국가장법으로 개정되었다. 본 고에서는 2009년 실시된 국장과 국민장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7>, <표 2-8>에 제시된 바처럼 우리나라의 국장은 지금까지 2회가 거행되었으며, 국민장은 13회 거행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9일장을 김대중 대통령은 6일장으로 거행되었는데, 박대통령의 장례기간이 긴 이유는 시해사건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표 2-7> 국장 사례

년월	성명	경력	장의기간	보조금 (국고지원)	장지
1979. 10	박정희	대통령	9일	국고지원(4억8천만원)	서울현충원
2009. 8	김대중	前대통령	6일	국고지원(32억7천만원)	서울현충원

<표 2-8> 국민장 사례

년 월	성명	경력	장의기간	보조금 (국고지원)	장지
'49. 7	김 구	前임정주석	10일	(불명)	효창동
'53. 4	이시영	前부통령	-	20만원	수유동
'55. 2	김성수	前부통령	7일	20만원	고대 추정
'56. 5	신익희	前국회의장	19일	100만원	우이동
'60. 2	조병옥	민주당 당수	5일	30만원	수유동
'64.10	함태영	前부통령	7일	50만원	의정부
'66. 6	장 면	前부통령	9일	200만원	포천
'69. 8	장택상	前국무총리	7일	200만원	국립묘지
'72. 5	이범석	前국무총리	7일	300만원	국립묘지
'74. 8	육영수	대통령 영부인	5일	2,500만원	국립묘지
'83.10	서석준외16	부총리 등 (순국외교사절)	5일	국고지원 (4억1천만원)	국립묘지
'06.10	최규하	前대통령	5일	국고지원 (5억3천만원)	대전현충원
'09. 5	노무현	前대통령	7일	국고지원 (29억5천만원)	사저인근 (봉하마을)

1) 김대중 대통령 국장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이후 30년 만에 거행된 국장으로, 건국이후 전직대통령에 대한 첫 국장이었다. 장례 장소로는 유족과 정부, 국회가 긴밀히 협의하여 「빈소와 분양소, 영결식」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처음으로 치렀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거당일(8.18 18:00) 국무총리 주재 관계 국무위원 간담회 및 임시 국무회의(8.19)를 개최하여 「국장」으로 결정하고, 각 부처별 업무분담을 통해 장의 준비 및 신속한 현장중심 지원, 제반 준비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관리로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유족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장의 전반에 대하여 최대한의 예우와 지원을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장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특히, 국회에서 실무지원단(14명)을 구성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차량출입, 시설관리, 주요인사 지원 등으로 행사준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비롯하여 전국에 지방분향소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 전 국민이 애도하고 추모하는 조문평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유족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장의위원회」 최대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2)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갑작스런 서거로 짧은 행사 준비일정에도 불구하고, 서거당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 국무위원간담회」(2회) 및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5.24)하여 「국민장」으로 결정하고 각 부처별 업무분담을 통해 장의 준비가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유족측과 장의형식과 절차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장의 전반에 대하여 최대한의 예우와 지원으로 장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정부 대표 분향소(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광장)를 비롯하여 전국에 지방분향소를 설치·운영(102개소)하여 전 국민이 애도하고 추모하는 편의를 제공하였다.

국민장 장의위원회를 공동위원장(2인) 체제 및 운영위원회를 신설·운영하였으며, 노제 허용 등 장의집행에 만전을 기하였다. 장의형식·장소 결정 등이 지연되고, 영결식장에서 일부 소란이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장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다.

영결식 후 화장(수원연화장)을 하고, 봉하마을 정도원에 안치 한 후 49齋를 올린 후(7.10), 당일 봉하마을 사저(私邸) 인근에 마련된 묘역에서 안장식을 거행하였다. 이 같은 이유는 고인의 유서와 유족의 뜻에 따라 국립묘지가 아닌 사저(私邸) 인근에 유해를 안장하고 행안부(의정담당관실)에서 안장식을 주관하였다.

3) 국장, 국민장 비교

개정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적용 대상과 장례위원에 대한 차이는 없었으나, 장례기간에서는 국장은 9일 국민장은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장례비용에 있어서도 국장의 경우에는 전액 국고부담으로 하나 국민장의 경우에는 일부 국고보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조기계양과 공휴일 지정에서는 국장의 경우, 장례기간 중 내내 조기를 계양하고 당일 관공서 휴무로 정하나 국민장의 경우에는 당일만 조기를 계양하고 공휴일 지정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규정은 최근 개정된 국가장법에서는 대상자 중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례기간 또한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 2-9> 국장과 국민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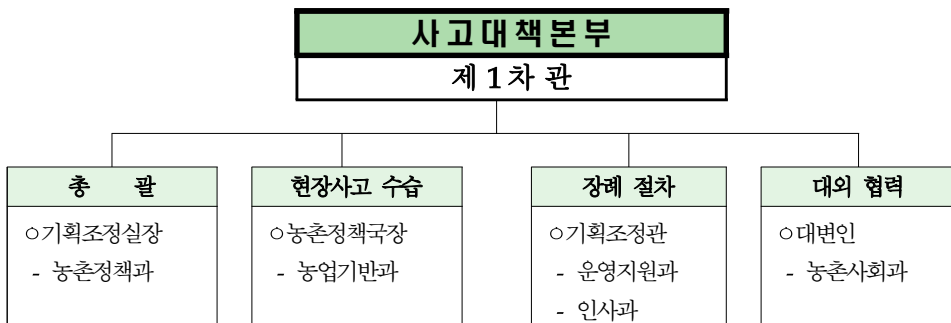
구분	국장(國葬)	국민장(國民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 ·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장의기간	9일 이내	7일 이내
장의비용	전액 국고부담	일부 국고보조
조기게양	장의 기간 중 게양	당일만 게양
공휴일지정	당일 관공서 휴무	없음
장의위원회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 · 부위원장·고문 : 위원장이 위촉 · 위원 : 장의집행에 필요한 위원을 위원장이 위촉 · 집행위원 :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비고	주무부장관 제청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나. 정부기관葬 사례

1) 농림수산식품부장

농림수산부는 2010년 3월 26일 저녁 9시 경 충남 태안군 남면 소재 ‘별주부 마을’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직원 7명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장 수습을 위해 27일 새벽 농촌정책국장이 현장에 급파되었으며, [그림 2-1] 과 같이 본부에 상황실(사고대책본부장 : 제1차관)을 설치하여 사고를 수습하였다.

[그림 2-1] 농림수산식품부의 사고대책본부 구성



당시 구성되었던 장의위원회의 장의위원장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맡았

으며, 장의위원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민승규, 제2차관 하영제, 기획조정실장 양태선, 식품산업정책실장 박현출, 수산정책실장 임광수, 통상정책관 유병린을 임명하였다.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아래 농림수산식품부 각 국장을 집행위원으로 두어 설치하였다.

시신은 태안보건의료원에 안치하였으며 3월 27일 오후에 서울 일원동 소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였다. 영결식은 3월 29일 월요일 오전 7시 삼성서울병원 합동영결식장에서 거행하였다. 영결식에서는 장의위원장인 장태평 장관이 영결사를 낭독하였고, 평소 절친했던 동료 직원 3명의 추도사가 있었다. 영결식의 순서는 아래와 같았다.

* 개식 → 묵념 → 유족대표 헌화 → 영결사 → 추도사 → 헌화 → 발인

영결식을 마친 후 운구 행렬은 정부과천청사에 8:30경에 도착하여 노제를 거행하였고, 고인들의 영정은 근무했던 지역개발과 사무실에 들른 후 농식품부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진행하였다. 노제 이후 고인들의 운구 행렬은 각 장지로 향하였다.

2) 산림청장 사례

산림청의 경우에는 산불 진화 또는 훈련과정에서 헬기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사망발생시 사고수습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대비하고 있다.

장례처리절차와 담당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1일차

- 시신운구(항공본부 회계계장)
- 영정사진 및 분향소 설치(항공본부 서무계장)
- 접객실 준비요원 지정(해당 항공관리소 서무계장)
 - 접객실당 1인
- 유가족 휴식처 준비(항공본부 서무계장)
- 부의금 접수함 설치 및 접수 담당자 지정(항공본부 서무계장)
 - 부의금 접수함(개인별, 공동), 접수 및 안내공무원 지정(사망자당 2인)

- 유가족 전담요원 지정(항공본부 서무계장)
 - 유가족당 1인(유가족과 가장 가까운 조종사, 정비사 등)
- 병원내 상황실 및 유가족 회의장소 확보(항공본부 혁신계장)
- 사망진단서 10부 발급(해당 항공관리소 서무계장)
- 장례식장 부의금 접수 및 주요인사 목록 정리(항공본부 서무계장)
- 장례식장 조화 목록작성
- 합동분향소 안내요원 배치 5인(해당 항공관리소장)
- 상황실 마련(항공본부 서무계장)

나) 2일차

- 장지협의(항공본부 서무과장)
- 영구차 예약(항공본부 회계계장)
- 화장터 예약(항공본부 회계계장)
- 장지현장 식당예약(항공본부 회계계장)
- 수의 및 관 결정(항공본부 회계계장)
- 영결식장 준비(항공본부 서무계장)
- 화장터 및 노제를 위한 제사음식 협의(항공본부 회계계장)
- 현충원 임시안장 관련 협의(산림청)
-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신청(해당 항공관리소 서무계장)

다) 3일차

- 발인식 및 장지출발
- 장례식 비용 정산(항공본부 회계계장)
- 조의금 내역 및 조화내역 정리(항공본부 회계계장)
- 감사장 송부(항공본부 서무계장)
- 화장비용 정산 및 유골함 구입(항공본부 회계계장)
- 화장장 또는 현충원(임시안장) 유족 및 안내요원 식사장소 선정 및 정산

3) 군인장 사례

가) 육군장

육군장 시행에 대비한 장의실무 지침서로서 발생(별제)에서부터 사후조치까지의 전단계에 걸친 계획·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관련규정 : 육규 122(의식 규정) 되어 있다.

육군장 대상 기준은(제32조) 장교로서 육군 발전에 특별한 공적을 남기고 전사, 순작·사망한 자, 장교·부사관으로 태극 무공훈장 이상의 공훈을 세우고 전사한 자, 천재지변 및 기타 긴급 상황 하에서 다대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순직한 장교·부사관, 역대 참모총장을 역임한 장성, 기타 전사, 순직한 자로서 참모총장이 「육군장」 시행을 인정한 자이며, 육군 일반참모회의 심의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육군장 심의는 사유발생 접수 3시간 이내에 참모차장실에서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일반참모부장(간사 : 인사근무복지처장)을 심의위원으로 두어 시행한다. 심의내용은 육군장 시행여부, 장의위원회 설치, 장의일정, 근조리본 부착, 빈소, 영결식 장소, 장의일정(국방부 훈련 제 894호) 등 장의 제반 사항이 된다.

빈소는 국군수도병원으로 하는데, 이는 주차공간, 경비, 대민접촉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군병원으로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가족 희망시 민간병원을 고려할 수 있다. 장례일정은 육군장 심의시 결정(기준 : 3일장)하며, 연휴(설, 추석, 기타) 사망시에는 연휴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족과 상의하여 결정(4일 이내)한다. 발인은 안장식일 오전 9시에 빈소에서 실시한다.

부고공고는 장의위원장의 명의로 주요 일간지에 1회 공고한다. 부고 통지는 주요 일간지 및 국방일보에 기사화하여 게재하며, 초청대상자는 일정한 서식 또는 가용한 수단(전화, FAX)으로 통보한다. 국방부, 연합사, 합참, 각 군 본부 등은 영명사실 통지를 실시한다.

영결식은 3일장을 기준으로 3일차 오전(10:00 경)에 시행하며 장소는 국군수도통합병원 체육관으로 한다. 안장식은 3일장을 기준으로 3일차 오후(영결식 후 16:00 경)에 대전 국립묘지 현충원 장군묘역에서 실시한다. 삼우제는 안장식일로부터 3일차 오전(11:00 경) 대전국립묘지 현충원 장군묘역에서 가족 주관으로 시행하며 요청 시 필요 물자를 지원할 수 있다. 육군장의 진행절차는 아래 <표 2-10> 와 같다.

〈표 2-10〉 육군장의 진행 절차

순서	내용	시기	책임
1	· 서거내용 보고 · 육군장 심의	내용접수즉시	제대군인지원처장 (예비역협력과장)
2	- 장소 : 참모차장실 - 위원 : 일반참모부장	서거내용보고직후	인사군무복지처장 (인사군무과장)
3	· 육군장 승인 건의 : 국방부	육군장심의후(확정시)	
4	· 유족협의(장의 진행절차)	상황발생직후	전직지원정책과장
5	· 빈소준비 및 장의 지원 · 육군장 상황실 설치/운용	상황발생직후	육군지원부장
6	- 장소 : 빈소(수도병원)/ 인사상황실(가114호)	상황발생직후	
7	· 육군장 계획작성/보고 · 장의 집행위원회 개최	상황발생직후	
8	- 주관 : 인사군무복지처장 - 장소 : 인사회의실(가-114호) - 대상 : 부·실·단 주무과장 - 내용 : 부·실·단별 임무부여/확인	육군장계획 승인 직후	인사군무복지처장
9	- 방문관 : 육군지원부장 - 방문지 : 대전현충원, 영결식/안장식장	협조회의 후	육군지원부장
10	- 작성 : 비서실 - 공고 : 정훈공보처	협조회의 후	비서실장 정훈공보처장
11	· 초청대상 선정/안대장 발송 : 비서실	협조회의 후	비서실장
12	· 빈소대기 및 조문계획 시행	협조회의 후	
13	· 영결식 예행연습(주관 : 참모차장)	영결식 전일	인사군무복지처장
14	· 발인, 영결식, 안장식	당일	
15	· 장의 결과보고	장례식 3-5일후	

나) 공군장

공군 본부 또한 사망자 발생시 장의행사를 신속하고 엄숙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부터 사후조치까지 전 과정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관련 근거는 대통령령 제17158호('01. 3. 27) 군 예식령, 국방부훈령 제1239호('10. 4. 2) 부대관리 훈령, 국방부훈령 제1077호('09. 7. 29)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공규 2-49('09. 3. 5) 전공사상자 및 영현처리, 공규 2-51('10. 7. 1) 공군 의전행사가 있다.

장의행사는 「군 예식령」 제117조에 따라 군인이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행한다. 장의행사는 국군葬, 공군葬, 부대葬 및 가족葬

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장격은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장의 일정은 3일장 또는 5일장으로 한다.

「군 예식령」 제117조에 따른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자’는 다음과 같다.

- 전투에 참여하여 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자
- 천재지변 및 기타 위급한 상황에서 많은 인원을 구한 자
- 그 밖에 장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공군장의 진행절차는 〈표 2-11〉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11〉 공군장의 진행 절차

순서	구분	내용	비고
1	사고(사망)내용 접수 및 보고	○ 사망자 인적사항 ○ 사고 개요 및 상황 파악	참모총장 부 대 장
2	사고 현장지원단 운영	○ 운영여부 결정 : 참모차장 ○ 출동명령 : 인사참모부장	
3	유가족 통보	○ 시기 : 사고발생 2시간 이내 ○ 담당 : 사망통보담당관	정복착용 방문통보
4	장례절차 협의(유가족)	○ 공군/부대葬 시행여부 ○ 장의일정, 빈소 및 영결식 장소 장의비용 사용계획 등 * 사고현장 지원단에서 임무 수행	인사참모 부 서 장 주임원사
5	장격 결정 심의 및 보고	○ 공군葬 : 참모총장→국방부(보고) ○ 부대葬 : 지휘관이 결정	인사참모부 부대인사처
6	장의행사 계획 작성 및 보고	○ 빈소설치/운영, 조문, 영결식 안장식 등	보훈/급여과 사고발생부서
7	장의위원회 구성 및 장의집행위원회 편성/회의	○ 장의위원장 - 공군葬 : 참모총장 - 부대葬 : 지휘관 ○ 장의집행위원장 - 공군葬 : 참모차장 - 부대葬 : 부지휘관	종합상황실
8	장의상황실 설치/운영 및 예산집행	○ 공군葬 : 인력기획처 ○ 부대葬 : 사고발생 대대(부처)	
9	빈소 설치/운영	○ 장소 : 유가족과 협의한 장소 ○ 내용 : 제단설치, 영정, 위패, 훈장, 향로, 촛대 비치	집행위원
10	발 인 제	○ 부대葬은 생략	행정참모
11	영 결 식	○ 지정장소	행정참모

〈표 2-11〉 공군장의 진행 절차(계속)

순서	구분	내용	비고
12	화 장	○ 일시 : 사전 예약시간 ○ 장소 : 지역 시립 화장장	집행위원
13	안 장 식	○ 대상 : 공군葬 시행자 ○ 장소 : 대전 현충원 * 부대葬 시행자 : 합동안장식	인사참모부 대전현충원 (의전팀)
14	결산 및 결과보고	○ 일시 : 장례 후 3일 이내 ○ 담당 : 인사/관리참모	

군 복무당시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전역 및 면역한 자가 사망한 경우 葬 의식 결정 권한자가 정한 바에 따라 장의행사를 행한다. 장의행사 기준은 다음 〈표 2-12〉과 같다.

〈표 2-12〉 군인장의 장의행사 기준

장 격	대 상	비 고
국군葬	○ 국가변영에 비범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과, 국군에 귀감으로 추대된 전사·순직 장병	국방부장관에게 건의/승인, 시행
공군葬	○ 참모총장을 역임한 자 ○ 군 복무중 공군발전에 특별한 공적을 남기고 전사·순직한 자 ○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사망한 자 ○ 천재지변 및 기타 위급한 상황에서 다대한 인명한 재산을 구하고 순직한 자 ○ 기타 전사 또는 순직한 자로서 참모총장이 공군葬으로 거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공군 장례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 보고 후 시행
부 대 葬	공군본 부葬 ○ 고인이 공군본부 소속인 자로서 • 전투 또는 비행임무 수행 중 전사 및 순직한 자 • 고인의 전사 또는 순직이 공군 전반에 걸쳐 깊은 애도의 대상이 되는 자 • 공적기준이 공군葬을 거행하기에는 다소 미달되는 자 • 기타 전사 또는 순직자로서 각 부서장이 공군본부葬으로 거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장례위원회 심의/결정 후 시행 • 장군 : 참모차장 • 기타장병 : 부·실장

〈표 2-12〉 군인장의 장의행사 기준(계속)

장 격		대 상	비 고
부 대 대 장 부 葬	사령부 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인이 사령부 소속인 자로서 • 전투 또는 비행임무 수행 중 전사 및 순직한 자 • 고인의 전사 또는 순직이 공군 전반에 걸쳐 깊은 애도의 대상이 되는 자 • 공적기준이 공군葬을 거행하기에는 다소 미달되는 자 • 기타 전사 또는 순직자로서 각 부대(서)장이 사령부葬으로 거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사령부 장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령관이 결정 후 시행
	단 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인이 단급부대 소속인 자로서 • 전투 또는 비행임무 수행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자 • 고인의 전사 또는 순직이 공군 전반에 걸쳐 깊은 애도의 대상이 되는 자 • 공적기준이 사령부葬을 거행하기에는 다소 미달되는 자 • 기타 전사 또는 순직자로서 각 부대(서)장이 단葬으로 거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부대 장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장이 결정 후 시행
	전대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인이 전대 소속인 자로서 • 고인의 전사 또는 순직이 소속부대 전반에 걸쳐 깊은 애도의 대상이 되는 자 • 고인이 군 복무시 부대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적을 남긴 자 • 공적비중이 상위 장격으로 거행하기에는 다소 미달되는 자 	부대 장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대장이 결정 후 시행
	대대(대) 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인이 대대(대) 소속인 자로서 • 위 각 장격 기준에 해당되나 그 공적비중이 상위 장격으로 거행하기에는 다소 미달되는 자 	부대 장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대장이 결정 후 시행
	가족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군 장의행사 시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족이 가족장으로 시행하기를 요청한 자 	부대 장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대장이 결정 후 시행

다) 경찰청

경찰은 장례식의 종류·절차 등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경찰의식규칙 내 장례식과 관련된 미흡한 부분 보완을 위하여 편람을 마련하였으며, 순직자를 최대한 예우하는 장례식을 치러, 유가족 위로 및 경찰 정신을 함양한다.

장의 편람은 경찰葬과 경찰관서葬(경찰청葬·지방경찰청葬·경찰서葬 등) 경찰기관이 주관하는 장례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자 작성되었으며, 장례식의 흐름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 결정단계 : 순직보고 → 관계관 회의 → 장례식 결정

- 준비단계 : 장례위원회 구성 → 실무작업단 편성 → 집행계획 수립
- 진행단계 : 발인제 → 영결식 → 화장 → 봉안식 → 안장식

장례식의 종류는 경찰의식규칙 제64조에 따라 경찰葬, 경찰관서葬(경찰청葬, 경찰대학葬, 경찰교육원葬, 중앙경찰학교葬, 경찰수사연수원葬, 지방경찰청葬, 경찰서葬, 기타부대葬 등)으로 구분한다. 장례식에 대한 결정권 및 주관은 경찰의식규칙 제 65조에 따라 경찰葬은 경찰청장이, 경찰관서葬은 각급 경찰관서 지휘관이 결정하고 장례식을 결정한 지휘관이 행사를 주관한다. 장례식 거행기준은 경찰의식규칙 제 67조에 따라 아래와 같다.

(1) 경찰葬

- ① 경찰발전에 특별한 공적을 남기고 전사·순직·사망한 자
- ② 상훈법에 따라 태극무공훈장 또는 그 이상의 훈장의 공훈을 세우고 전사한 자
- ③ 천재지변, 기타 긴급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순직한 자
- ④ 기타 전사 및 순직한 자

(2) 경찰관서葬

- ① 경찰발전에 특별한 공적을 남기고 전사·순직한 자
- ② 상훈법이 따라 을지무공훈장의 공훈을 세우고 전사한 자
- ③ 천재지변, 기타 긴급 상황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순직한 자
- ④ 기타 전사 또는 순직한 자

장례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기관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약간인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전직 인사 등 약간 인(생략 가능)이 고문, 위원은 고인 직급의 동급 이상 관련 공무원으로 위촉한다. 집행위원은 사실상 장의절차를 추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중간 관리 자급으로 임명한다.

편람에 의하면 장의공고는 경찰청 통신망, 중앙 또는 지방일간지, 인터넷 신문 등을 이용하며 빈소에 대해서는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조객안내(접대), 조문록 비치, 장 의사 연락 등 필요한 사항을 유족과 협의하여 지원한다. 영결식은 흑백 단색으로 장식·설치하고, 제단은 흰색 천으로 덮어 경건하고 애도의 분위기 조성하며, 기타 순식부터 안장까지 장 의식 절차 및 집행단계별 일반적인 준수사항과 의식 집행요령 등을 매뉴얼화 하였다.

다. 지방자치단체장 사례

1) 의정부시

2011년 1월 16일 구제역 방역작업중 과로로 순진한 고 원영수 사회복지사무관의 영결식을 의정부시葬으로 거행.

○ 장의 위원회 구성

- 위원장: 시장
- 부위원장: 부시장
- 위원: 8명(국, 소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의회사무국장

○ 영결식

- 일시: 2011. 1. 18(화) 09:00
- 장소: 시청내 좌측주차장(도시·세무 민원실앞)
- 참석대상: 장의위원, 유족,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부고장 인편 전달), 각급기관 단체장, 직원 및 시민
- 부고장 발송: 관내 기관장(수요회원)(동충무를 통해 전일 전달), 직원(새올게 시판에 게시)

2) 남해군

2010년 남해군에서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다 지병으로 돌아가신 故김영태 전 군의회 의장이 군민葬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관부서인 행정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가) 지원개요

- 기 간 : 2010. 12. 31(금) ~ 2011. 1. 3(월) (4일간)
- 대 상 : 고 김영태 전 군의회장
- 지원내용
 - 지원체계 구축 : 장의위원(운영위원), 집행위원 구성 운영
 - 영결식 개최
 - 빈소 방문객 접견 인력 배치 등

<장의위원회 구성>

- 일시 및 회의개최 : 2010. 12. 31(금) 11시(군수실)
 - 군민장 결정 * 회의록(별지 참조)
 - 10명 위원중 9명 참석 의안으로 의결(불참 남해경찰서장)
- 장의위원 구성(10명)
 - 위원장 : 군수
 - 부위원장 : 군의회 의장
 - 위원 : 도의원, 남해경찰서장, 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남해문화원장, 농협중앙회 군지부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 청실회장, 한호식 군의원
- 관장사항
 - 영결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지출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장의 운영위원회 구성>

- 일시 : 2010. 12. 31(금)
- 운영위원 구성
 - 전 군의원, 각급기관단체장(기관장협의회 포함) 등
- 관장사항
 -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보조
 - 유족 지원 및 협의
 - 군민여론을 장의절차에 반영 등

<집행위원회 구성>

- 일시 : 2010. 12. 31(금)
- 집행위원 위촉
 - 위원장 : 부군수
 - 위 원 : 전 실과소장
- 관장사항
 -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
 - 유족 측과 협의, 장례지원 등

내) 빈소 지원

- 기간 : 2010. 12. 31(금) ~ 2011. 1. 3(월, 4일간)
- 장의위원 합동 조문
 - 2010. 12. 31(금) 15시
 - 군수, 군의회의장, 군의원, 각급기관단체장(장의위원)
 - 장례절차 협의, 위문 및 격려 등
- 역 할
 - 방문객 접견 및 안내
 - 장례기간 중 1일
- * 일자별로 기관단체 책임 지원체제 구축(붙임 참고)

다) 영결식 개최

- 일 시 : 2011. 1. 3(월) 09시 예정
- 장 소 : 군청광장
- 참석범위
 - 유가족, 지인 등
 -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 직원
 - 군의회의원, 각급기관단체장 등 200여명
- 진행순서
 - 개식→국기에 대한 경례→목념→약력소개→조사(군수)
→추도사(군의회의장)→헌화→폐식→영정순회(군의회)
- 시간계획

시 간	소요 (30분)	내 용	비 고
09:00~09:01	1'	개 식	
09:01~09:02	1'	국기에 대한 경례	
09:02~09:03	1'	고인에 대한 목념	
09:03~09:06	3'	약력보고	
09:06~09:10	4'	조 사	군수
09:10~09:13	3'	추 도 사	군의회 의장
09:13~09:15	2'	추 도 시	지인(청실회 등)
09:15~09:23	10'	헌 화	유족→군수→군의장→군의원→기관단체장→부군수 → 실과소장·읍면장, 남해마늘연구소장→직원
09:23~09:24	1'	폐 식	
09:24~09:30	6'	영정순회	군의회

○ 준비사항

구 분	내 용	담 당
식장준비	○ 헌화용 국화 : 400송이 ○ 현수막 1매 ○ 헌화탁자	후생복지단체팀
좌석배치	○ 의자 : 100개(회의실용) ○ 발언대, 사회대	후생복지단체팀
차량통제	○ 군청광장 주차통제	후생복지단체팀
방송시설	○ 앰프 및 마이크	홍보팀

제2절 주요 선진국의 사례분석

이 절에서는 선진국가 중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葬의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조사 범위는 기관葬의 실시 배경과 시점, 기능, 주관부서의 역할, 기관葬 운영의 어려움, 구체적 활동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리고 조사 방법은 인터넷 자료와 국내 도서관 등에서 수집 할 수 있는 국외 문헌을 검토한 후 이를 번역하여 요약하였다.

1. 미국

미국의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¹⁾에서 발행된 ‘2009년 미국의 소방관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에 있는 소방관의 수는 어림잡아 1,148,10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들 중 실제 소방관은 335,950명으로 소방관 전체 인원 중 29%를 차지하며, 나머지 812,150명인 71%는 자원봉사 소방관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자원봉사 소방관들 중에서 현직 소방관을 은퇴한 후 소방관으로 다시 봉사에 나선 이들도 있으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사회의 봉사차원에서 화재나 위급사항 등이 발생할 때 소방관 역할을 수행하며 무보수로 활동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 중에 매년 평균적으로 약 111명 정도가 순직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순직한 소방관은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82명이다. 이들은 직종의 특성상 사회를 위하여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때로는 생명까지 걸면서 구조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순직한 소방관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최대한 예우를 다하고 있다. 지금부터 이러한 예우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 순직한 미국 소방관들의 장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²⁾

우선, 기관葬의 흐름에 앞서 이들이 평상시 준비해 두고 있는 점검사항이 있는데,

- 1) NFPA는 1896년 설립된 비영리, 회원제 국제기관으로서 미국 매사추세츠주 퀸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100년 이상 화재예방과 안전을 주창해오면서 화재 안전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 세계 100여 개 국을 대표하는 65,000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무엇보다 NFPA의 임무는 화재안전교육, 조사연구, 과학에 기초한 컨센서스(Consensus)화재코드 및 표준을 제정하고 제공하여 전 세계인의 화재로 인한 위험과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 2) 미국의 사례는 몇몇 주에서 발행된 ‘a line of duty death(LODD)’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혹은 매뉴얼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이것을 사전 사고 대비 계획(pre-incident planning)이라고 한다. 이런 계획 따라 소방관에 대한 몇 가지 사전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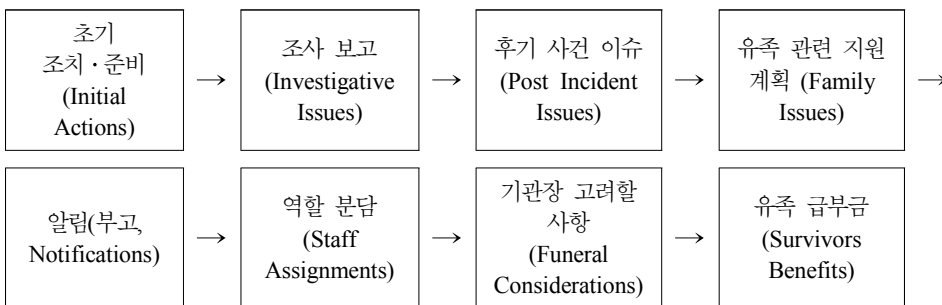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집(personal information packets)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기관에 소속된 모든 소방관의 개인적인 정보를 평상시에 수집·준비 해 두는 것이다. 이 개인정보집에는 비상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명부와 전화번호, 그리고 사진, 일반적인 개인적인 요구사항 및 장례 사전 계획, 경력 정보 등에 대해서 상세히 담겨져 있다. 또한 이 파일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두 번째로 관리 운용 규정(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이 있다. 이것은 알림(부고)에 대한 대응과 언론 홍보에 준비사항, 인력 자원의 배치 문제라든지 실제 기관葬 뿐 아니라 소방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다양한 문제 사항들의 해결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

세 번째로 각종 장례에 필요 장례용품 준비가 있다. 이것은 소방관 개인의 직급에 맞게 유니폼이라든지 각종 용품을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면 예식에 사용되는 상장(mourning bands)이라든지 예식장갑(gloves), 국기(flags)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아이템을 평상시에 준비를 해 두었다가 이후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활용하여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이제부터 미국 소방관이 순직하였을 때 전반적인 기관葬 흐름을 알아보기로 한다. 전체적인 기관葬의 흐름은 [그림 2-2] 와 같다.

[그림 2-2] 정부기관장의 흐름



가. 초기 조치·준비(initial actions)

초기 조치·준비(initial actions)는 소방관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순직을 할 경우에 대해서 초기에 충분한 대응을 하기 위한 행동들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지침으로서는 사건의 나머지 것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수습 과정에 대한 언론 보도가 뒤따르게 되는데, 이때 언론에 대처 할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자료 구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보관(public information officer)을 임명한다. 공보관은 일정한 상황이나 정보를 알리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정보 공개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미리 스크립트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기관葬에 대한 기자 회견 일정을 잡아야 한다.

또한 부고와 관련된 알림이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순직한 소방관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한다. 이는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소방서 소방관 및 직원들과 시장과 이사회, 부검이 필요하다면 검시관 등에게도 알려야 한다. 다음으로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조사팀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 지원 기관에 연락을 취한다. 예를 들면 주 소방 연방 사령부라든지, 주의 조합이라든지 조직, 그리고 다른 부서들에게 연락을 취한다.

나. 조사 보고(investigative issues)

다음 단계는 조사 보고(investigative issues)이다. 이 단계는 초기 조치 및 준비 사항에서 이뤄졌던 조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행하게 된다. 이때 혹시 모를 범죄의 가능성 여부까지 조사하게 된다.

우선 안전한 현장을 유지하도록 한다. 법 집행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으며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범죄 행위와 관련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즉, 조사 보고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사건의 경위라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 사건 사고를 조사 분석하게 된다. 조사 분석 이후에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 발행을 하고, 기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후기 사건 이슈(post incident issues)

다음으로는 후기 사건 이슈(post incident issues) 단계이다.

이때에는 유족이나 순직한 소방관 혹은 장례를 위임 받은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장례나 추모를 계획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모든 소방부서와 관련 있는 도움, 식사, 아이들 돌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방부서는 유족 연락망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며, 필요시에는 소방서의 멤버들이나 관련 공무원과도 연락을 계속 유지한다.

또한 현지 법 집행 당국과 연락을 취하여 유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장례식이 거행 될 때 교통 통제라든지 각종 행정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부서의 멤버들은 가까이에서 혹시 모를 미비점들을 관리 감독한다. 필요하다면 각종 관련 상담들 역시 제공한다.

라. 유족 관련 지원 계획(family issues)

유족 관련 지원 계획(family issues)단계는 어떻게 유가족을 지원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때 고려할 사항은 병원 또는 시신 보관소(병원 내 시신 안치실)에 관한 지원 사항과 임종부터 시작하여 장례식까지의 지원 사항, 그 밖의 계속적인 지원 사항(ongoing support)이다.

첫 번째로 병원 또는 시신 보관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족이 병원 또는 가정으로 움직이는데 차가 필요할 경우 차량을 지원한다. 병원에 협조를 구하여,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개인 공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장소는 가능하면 평소의 일반적인 장소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병원과 유족이 협의하는 과정을 도와준다. 필요하다면, 부서의 응급치료사에게 병원 협의 관계에 대해서 도움을 청한다. 친인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족들과 함께 언론에 대한 대응을 함께 논의한다. 경우에 따라서 장기적인 입원(간호)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일 발생하는 집안일들에 대해서 지원 및 도움을 한다. 만약 소방관이 관내가 아닌 관외의 전문 병원으로 후송될 경우 이에 대한 필요 사항들을 도와준다. 무엇보다 부상과 상관없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다.

두 번째로는 임종부터 시작하여 장례식까지의 지원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망에 대한 법무부에게 보고한다. 이것은 PSOB(public safety officers' benefits) 프로그램에 대한 적격 심사를 위한 것이다. 사망에 대해서는 NFFF(national fallen firefighters foundation)에 문의를 하며, 자원 봉사 소방관 관련 펀드에 대해서는 주 소방 사령부(state fire marshal's office)에 문의한다. 또한 기타 관련 도움은 노조나 기타 관련 기관에게 요청한다. 그리고 장례식 계획 시에는 유족과 함께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유족들이 개인장(葬)을 원할 경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약 순직한 소방관의 가족 중 자녀가 있는 경우 장례 행렬 때 소방차를 타고 행렬에 합류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을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사전에 부모와 협의 후 결정한다. 그리고 청소, 음식 준비 등 가사 도움뿐 아니라 보육, 잔디를 깎는 것 등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한다. 유족을 위한 기부금이 모일 경우 지원금 입금은 은행 계좌를 통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항상 소방서의 전통보다는 개인의 종교와 관련된 의식이 선행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유족을 도와야 한다.

세 번째 그 밖의 지속적인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한다. ‘필요하면 연락하세요’란 말보다는 구체적인 작업에 대한 도움을 드린다는 식의 표현으로 ‘나는 울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요일에 찾아오고 싶다’라는 식의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소방관의 추억에 대해서 유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유족들은 고인의 소방관 생활 얘기 등을 듣길 원한다. 또한 순직한 소방관이 무엇을 하곤 했는지 알아본 후 이를 도와준다. 예를 들면 앞 뜰 관리라든지 집 주변을 보수한다든지, 아이의 스포츠나 학교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등이 있다. 부서의 행사에 유족을 초대하고, 그들이 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초대를 시도해 본다. 공휴일과 고인의 기일이 같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유족들이 힘들어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잘 지내고 있는지 가족 지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사고 조사 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유족과 접촉한다.

마. 알림(부고, notifications)

그 다음 단계는 알림(부고, notifications)이다. 이 단계는 유족, 친인척들과 소방서 관련 부서들, 언론매체에 부고를 띄운다.

우선, 주요 유족 및 친인척들에게 사망 소식을 알리는 것의 중요성은 충분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중상이나 사망자에 대한 이름을 가족이 알기 전에 동료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하며, 주변 이웃들 역시 이 사실을 먼저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최대한 신속히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유족들의 원치 않는 언론 매체 노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사전에 조치한다. 이러한 이유로 부고를 알릴 때 수석(가장 높은 직급), 가족 연락 담당관, 가족과 가까운 가족 친구의 소방관 등으로 구성하는 게 낫다.

또한 유족들이 고인을 보고 싶어 할 때 고인의 형체가 많이 훼손이 되었을 경우 유족에게 조심히 물어 보아야 유족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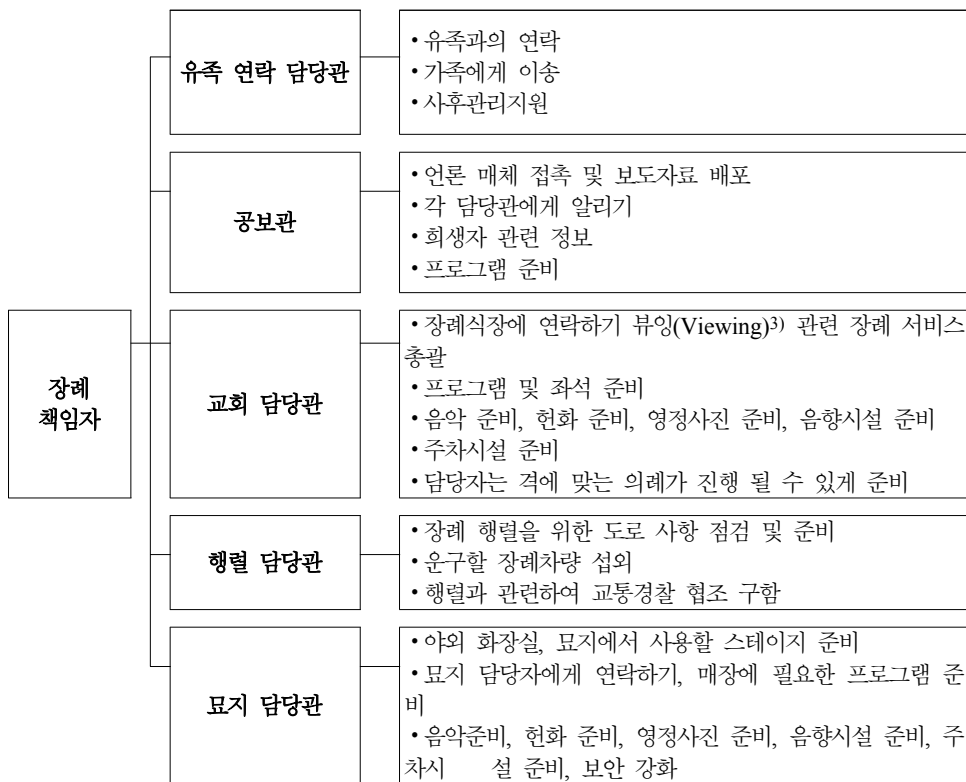
다음으로 부서 관련 동료들뿐 아니라 당일 비번인 소방관들에게 가능한 빨리 알린다. 이때 LODD(line-of-duty-death) 메모를 써서 보낸다. 이 메모의 내용은 현재 소방관 아무개가 사고로 사망하였고, 그 사건 경위를 현재 철저하게 조사 중이며, 만약 본인에게 어떠한 임무가 주어지면 성실하게 수행해주길 바란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리고 본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사건에 대한 원인 및 자세한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와, 소방관의 직무라든지 메시지 및 준비사항들 정도만 포함한다. 다음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알림이 있는데, 언론의 특성상 화재꺼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에 기자들은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필수적인 사항 및 허락된 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사에 방해가 되는 행동들을 삼가고, 그러한 정보는 제공하면 안 된다. 공보관은 기자 회견, 보도자료 작성 및 인터뷰를 할 수 있다. 보도 자료는 사진이라든지 정보, 그 밖의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

바. 역할 분담(staff assignments)

다음 단계는 역할 분담(staff assignments)이다.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부서와 관련 모든 활동들이 유기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래 [그림 2-3] 와 같이 역할 분담이 이뤄지게 된다.

[그림 2-3] 역할 분담



장례식에서 총 지휘는 장례 코디네이터⁴⁾가 한다. 이 코디네이터와 함께 일하는

3) 뷰잉은 ‘리뷰얼(Reviewal)’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고인을 접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관 전·후에 고인 접견을 잠시 동안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장례 절차 중 가장 큰 항목이며, 장기간동안 행한다.

4) 장례 코디네이터(Funeral Coordinator)와 장례지도사(Funeral Director)는 어떤 상관관계 및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사람들에는 유족 연락담당관, 공보관, 교회 담당관, 행렬 담당관, 묘지 담당관이 있다.

장례 코디네이터(funeral coordinator)는 말 그대로 유족의 가족 심리 치료 후 본격적으로 장례를 준비하게 될 때 함께 참여하여 장례에 전반적인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이때 장례 코디네이터는 필요하다면 주요 인사와 함께 미팅을 갖으며, 모든 비번이나 휴가자들에게 이를 알린다. 게시물이나 식사 등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리고 해당 부서 담당자들과 긴밀히 협조해가며 지원 사항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 연락 담당관(family liaison officer, FLO)은 규정에 따라서 연락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유족 및 필요한 사람, 기관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24시간 이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장례 및 각종 행정 처리를 위하여 유족 및 관련 기관에게 각종 증명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지역 보험 혜택이라든지 연금, 퇴직금 혹은 국가 교육 혜택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위해 각종 증명 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공보관의 역할은 대외적인 홍보와 관련된 일을 맡게 된다. 언론에 기사에 대한 인터뷰는 물론 기자회견도 가능하며 모든 매체와 접촉한다. 교회 담당관(church coordinator)은 교회에서의 장례식 및 추모식의 모든 서비스 단계를 지원한다. 미국의 장례식장 대부분이 채플(chapel)에서 고인 접견(viewing)과 함께 이뤄지게 되기 때문에 교회 담당관은 유족의 희망사항들이 잘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게 된다. 그리고 장례식의 좌석 배치, 조사(종교 의식의 기도로 대처함), 음악 등도 준비하게 된다. 또한 도착한 소방관들의 좌석 배치나 유족 및 친구들을 지원하게 된다.

다음으로 행렬 담당관(procession coordinator)의 경우 교회에서 장례식을 마치고 난 후 묘지로 이동하는 과정들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예를 들면, 차량배치와 행로 결정이라든지 교통상황 파악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묘지 담당관(cemetery coordinator)은 행렬이 도착하게 되면 묘지에 관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묘지 담당관은 묘지에서의 적절한 좌석 배치뿐 아니라 묘지를 조성하는데 관련 인력 섭외라든지 각종 예식 절차들을 챙기며, 사후 장례 모임 등에 대해서도 공지를 한다.

그밖에도 의장대(honor guard)의 역할이 있다. 일반적으로 흰색 예식장갑과 적절한 유니폼을 입고서 장례식뿐 아니라 묘지에서 행렬들을 호위하게 된다. 그리고 관을 메는 사람(pallbearers)들이 필요하다. 보통 관의 무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개 6~8명의 인원이 소요된다. 기수 혹은 군대의 위병(color guard)는 미국 국기와 주 국기가 함께 예식에 맞춰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사. 기관葬시 고려할 사항(funeral considerations)

다음에는 절차는 기관葬시 고려할 사항(funeral considerations)이다.

우선 장례식에 관해서는 유족이 결정하여야 하고, 유족의 원하는 것을 말하면 그것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순직 소방관의 등급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원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오하오주 같은 경우 3가지 타입으로 구분을 하였다.

타입1의 경우는 근무 중 일어난 사고라든지 임무와 관련된 결과로서 운명했을 때 행하게 된다. 타입2의 경우에는 비번일 때라든지 응급 사항이 아닐 때 발생한 결과로서 운명했을 때 행하게 된다. 타입3의 경우에는 소방관의 퇴직자로서 운명했을 때 행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장례식에 지원되는 사항은 〈표 2-13〉을 참조한다.

〈표 2-13〉 장례식에 지원되는 사항

선택사항	타입1	타입2	타입3
미국 국기(성조기)	○	○	○
벤티 상장	○	○	○
백파이프/군악대	○	옵션	옵션
벨 서비스	○	○	○
나팔수	○	×	×
기수(위병)	○	×	×
대형 사다리 차를 이용하여 양쪽에 성조기를 매달아 그 밑을 지나가게 하는 예식(Crossed Ladders)	○	×	×
조사	○	○	○
소방차 행진	○	×	×
소방관 깃발	○	○	○
꽃장식	○	○	×
의장대	○	○	○
의장의 세부 임무를 맡은 사람들	○	○	×
관 운구	○	○	○
무대 번팅(장식의 일종)	○	×	×
장의차 번팅	○	○	×
함께 행렬	○	○	○

반면 국가의용소방의회(national volunteer fire council, NVFC)는 오하오주와 달리 6가지로 그 등급을 세분화하였다.

타입1의 경우 근무 중 정신적 외상이나 건강상태의 빠른 악화로 고통 받은 경우를 말한다. 타입2의 경우 근무 중 건강상의 점진적인 악화로 고통 받은 경우를 말한다. 타입3은 빠르고 점진적인 건강상의 악화와 정신적 외상을 포함하는 근무 외의 사고의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타입4의 경우는 현직, 과거 직원의 죽음 즉, 현재 활동하고 있거나 좋은 상태에서 퇴직했고, 사망을 초래한 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자원단체나 부서의 직원인 경우이다. 타입5의 경우는 부서의 가입 즉, 위원, 국장, 배차원과 같은 부서의 자격으로 일한 사람 그리고 위 기준에 충족하지 않지만 죽음으로 초래된 사건으로 고통 받는 직원의 경우이다. 타입6⁵⁾의 경우는 고용, 자원봉사협회, 전문 혹은 감정적 유대를 통해 소방관 아닌 개인이 죽음을 맞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 타입4부터 타입6까지는 선택적이며 부서 정책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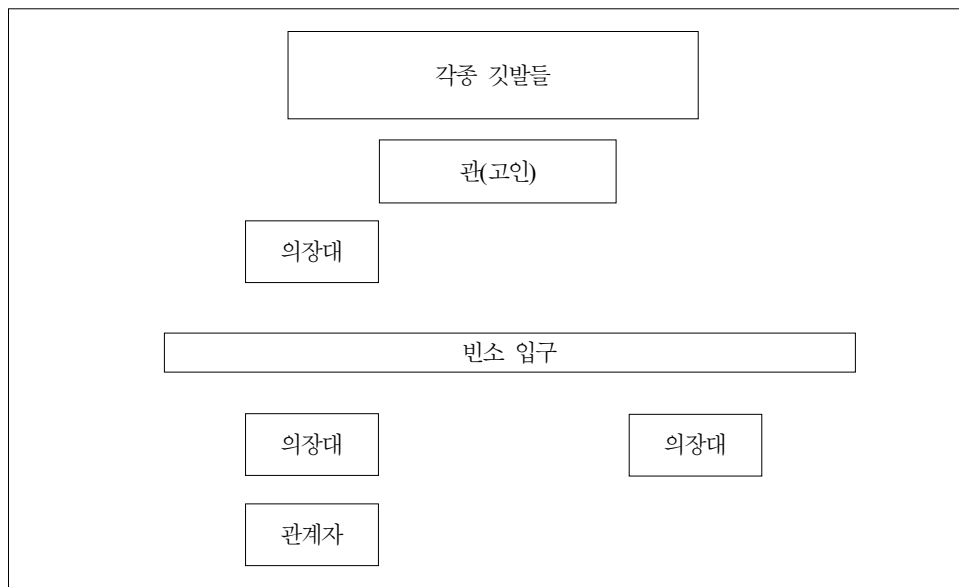
5) 비공식적 기관장의 장례식의 경우에는 최고 수준의 유니폼의 장례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이는 등급 타입 6에 해당된다. 반면 개인의 장례식의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일반적인 장례식인 만큼 보통 가족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미국 소방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실행하는 장례식 종류가 네가지 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빈소 운영이며, 교회에서의 운구 및 영결식 그리고 묘지에서 진행되는 하관식 정도이다. 이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르지만 개인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될 수 있다. 유족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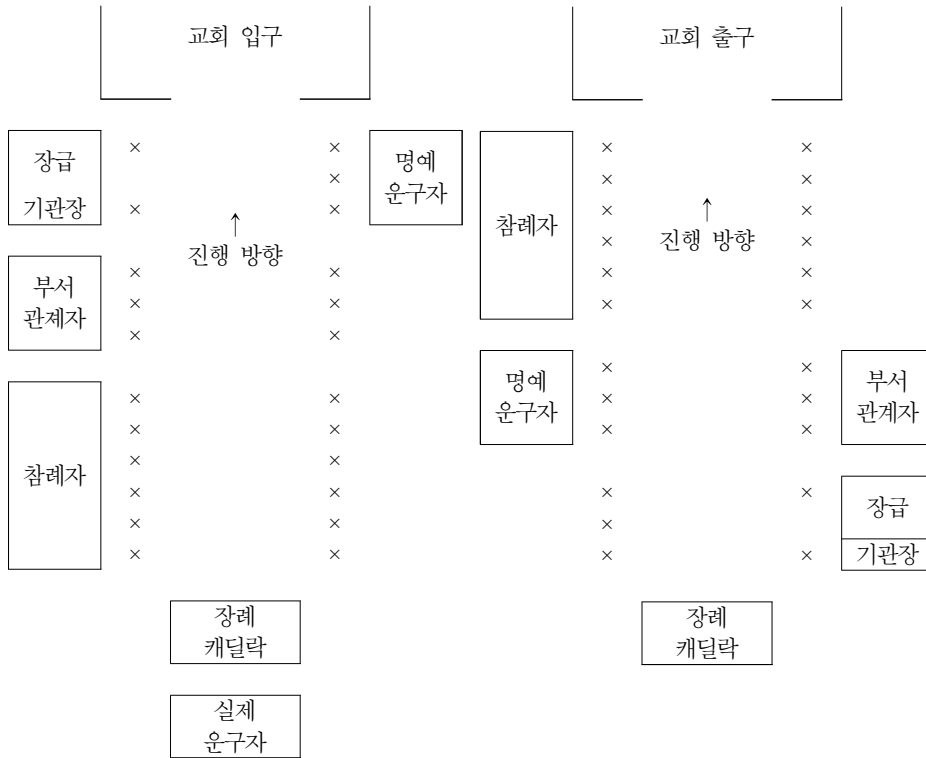
기관葬을 행할 때의 각종 설정들을 도식으로 표현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빈소운영에 대한 내용인데, 빈소가 마련이 되면 의장대는 빈소의 안과 밖에서 문상객이나 고인에 대한 장례 예절을 행하게 된다. 그리고 빈소 밖에서는 관계자인 유족 뿐 아니라 기관 관련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어 문상객을 맞이하게 된다. 빈소 중앙에는 관인 위치하게 되며, 각종 깃발은 관 뒤로 놓이게 된다. 이것은 기본적인 위치를 나타내며, 세부적인 사항은 그 상황에 맞게 추가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그림 2-4] 빈소운영과 같다.

[그림 2-4] 빈소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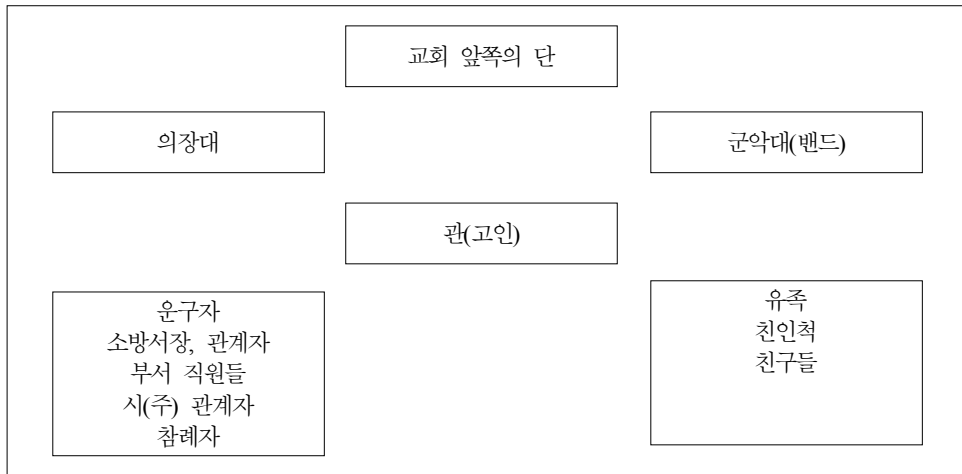
[그림 2-5] 교회 밖에서의 운구 위치



[그림 2-5] 은 교회에 도착 했을 때에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 교회에서의 운구 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들어 갈 때에는 교회의 입구(문)를 바라보고 왼쪽에는 기관의 長과 부서관계자들이 위치한다. 그 뒤편으로는 참례자들이 선다. 반대편 오른쪽은 명예 장례위원이나 운구자가 함께 선다. 그리고 중앙으로는 관과 실제 운구자들이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그 위치한 사람들 사이 중앙으로 관과 실제 운구자들이 관을 운구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반대로 나올 경우 출구의 왼쪽 편에는 참례자와 그 앞으로 명예운구자들이 위치하며, 오른쪽에는 부서관계자 및 장급 혹은 기관장이 위치한다. 이들 사이 중앙으로 다시 관을 운구한다. 즉, 대열에선 사람들 사이로 관이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교회 밖에서 관을 운구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의 장례식 위치는 [그림 2-6]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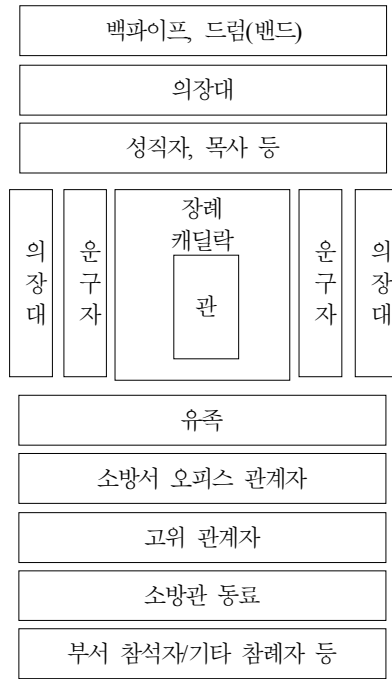
[그림 2-6] 교회 안에서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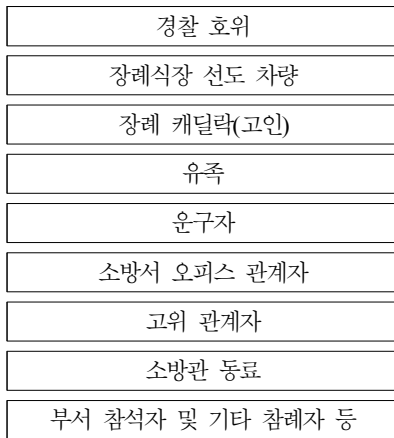
교단을 향하여 고인은 중앙에 위치한다. 그리고 양 옆으로 의장대와 군악대가 위치하여 장례 행사 진행에 도움을 준다. 고인을 바라보고 왼쪽에는 앞쪽부터 운구자, 소방서장 및 관계자, 부서직원들이 차례로 앉는다. 그리고 시 혹은 주 관계자들과 참례자들이 그 다음 열에 차례로 위치한다. 그 반대편에는 유족과 친인척 그리고 친구들이 위치한다. 이러한 좌석위치는 고인과의 친분이 두터울수록 고인과 가까운 자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장례행렬 [그림 2-7] 과 차량을 이용한 묘지 이동시 장례행렬 [그림 2-8]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7] 장례 행렬



[그림 2-8] 차량을 이용한 묘지 이동시 장례 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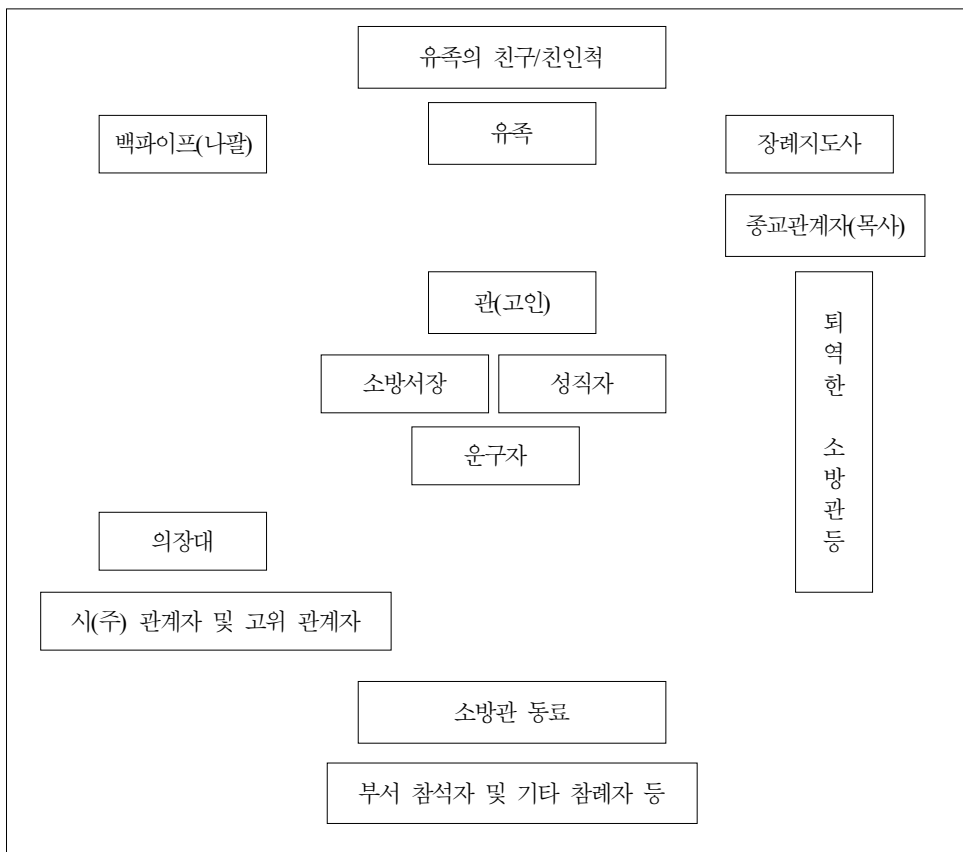
행렬에 앞쪽에는 호위 및 의장대가 앞선다. 그리고 고인이 그 뒤를 따르게 되며, 그 다음으로는 고인과 가까운 거리에 사람들이 순서대로 선다. 즉, 유족, 소방서 관계자, 고위관계자, 소방관 동료, 기타 참례자 등 순이다.

[그림 2-9] 은 묘지에서의 장례식을 보여 준다.

다른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중앙에 고인과 유족의 친구·친인척들이 위치하며, 그 앞쪽으로 유족이 위치한다. 고인을 중심으로 양쪽에는 군악대와 장례식 관계 종교지도자(목사), 장례지도사 등이 위치한다. 유족 뒤편으로 기관 관계자들이 위치하며, 그 다음 옆에는 동료 및 참례자들이 위치한다.

미국 기관葬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장례식에 퇴역한 명예 소방관들이 참석한다는 것과 충분한 예우를 해준다는 것이다.

[그림 2-9] 묘지에서 장례식



아. 유족 급부금(survivors benefits)

마지막으로 유족 급부금(survivors benefits) 단계이다.

한 소방관의 죽음은 개인뿐 아니라 조직 전체를 힘들게 하며, 많은 세부 사항 및 준비 시간이 요구됨과 동시에 이를 짧은 시간에 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지원 정책은 연방차원의 지원책(federal benefits)과 재향군인회(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사회보장행정(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연방 공무원(federal employees), 해당 부서 내의 각종 지원 사항 등이 있다.

우선, 연방 차원의 지원책으로 PSOB(public safety officers' benefit)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이것은 자격이 되는 유족이나 외상을 입은 자에게 단 한 번의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금액은 \$250,000이다. 다음으로 재향군인회의 경우 매장지나 깃발 같은 것들이 제공 가능하다. 사회보장행정에서는 유족에게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순직 소방관의 등급에 따른 각종 자격에 의해 유족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255가 생존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 중 자식들이 지급받는다. 그밖에도 FEGLI(federal employees' group life insurance) 프로그램 혜택도 가능하다. 또한 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다양한 유족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다. 예를 들면 오하이오 주 같은 경우 현직 소방관들이 모은 기금으로 유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소방관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2. 독일

독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방관 업무를 하다 죽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그들의 또 다른 가족인 동료들이 장례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독일의 기관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소방관 장례식의 준비 및 절차에 대한 안내 사항으로 실제로 독일 전역의 소방관들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만한 자료이다. 단, 해당되는 내용은 각각의 연방 정부와 소방부처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⁶⁾

6) Baden-Württemberg 연방의 소방관 장례식 가이드라인 참조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장례식이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은 우선 둘로 나뉜다는 것이다. 첫째, 교회 안에서 식이 이루어 질 경우이다. 모든 소방관 동료들은 소방근무복 차림(소방관 현장 근무복과 행사용 제복 모두 허용됨.)으로 행사에 참여하며, 탈모를 한다. 그렇지만 사건에 대비해 소방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의 경우에 한해서는 소방모를 그대로 착용한다. 둘째, 실외에서 행사가 진행될 경우이다. 모든 소방관 참석자들은 모자를 쓰고 참석한다. 하지만 대표자가 모자를 벗고 추모사를 하는 경우와 같은 희생자를 위한 애도를 하는 순간에는 집단 탈모를 거행한다.

가. 개관

1) 사후 소방서장의 역할

부하 소방관의 죽음을 유족들에게 알리기 위해 위로방문을 하는 것은 철저히 소방서장이 판단해서 실행에 옮길 일이다. 소방서장은 본인만 혹은 다른 몇몇 부장급 동료들을 동행할지, 그리고 제복차림으로 혹은 평복차림으로 방문을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자리는 서장 개개인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방문 시 서장은 유족들에게 죽은 소방관이 참여한 사건을 통보하고, 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장례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을 다짐한다. 물론 모든 과정에 본인이 일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도움을 줄 동료들과 다른 장례 기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할 것이다. 장례식에 조총 발사 등의 행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유족들이 이를 거부할 시에는 해당 행사 순서 없이 즉, 조총 없이 식을 올린다.

이와 더불어 소방서장은 장례식을 진행할 신부 및 장례 기관에 소방관들이 참석하는 식의 형태와 순서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영결식 때의 소방관들의 식장 배치와 안장식 전 시점의 통행로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소방관 행렬 배치 구도

장례식장의 규모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방관들이 장례식장에 배치되는 구

도는 달라진다. 이러한 요소 외에도 소방관악단의 음악을 도입할 것인가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에 앞서 이하의 3대 결정 요인에 대해서는 필히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ㄱ) 조총 발사 혹은 조총 지참 여부

(ㄴ) 20인 정도로 구성된 모든 행사 중 관 주변에 소방관 배열할지 여부

(ㄷ) 위의 (ㄴ) 보다는 소규모의 행렬을 안장식 때 둘 것인지 여부

이러한 배치구조는 국립묘지 앞에서는 오픈된 형태의 배열(관과 유가족들에게 공간을 주고 나서 그 뒤에 배치)을 하고, 입장 후부터 안장식이 거행될 위치까지는 닫힌 구도(앞서보다 관에 더 밀착함)를 이룰 것을 추천한다.

3) 복장

장례식에 참여하는 소방관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도입부에 제시한 사건 대비반의 경우 만약에 있을지 모를 출동에 유기적으로 행동하고 근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모두 복장을 현장 근무복 및 행사용 제복으로 통일한다. 착용한 모자 위에는 내무성의 마크가 그려져 있다.

소방관 행렬, 사자(死柩) 감시단, 기수, 그리고 관을 유가족과 함께 운반할 대원들에 한해서는 현장 근무복에 일반 모자가 아닌 형광 빛이 나는 헬멧이나 표면이 모두 흑색인 헬멧(단, 기수는 흰색 헬멧을 쓸 수도 있음)을 헬멧 머리띠 없이 착용하며, 장화를 신는다. 바지는 장화 속이 아닌 밖으로 내놓고 입는다. 또한 색깔을 통일시켜 장갑을 낄 수도 있다.

복장의 통일이라는 것은 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교회를 포함한 실내에서는 탈모를 하지만, 현장 근무복 차림의 대원들은 모자를 벗지 않는다.

4) 소방관들 간의 인사

소방관 행렬과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나머지 소방관들은 식 중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인사를 나눈다. 소방관 행렬의 대표 대원은 소방서장을 비롯한 높은 위치에

있는 상사들에게 대표로 헬멧에 손을 갖다 대면서 경례를 한다. 이에 경례를 받은 사람 또한 같은 방식으로 해당 그룹에 경례를 한다.

5) 관을 운반하는 대원들

고인의 관을 운반하는 대원들은 비교적 키가 비슷하고 건장한 사람들로 구성한다. 이들은 사전에 관을 들고 나르는 법, 안장식 차에 시르는 법, 묘지 바닥에 내려놓는 법 등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나. 사자(死者) 감시

1) 시신 보관

일반적으로 시신은 안장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동묘지 전당에 안치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방관 시설 관리소나 다른 공공장소에 놓이기도 한다. 관 위에는 고인의 소방 제복 모자나 헬멧이 올려 질 수 있고, 베게와 함께 훈장을 포함한 그의 희생을 기릴 수 있는 물건이 위치한다.

2) 시신 감시

6명의 소방대원들이 시신을 감시한다. 그들은 관을 중심으로 좌우로 퍼져서 일정한 구도를 유지한다. 양팔은 유연하게 밑을 향하며 손바닥은 허리춤에 놓는다. 식전에 적어도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은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다. 장례식이 진행되면 관을 운반하는 대원들에게 시신 감시를 양도한다.

다. 장례식 참석자들

관을 운반하는 이들은 행사 진행 중에는 관을 중심으로 좌우에 배치되어 대기한다. 한편 기타 소방관 참석자들은 본격적으로 식이 진행되면 장례식장의 규모에 따라서 조총수 중에서 일부의 열만 입장한다. 소방서장은 장례식 중 추모사와 고인의 약력에 대해 짧게 보고하는 자리를 갖는다. 서장의 말이 있는 동안에 객석에서는 정

숙을 유지한다. 서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진지하면서도 당당한 어조를 고인의 소방관으로서의 자격과 업적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는 점에 대해 논한다. 소방관들 외에도 국가 및 연방 정부 관계자들도 이들과 합의하에 소방관측 장례식 참석자 자격으로 동행할 수 있으며 추모사에 동참할 수 있다. 이런 높은 위치에 해당하는 자들 뒤로는 소방관들의 대표단과 기타 기관 대표자들이 줄을 잇는다. 그러나 유가족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다발적인 추모사 및 장례식 절차상의 참여는 고인과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피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인과 기타 기관들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1인이 추모사에 개입할 것이 바람직하다.

라. 운구 행렬

운구 행렬과 관련해서는 이하와 같은 순서에 의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ㄱ) 소방악단, 소방관 행렬 대표, 기수, 소방관 행렬(제식을 위한 특정한 소방관의 행렬이 없을 경우에는 나머지 소방관 참석자들 중 몇몇이 대표로 이들을 대신하여 뒤따름.), 헌화 지참자, 훈장 지참자, 그리고 관과 좌우에 관을 운반하는 사람들
- (ㄴ) 관을 뒤로는 유가족과 지인들, 앞에 행렬에 따르지 않는 대다수의 소방관 참석자들, 마지막으로 기타 위의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

악단은 장례식 행진 연주곡을 연주하며, 이 안에는 드럼을 치는 그룹이 존재한다. 행진을 할 때 주의할 점으로는 앞뒤 및 양옆 간격을 맞추어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같은 걸음걸이로 천천히 속도에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 있다.

기수와 관련하여 일단 기본적으로 통일되는 소방청의 기도 있지만, 몇몇 연방 정부에 따라서는 공적인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각 지역들만의 소방기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복장 면에서는 거의 흰색 장갑을 착용하는 기수는 장례식이 진행

되는 과정에서 이동할 방향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객석에 있는 소방대원들과 기타 참석자들이 서장 및 각 기관장들의 지시에 따를 수 있도록 깃발로 역동적인 표시를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상에 이러한 고위계층의 사람들이 위치할 때 단상 좌측면에 위치하여 본인의 임무를 이행한다. 예를 들어 정숙을 요구할 때는 기를 내리고, 퇴장을 할 때는 기를 내리는 등 군대식으로 기를 다루게 된다. 주로 소방서장의 말에 따르기도 하지만, 기수를 통제하는 다른 소방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의 말에 따라 움직인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서장의 지시를 따른 후에 해당되는 담당자가 기수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마. 안장식 절차

묘지 앞에서 악단의 음악과 드럼소리를 따라서 묘지에 안착을 하게 되면 관은 고인이 놓이게 될 무덤 앞에 놓여진다. 그리고 나면 기수는 관 앞쪽 모퉁이에, 화환과 훈장을 준비한 이들은 측면으로 벗어나서, 관을 운반하던 이들은 관을 중심으로 양쪽 측면에 위치한다. 그 뒤를 따르던 사람들은 무덤 앞에, 악단은 이들 뒤편에 가서 자리를 잡는다. 한편에는 소방관들이,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유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이 서있다. 이러한 안장식 배치는 사전에 계획되어야 하며, 공간에 따라서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하관은 특별한 지휘나 지시 없이 관이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전원이 묵념한다. 이때 기수는 기를 천천히 밑으로 내리는 동작을 취한다. 관이 무덤에 안착한 후에 관을 들던 이들은 무덤에서 한걸음 벗어나 양쪽 측면에 다시 위치한다.

1) 기도

신부가 대표로 고인을 위해 기도를 할 때에는 소방관들은 탈모를 하지 않는다.

2) 마지막 추모사 및 헌화

소방서장이 영결식 진행 시 미리 추모사를 한 만큼 이번에는 다른 인물들에게 최종 추모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원하는 이가 없을 시에는 다시 서장

이 담당 대원이 화환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최종 추모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훈장을 들고 있는 이는 서장 뒤 측면에 서서 차례를 기다린다. 마지막 대사가 끝나면 훈장 또한 무덤 안에 놓여지고, 담당자는 다시 뒤로 돌아간다. 서장이 재등장해 훈장과 화환을 정돈하고 다시 물러선다. 마지막 작별 인사로 무덤 앞에 경례한다. 헌화를 하기 위해 바로 뒤에 올 사람에게 모자를 벗고 악수를 한다. 계속해서 몇몇 대표들이 개별적으로 무덤 앞에 다가와 헌화를 하고 조용히 십자가를 그린다. 훈장을 갖고 온 이는 식 중 무덤 앞에 다시 서지 않는다.

화환이 놓이는 과정에서의 추모사는 짧은 것이어야 하며, 식전에 반드시 정해진 말이어야 한다. 물론 아무런 대사 없이 진행이 되어도 무관한 사항이다. 즉, 안장식 중 최종 추모사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안장식 음악

음악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장례식에서 단골로 연주되는 “Ich hatt' einen Kameraden”(군인들의 장례식 노래에서 비롯되어 현재는 유사 기관 및 국장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으로 통용됨.)이라는 곡이 화환을 내리는 과정에 혹은 안장식의 최종 단계에 음악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소방관 행렬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정자세로 가만히 서 있으며, 행렬 대표자와 다른 대표격 인사들이 고인의 근무 모자 혹은 헬멧에 손을 얹는다. 여기서 기수는 다시 기를 밑으로 향한다.

바. 퇴장 순서

장례식이 끝나게 되면 우선 소방악단의 음악과 함께 소방관 행렬이 퇴장한다. 그러고 나서는 배경 음악 없이 기타 소방관들이 국립묘지를 벗어나게 된다. 관을 운반 하던 이들은 남아서 모든 소방대원들과 각계 계층의 대표들이 사라질 때까지 무덤을 지키며, 유가족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장할 때에 비로소 옛 동료로부터 등을 진다.

3. 일본⁷⁾

일본의 경우 회사나 단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사장(社葬, 이하 회사장(會社葬 이)라고 함) 또는 단체장(団体葬)이 있으며, 유족이 주체가 되는 개인장(個人葬) 그리고 회사나 단체와 유족이 합동으로 거행하는 합동장(合同葬)이 있다.

개인장의 경우 고인 즉, 개인만의 애도를 위한 것이라면 회사장은 그것뿐 아니라 고인이 기업에 남긴 실적이나 기업의 향후 체제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알리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이럴 경우 회사가 주최가 되어서 고인에 대한 장례를 진행하게 된다. 사실 회사장은 기업에 대한 평가가 연관되어 있고, 고인의 덕과 뜻을 기리며 생전의 업적을 다시 돌이켜 보는 시간뿐 아니라 인상적인 장례가 되길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이런 대외적인 부분과 더불어 회사 내부적인 측면에서도 회사장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은 사원 간에 한층 더 결속을 다지며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⁸⁾. 또한 회사의 향후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고, 무언의 유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가. 회사장의 종류와 흐름

[그림 2-10] 를 보면 회사장의 종류와 흐름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다.

우선, 회사장의 종류로는 가까운 친인척들이 모여서 밀장(密葬) 후 회사장을 거행하는 경우와 개인장(個人葬)의 이별회(離別會)를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합동장(合同葬)을 거행하는 경우로 나뉜다. 첫 번째의 경우 먼저 근친자들에 의한 밀장의 경우 고인이 생전에 믿었던 종교(신앙)에 따라서 장례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가까운 친인척들이 밀장을 한 후에 고인의 뜻에 따라서 종교별 의식을 행하게 된다. 그런 다음 회사장을 실시하게 된다. 두 번째로서 개인장의 이별회는 특별하게 종교성은 없

7) 현재 일본에서 기관장 뿐 아니라 단체장에 대한 운영사례에 관한 기사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부 기관장에 대한 매뉴얼과 관련 문서를 조사할 수 없는 관계로 이와 매우 유사하며 형식이 일치하는 회사장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8) 이것은 일본의 기업 문화로서 회사는 종업원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평생직장으로 생각 할 수 있게 그 책임을 다한다. 이때 종업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기업에 충성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기업은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가 있다.

다. 다만 고인과 헤어지는 이별의 시간을 특별히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별회는 화장 후 49일 법요를 행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 번째로 합동장은 개인장과 사장을 합한 형태이다. 임종 후 바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가 대표적인 회사장으로서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행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고인이 회사의 임직원이었다면 합동장을 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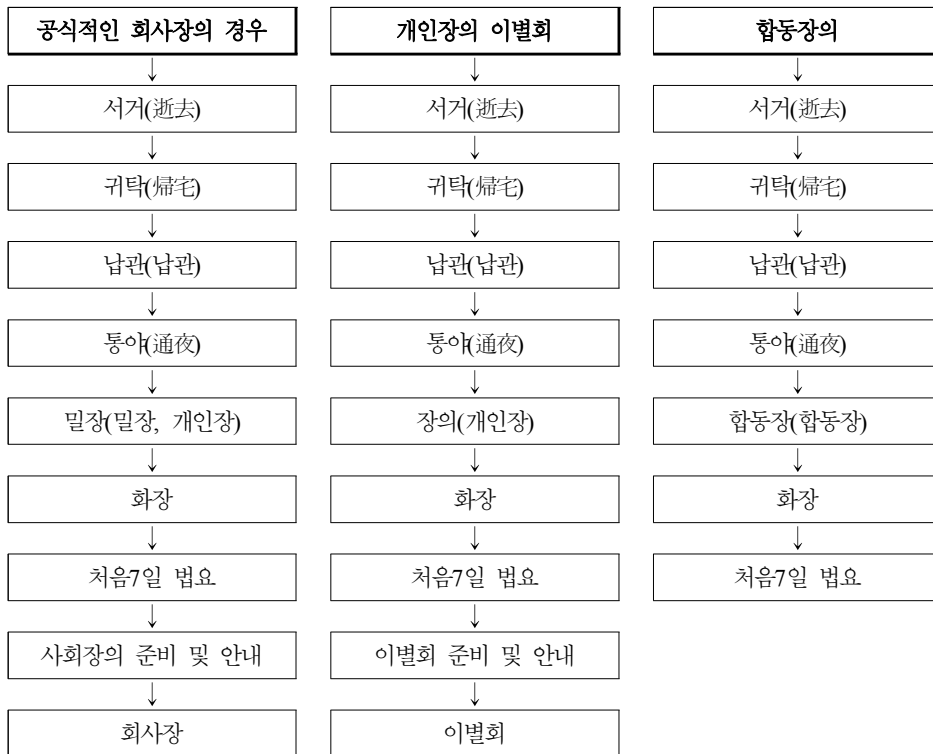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회사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세 종류 모두 서거와 귀탁, 납관, 통아라는 절차는 동일하다.

서거는 임종으로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귀탁이라는 고인을 모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장의차로 고인을 이송하게 된다. 이것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경우, 병원의 시신 안치실에 안치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납관은 입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문적인 납관사가 이를 행한다. 그리고 납관사는 고인의 얼굴을 아름답게 화장(化粧)한다. 통아는 납관 후에 그날 오후쯤 행하는 의례이다. 보통 유족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게 되는데, 유족끼리 간단히 지내는 경우와 가족들은 물론 친지 그리고 지인까지 와서 조문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통아 때 조문객들이 찾아오면, 제단 앞에서 정중히 예를 다한 후에 준비되어 있는 다과를 먹고 돌아가게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조문과 비슷한 형태이다.

다음으로 회사장의 종류에 따라서 밀장을 하는 형태와 개인장을 치르는 형태, 합동장을 진행하는 형태로 구분이 된다.

우선, 밀장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장례식을 의미한다. 밀장의 경우 5일장 내지 10일장이 있는데, 10일장을 지낼 경우 시신을 먼저 화장 한 후에 밀장을 행하기도 한다. 개인장 및 합동장은 밀장과 같은 형식을 이뤄지는 고별식으로서 단지 참석하는 인원의 규모나 주최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후에 고인을 화장장에서 화장한다. 그리고 종교의식에 따라서 법요를 진행한다. 공식적인 회사장인 첫 번째의 경우에는 화장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회사장을 진행하게 되며, 개인장의 경우는 이별회의 고별식을 진행한다.

[그림 2-10] 회사장의 종류와 흐름



나. 회사장의 취급 규정

그렇다면 이러한 회사장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보통의 경우 최고 책임자가 결정은 하지만 회사장을 행할 때 먼저 규칙화된 규정에 따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규정은 국가, 지역사회, 회사뿐 아니라 작은 모임이나 가정 등의 모든 집단에서 그 집단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 따라서 회사장의 규정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회사장을 무탈하게 진행 할 수 있게 하며, 고인의 유지를 기릴 수 있게 할 것이다. 보통 회사장 규정에는 비용과 세무 상의 관계 뿐 아니라 장례의 진행 순서 등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표 2-4> 는 회사장의 취급 규정에 대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표 2-14〉 회사장의 취급 규정 예

구분	내용
제1조 총칙	사업에 평장히 다대한 공로자가 사망했을 때 회사장을 거행한다. 이때 사회장을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전사원은 노력한다. 그리고 회사장에 관해서는 본 규정대로 적용한다.
제2조 규정	본 규정에 의해 회사장 실시는 대표이사가 이것을 결정한다. 다만 유족이 회사장에 대한 신청이 있었을 때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제3조 명칭	전조에 의해서 사장의 명칭은 주식회사 XXX 회사장이라고 한다.
제4조 집행범위	<p>사회장의 집행 범위는 아래와 같은데, 다만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임직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p> <p>[레벨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역 회장 또는 사장이 사망하였을 경우 2. 회장 또는 사장으로서 본 회사 체직 10년 이상일 경우 <p>[레벨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현직 부사장, 전무, 상무가 사망하였을 경우 4. 회장 또는 사장으로 체직 10년 이하인 경우 5. 현직 임원이 업무상에 이유로 사망하였을 경우 <p>[레벨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앞의 항목 1부터 5의 항목 이외에 임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7. 부사장, 전무, 상무가 퇴임 후 3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p>[레벨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임직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제5조 회사장 비용기준	<p>회사장의 비용 지급은 아래와 같다.</p> <p>[레벨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는 사망부터 장례 종료 시까지 모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p> <p>[레벨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는 사망부터 장례 종료 시까지 비용 중 계명, 수의, 그와 성격이 비슷한 유형의 비용은 제외한다. 다만 회사장을 행 할 때 고인이 입게 되는 수의에 관해서는 회사가 부담할 수도 있다.</p> <p>[레벨3]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는 [레벨2]와 같이 회사의 비용으로 장례를 진행하지만 그 중에서 계명, 수의, 그와 성격이 비슷한 유형의 비용은 제외한다.</p> <p>[레벨4]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는 임직원회를 통하여 비용 사항을 결정하며, 앞선 각 항목 및 그것에 준하여 회사장 비용을 책정한다.</p> <p>이외에 비용 발생에 대해서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할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은위의 각 항목에 준하여 회사가 지불한다.</p>

〈표 2-14〉 회사장의 취급 규정 예 (계속)

구분	내용
제6조 장례위원장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규정에 의해서 회장 또는 사장이 장의 위원장이 된다. 이는 임직원 회에서 장의 위원으로 추대 된다.
제7조 장례위원장의 직무	장의위원장은 회사장에 관한 모든 총괄을 맡는다.
제8조 장례위원회의 직무	장례위원회의 직무는 장의위원장을 보조하고 회사장 집행에 노력한다.
제9조 장례실행위원장	본 규정에 의해서 회사장은 총무부장이 장례실행위원장이 되고, 장례실행위원을 선임한다.
제10조 회사장 실행위원장의 직무	장례실행위원회를 주재하고 실질적인 회사장의 기획과 운영을 담당한다.
제11조 장례실행위원회 직무	장례실행위원장을 보좌하고 각 담당마다 실질적인 회사장 업무를 행한다.
제12조 사업의 휴무	본 규정에 의해서 회사장 당일의 업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을 휴무한다.
제13조 복장	회사장 당일의 복장은 장례실행위원장은 개량 전통복, 장의실행위원장 또는 장의실행위원은 약식 예복으로 입는다.
제14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 할 경우 임직원회에서 승인 얻은 후 개정한다.
제15조 실시계	주관부문 본 규정의 실시를 몇 월로 하고 그 주관은 총무부가 한다.

회사장 취급 규정에서 중요한 점은 회사장을 집행하는 범위와 비용 지급 범위, 회사장 관련 조직의 직무로 요약될 수 있다.

회사장을 집행하는 범위는 일반적인 예이지만 기업에 따라서 임원, 직제별로 세분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본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소유주, 현역 임원이 대상이 되며, 또한 현역 사원의 경우도 그 공헌 정도에 따라서 회사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회사장의 비용 범위는 고인에 따라서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회사의 중역일수록 지원금이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회사장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세무 상에 인정을 놓고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전에 잘 조율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장에서 인정되는 비용으로는 제단 비용, 사회장의 답례장, 사회장의 답례품(간단한 기념품 정도의 범위), 조문객 접대비(술, 차, 과자 등) 시설 사용료(시설의 임대료, 주차장, 음향

시설 등) 등이 있다. 반면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비용으로는 계명료, 불단, 답례, 법요 비용, 묘석 및 묘지 구입비, 묘지의 차입금, 고인의 의료비를 비롯하여 사회 통념상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들은 회사장의 비용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다. 회사장 관련 조직 구성 및 역할

회사장 관련 조직의 직무는 회사장 진행이 발생되면, 임시적으로 맡게 되는 것으로서 평소부터 이와 관련한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총무부장이 장례 실행위원장의 직무를 맡는다. 그리고 장례실행위원장이 선임되면, 장례실행본부(총무부라고 하여도 무방)를 계획하여 총괄하게 된다. 이곳은 회사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장례실행본부는 예측하지 못하는 사태에 즉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절한 판단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회사장과 관련된 역할 분담을 미리 구분하여 수행함으로써 사전에 혼선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례위원장은 회사장 집행과 관계되는 모든 최고의 책임자로서, 회사장 당일, 식순의 중심적인 존재가 된다. 개인장의 경우 상주에 해당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고인과 친분이 깊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선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통 사원의 회사장의 경우 위원장으로서 사장이 선택된다. 하지만 현직 사장의 회사장인 경우는 당연히 회장 혹은 부사장, 전무 등 순으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고인과 친교가 두텁거나 국회의원, 시장, 타사의 사장, 거래처 은행 대표 등이 선택되기도 한다. 회사 외의 사람에게 장례위원장을 의뢰할 때는 고인과의 친교가 얼마나 깊은지와 사회적인 지위, 연령 등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례위원의 역할은 장례 위원장을 보좌한다.

구체적으로 회사장의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림 2-3] 회사장 운영 조직도와 같다. 우선, 정식적으로 회사장이 정해진다는 사실이 확정되면, 회사장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 본부가 설치가 된다. 그리고 각각의 장례 실행 위원장, 장례 실행 위원들은 각각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직무에 맞게 적격자 혹은 적임 부서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서 담당은 회사장의 안내장이나 홍보 등의 작성을 실시하게 된다. 이때 회사의

교제나 홍보물 혹은 사보를 작성한 자가 이러한 역할을 맡으면 좋겠다. 섭외 담당은 직원내의 협의회나 식당, 초대처 등에 대한 교섭이나 연락을 실시한다. 이것은 중요한 업무이므로 섭외에 익숙해 있는 총무부의 베테랑 사원이 적격이다. 기록 담당은 회사장에 대한 모든 기록을 하게 되며, 사진이나 영상, 음성 등의 각종 기록들을 남긴다. 기계 조작이 익숙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불가피하게 회사 내에서 이를 행할 수 없을 때는 장례지도사에게 의뢰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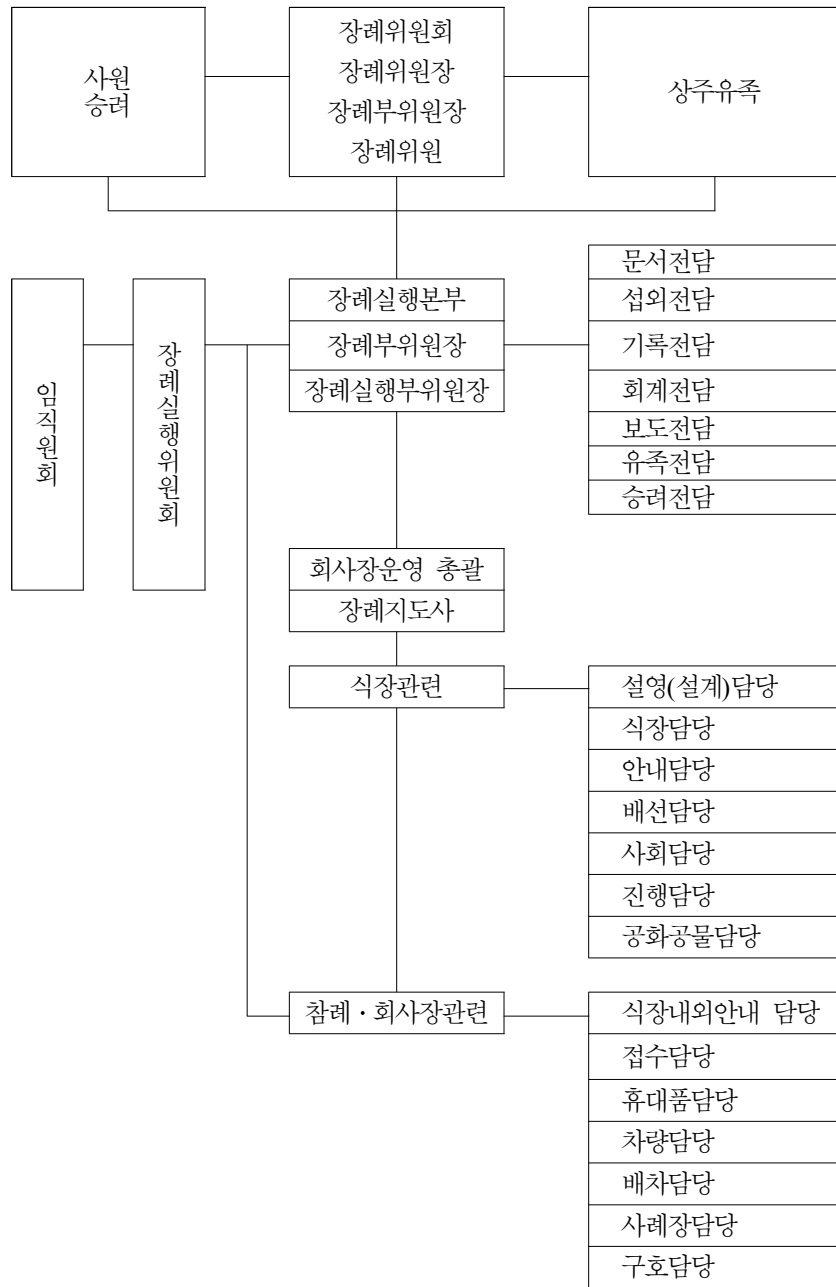
회계 담당은 회사장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취급하게 된다. 회사장 이후의 세무 처리까지 관련되므로 경리부의 핵심인물을 배치하면 좋을 것이다. 연락담당은 말 그대로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보통 일찍부터 회사장의 긴급한 연락부터 일반적인 연락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례실행위원회(총무부)의 멤버가 하는 것이 좋겠다. 보도 담당은 회사장의 안내를 신문에 게재하거나 회사장의 현장을 보도 기자가 찾아왔을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이다. 이는 회사의 홍보나 선전 부서가 책임자일 것이다. 유족담당은 회사장에 대한 사전 협의뿐 아니라 당일 회사장의 안내를 도와 유족 옆에서 항상 도움을 준다.

승려담당은 섭외 담당의 지원 역할로써 승려의 식 당일의 회사장 안내나 접대를 실시한다. 식당 담당은 식의 순서, 규칙이나 식당의 운영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이는 각 부서의 면밀하게 연락을 해 결정해야 한다. 안내 담당은 식당의 근처 역에서부터 회사장까지의 안내를 실시한다. 역에서 먼 경우를 대비하여 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담당은 사회 진행을 담당한다. 사회에 익숙한 사람이 없는 경우 반드시 장례지도사에게 의뢰하여 회사장 진행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진행 담당은 회사장의 전체적인 진행을 관리 실시하게 된다. 이것 역시 회사장의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므로 장례실행본부의 멤버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헌화 공물 담당은 헌화나 공물을 어디에 놓고, 그 순열들을 관리한다.

식장내외 안내 담당은 대개 입구 혹은 대기실에서 식당, 좌석에의 유도 등을 실시한다. 접수 담당은 식당 당일에 접수나 방명록 관리 등을 실시한다. 휴대품 담당은 조문객 등의 수화물 등을 맡으며, 번호표를 준비하여 혼란을 피한다. 차량 및 배차 담당은 주차장이나 행사장 주변에서 유도 등을 실시하여, 식당 내 혼잡을 최대한 잘 제어한다. 사례장 담당은 헌화, 공물, 부의, 조전 등에 대해 답례장을 작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장은 다음날에 발송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 필요가 있다. 구호 담당의 경우는 더운 계절이나 고령자가 많이 참석한 경우 위급사항들을 미리 파악하여 바로 의사에게 조취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림 2-11] 회사장 운영 조직도



라. 회사장 사전 준비 및 사후 처리

회사장의 사전 준비 항목을 잠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회사장의 형태를 결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병원 관련하여 상사에게 보고할 때나 추후에 회사장일 경우 병원비를 회사가 대신 지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자세히 알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연락처 명부를 작성해두어야 한다. 이것은 만일을 대비한 것으로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둔다. 명부 작성 범위는 유족, 회사 관계자, 특별히 연락을 필요로 하는 사람 등을 결정해 둘 필요가 있다. 종교 형식과 회사장을 진행할 장소를 미리 조사를 해둔다. 고인이 종교에 따라서 장례가 불교식의 장례, 개신교식의 장례로 나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장의 진행할 장소는 예상 참석자 수, 주차장등을 고려하여 여러 군데 예비 장소에 대한 조사를 해두면 좋다. 혼장수여의 신청을 사전에 준비 해 둔다. 관계 단체나 직접 신청하기 위하여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고, 기타 상금 등도 미리 준비해 둔다. 부고를 미리 준비하고, 신문이나 사내 통지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둔다. 이때 꼭 기입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고인명·향년·사망 일시·병명·장의 일시·장소·상주명·상주의 주소·사장의 유무부의, 헌화, 공물 등의 취급 등이다.

다음으로는 회사장 사후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회사장의 종료 후의 회사가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부의록 정리가 있는데, 이는 거래처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잘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사의 인사장을 준비해야 하며, 고인과 관련된 행정 절차들을 잘 정리해야 한다. 그것과 관련된 것은 〈표 2-5〉와 같다.

〈표 2-15〉 고인과 관련된 행정 절차 예시 표

항목	절차	창구	적요
고용 보험	자격상실 신청	공공직업 안정소	임원 및 사원일 경우
사회보험	매장요금의 수급	사회보험사무소	사망진단서 필요
	고액 의료비의 수급	사회보험사무소	의료비의영수증 첨부
후생연금	후생연금의 신청	사회보험사무소	공제연금 수첩·호적 등본 사망 진단서
소득세 신고	준확정 소득세 신고	관할세무서	
노동재해 보험	상제료·공제연금 등	노동기준감독서	노동자피해보상보험에 의한 사망의 경우
임원 변경	변경등기 신청	법무국(2주간이내)	대표자의 경우는 의사록 작성
금융기관	명의 변경	각 은행·신용금고 등	원칙으로서 대표자 사망의 경우 대표자 변경 등기
주식·채권	명의 변경	증권회사·발행회사	상속 관계자 관련 서류 필요
골프 회원권	명의 변경	소속 골프장	명의 변경료 발생 할 수 있음
전화 가입권	가입 승단계	전화국	
전기·가스·수도 등	명의 변경	각 청구처	인감·통장·영수증 지참 필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명의 변경		계약서 원본 필요
부동산	명의 변경	법무국	
생명보험	수급 절차	생명보험회사	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장 합리적 정부기관 장례운영 방안

제1 절 정부기관葬 관련 용어 해설

정부기관의 장례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독자의 이해를 위해 학자마다 상이하게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장례관련 용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용어 정의를 기본으로 따랐으며, 신조어에 대해서는 국립어학원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으로 재검토하였다. 그 밖의 용어들은 2002년 장례식장 서비스 용어(KS A 0961 : 2002), 2004년 화장장 서비스 용어(KS A 0967-1: 2004), 2005년 봉안당 서비스 용어(KS A 09681 : 2005)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1. 정부기관葬

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장례(葬禮)와 관련한 일이 진행될 경우 정부기관장이라 지칭한다. 그렇지만 정부기관장이라 한글로 표현 할 경우 정부기관의 장(長)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는 정부기관의 장례는 정부기관장(葬)이라 칭하고, 장(長)을 칭하는 경우에는 정부기관의 장(長), 또는 기관의 장(長)이라 지칭하도록 한다.

2. 장례

장례(葬禮)는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의례를 말한다. 장례와 같은 의미 혹은 비슷한 의미로는 장의절차, 장의식, 장의실무, 장의일정, 장의지원, 장의행사, 장사란 단어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어에서 오는 혼동을 막기 위해서 모두 장례라고 하였다.

보통 상례(喪禮)라 하면 초종⁹⁾에서부터 길제¹⁰⁾까지의 19개의 대절차¹¹⁾ 전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장례라 하면 일부 의견의 차이는 있으나, 치장¹²⁾에서 반곡¹³⁾까지 5개의 대절차 또는 염습부터 급묘¹⁴⁾까지 9개의 대절차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곧 상례라는 전 과정 속에 장지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와 관련된 절차들으로써 상례의 일부를 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통상적으로 구분하지 않기에 여기서는 장례라는 용어도 의례의 전 과정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례라는 단어로 모두 통일하였다.

3. 장례위원회

위원회(委員會)는 법률적인 용어로서, 일반 행정과는 달리 어느 정도 독립된 분야에서 기획, 조사, 입안, 권고, 쟁송의 판단, 규칙의 제정 따위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하는데, 특수한 행정 분야에서 일반 행정청의 권한에 소속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행정 사무를 맡아보기 위하여 등장한 제도를 말한다(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따라서 장례위원회는 정부기관葬이란 상황 속에서 등장한 임시적인 장례를 진행

9) 초종(初終)은 죽음을 맞이하고 상례를 준비하는 절차인데, 소절차에는 임종준비, 복, 시사전, 수시, 역복불식, 치관 부고 등이 있다.

10) 길제(吉祭)는 신주의 代를 바꾸는 절차. 집의 계승으로서 종손이 바뀌었음을 공포하는 절차를 말한다.

11) 朱熹(1130-1200, 宋)의 『家禮』를 의례의 규범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따르면 상례는 初終儀라는 절차를 시작으로 襲·小殮·大殮·成服·弔喪·聞喪·治葬·遷柩·發靨·及墓·反哭·虞祭(初虞·再虞·三虞)·卒哭·祔祭·小祥·大祥·禫祭·吉祭의 19개 大節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시덕, 2001).

12) 치장(治葬)이란 장지(葬地) 및 발인 준비를 말한다.

13) 반곡(反哭)이란 장지로부터 집에 돌아와 신주와 혼백상자를 영좌에 모시고 곡하는 일을 말한다.

14) 급묘(及墓)란 무덤에 도착한 것을 말한다.

하는 제도적 위원회를 말한다. 장례집행위원회 역시 장례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다만 실무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기존에 문헌자료를 보면 장의위원회란 말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장의를 장례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장의위원회는 장례위원회로 통칭한다.

4. 빈소 운영에서 나오는 용어

가. 장례식장

장례식장(葬禮式場)은 전문적으로 장례의식을 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이런 장례식장은 분향소와 빈소, 접객실 및 안치실, 염습실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

나. 빈소와 분향소, 접객실

빈소(殯所)는 조문객의 조문을 받기 위하여 고인의 영정이나 혼백을 모셔 놓은 장소를 말하며, 보통 고인이 안치되어 있는 곳에 마련한다.

분향소(焚香所)는 향을 피우면서 제사나 예불 의식 따위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접객실(接客室)은 조문객을 대접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다. 고인

고인(故人)은 장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죽은 이에 대하여 예(禮)로서 높여 부르는 말이며, 시신(屍身) 죽은 사람의 몸체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고인의 죽음 종류 중 자연사 이외의 죽음 종류 중 하나로서 사고사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외인사로 통칭되며 교통사고, 불의의 중독, 불의의 추락, 불의의 익사, 자살, 타살, 기타사고사로 분류가 된다.¹⁵⁾

15) 의료법시행규칙 제10조와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바람.

라. 안치, 수시, 염습

안치(安置)란 말은 시신의 부패와 세균 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냉장 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안치 이후에 수시(收屍)를 걷는다고 말하는데, 이는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팔과 다리 등을 가지런히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고인 사망 이후 염습(斂襲)을 행하는데, 이때의 의미는 시신을 목욕시켜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는 것을 말하며, 염습 이후 입관(入棺)을 행하는데 시신을 관에 모시는 일을 말한다.

마. 부고 및 조문

부고(訃告)는 고인의 죽음을 알리는 것을 말하고, 조문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보통 문상(問喪)¹⁶⁾이란 단어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조문이란 말은 조선왕조실록에 조문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이는 ‘조사문생(弔死問生)’으로 죽은 이에게 애도를 하고,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안위를 묻는다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조문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문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5. 영결식

사전적 정의를 보면 영결식(永訣式)은 장례를 지내기 전에 죽은 사람을 영원히 떠나보낸다는 뜻으로 행하는 의식을 말한다.¹⁷⁾ 반면 비슷한 의미로서 전통적인 상례에서도 발인을 할 때 견전¹⁸⁾에서 영결종천(永訣終天)이라고 축문을 읽는 것을 감안 한다면 이래저래 떠나는 것은 모두 발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가(장례식장)

16) 문상이란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을 뜻하고, 문상객(問喪客)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하러 온 사람을 뜻한다.

17) 본 연구에서 영결식은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후 별도의 장소에서 지내는 장례의식을 뜻한다.

18) 견전(遣奠)이란 발인 때에 문 앞에서 지내는 전(奠)을 말한다.

에서 떠날 때도 발인이라고 하고, 영결식을 마치고 화장장으로 떠날 때도 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가족장에서는 발인 전에 지내는 의식을 발인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또 용어의 뜻에 따라 발인 제사를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국장이나 사대부의 장례 절차 어디에도 발인제라는 용어는 찾아 볼 수 없다.¹⁹⁾

《사례편람》을 통해 살펴 본 발인은 10번째의 대절차로 영구가 떠나고, 곡하며 절어서 따라 가고, 전(奠, 노제)을 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날의 발인, 영결식에 대한 의미적 절차는 9번째의 대절차인 천구(遷柩²⁰⁾)의 절차에 등장 한다. 이 절차의 견전(遣奠)은 발인을 하기 직전에 행하기 때문에 발인과 관련된 제사의 일종으로 오해를 하여 오늘날에는 발인제라는 제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많이 진행 되고 있다. 천구의 절차는 발인 하루 전날 아침에 전을 올리고 영구(靈柩)를 옮길 것을 고하게 된다. 그리고 고인의 영구를 옮겨 사당에 하직 인사를 하며, 길을 떠날 것을 고하는 조전(祖奠)을 올린다. 이어서 다음 날이 되면 발인을 하기 위해 상여 꾸미기를 마치고, 영구를 상여에 싣고 견전을 지내는 절차로 구성 되어 있다. 따라서 견전을 모두 마치면 발인이라는 절차로 장지를 향하여 떠나게 되는 것이다.

「의례준칙」(1934)에 의하면 발인을 하기 전에 상가에서 영결(永訣)을 행한 후에 발인을 하도록 각기 절차를 구별하여 규정 하고 있다. 이 준칙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가정의례준칙인 1969년의 「가정의례준칙」에서는 제33조에 영결식이라는 조항을 두어 개식·주상 및 상제들의 분향 배례·고인의 약력 보고·조사·조객분향·호상인사·폐식 등으로 진행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영결’이라는 말은 견전을 올릴 때 읽는 축문인 “영이기가 왕척유탉 재진견예 영결종천(靈輶既駕 往則幽宅 載陣遺禮 永訣終天)²¹⁾”에 등장 한다. 따라서 ‘영결’이란 가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이별을 한다는 뜻으로 쓰인 용어이다.²²⁾ 그리고 정부기관장 또는 장소를 이동하여 오늘날의 영결식이라는 의례의 진행시에는 발인제(견전)을 이

19) 황근식(2010), 국장 및 국민장의 의례절차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p115

20) 천구(遷柩)란 영구를 옮긴다는 뜻이다.

21) 문장 해석은 다음과 같다. ‘영좌를 실은 상여를 이미 메게 되었으니, 가면 곧 무덤입니다. 그리하여 보내는 예를 베풀어, 영원토록 이별함을 고하나다.’

22) 김시덕(2007), 도시 장례식장에서 지속되는 상례의 문화적 전통, 실천민속학 제9호, p121~123

중적으로 행하지 않으며, 영결식만을 행한다.

6. 운구에서 나오는 용어

가. 영구차

영구차는 영구차량, 장례차량, 장의차량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영구차로 통칭한다.

일단 영구(靈柩)란 말은 시신이 들어 있는 관을 말하며, 영구차는 장례에 참여하는 모든 차량을 의미할 때는 장례행렬로 통일해도 무방하다.

나. 운구행렬

운구행렬은 장의행렬, 운구행렬으로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운구행렬로 통칭하며, 이는 원래 행상을 의미한다.

7. 기타 용어

가. 명정

명정(銘旌)은 길이 2m 정도의 홍색비단에 흰색글씨로 모관모공지구(某官某公之柩)라 쓰고 부인의 경우는 모봉모관모시지구(某封某貫某氏之柩)라 쓴다. 전통 상례에서 명정은 긴 장대에 달아 출상(出喪)전에는 영좌의 오른쪽에 세워두었다가 출상 때에 영구 앞에서 들고 간다. 하지만 현재는 관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관보를 덮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혼백

혼백(魂帛)이란 신주(神主)를 만들기 전에 임시로 명주나 모시를 접어서 만든 신

위(神位)를 말하는데, 초상에만 쓰고 장사 뒤에는 신주를 쓴다(표준국어대사전). 너비 한 폭에 길이 1자 3치(약40cm)인 흰색비단, 마포(麻布) 또는 백지를 접은 뒤 오색실로 만든 동심결(同心結²³⁾을 끼워 만든다. 이 혼백은 상자(혼백함)에 넣어 교의 위에 모신다.

나.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死亡診斷書)는 의사가 사람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때에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그리고 시체검안서(屍體檢案書)는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체(시신)을 살펴서, 의사가 사인(死因)을 의학적으로 검안하여 사망을 확인하는 증명서이다.

제2절 정부기관葬 규정 표준안 검토

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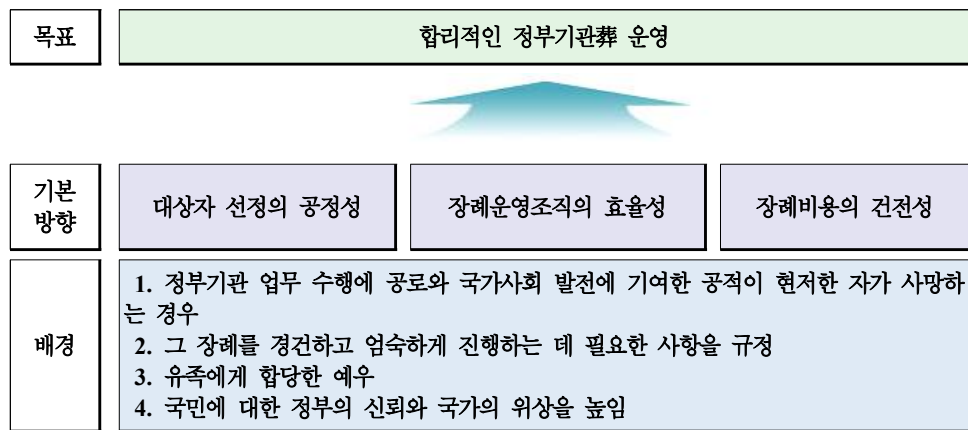
현재 정부기관은 국가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망하거나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애도와 조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葬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 관련 표준(안)이 없어 정부기관 주최 장례를 진행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실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기관葬은 정부기관의 소속 구성원들로 하여금 기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며, 정부기관의 경조사를 구성원 모두가 함께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23) 두 고를 내고 맞조여 매는 매듭. 납폐(納幣)에 쓰는 실이나 염습(殮襲)의 띠를 매는 매듭 따위에 쓴다(표준국어대사전).

정부기관의 모든 장례절차는 유가족과 소속 정부기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다만 고인의 유언과 유가족으로부터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되, 소속 정부기관에서 지원 기구를 구성하여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기관葬은 운영 규정과 조례 등 법적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정부기관의 문화적 측면에서 합리적 운영이 되도록 장례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3-1] 정부기관葬 운영 기본방향



가. 공정성

기본방향으로서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장례운영조직의 효율성, 장례비용의 건전성이 있다.

우선, 공정성은 아담스(Adams, 1965)가 공정성 이론을 주장한 이래로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목적에 맞게끔 공정성을 정의하고 여러 조직에 적용하여 왔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공정성의 개념은 분배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으로 다시 나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공정성의 학술적인 의미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므로 광범위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사전적인 의미를 강조하여 본다면 공정성은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을 의미한다. 즉,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은 공정

하게 대상자 평가 단계와 절차를 수용하여, 여러 상황의 극단치를 제거하여 정부기관장이 진행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효율성

다음으로 정부기관장 운영조직의 효율성인데 우선, 효율성이란 말은 사전적 정의로 본다면 들인 노력에 비해 얻은 결과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의미한다. 이런 효율성은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한데 그 첫 번째는 사전적 정의와 같은 맥락으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효율성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접근 방식으로서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심리학적 논리체계에서 보면 어떤 행위자가 행위자의 동기를 충족시키면서 불만족을 일으키지 않을 경우를 효율적이라고 정의했다(체스터 바나드, Chester Irving Barnard). 본 연구에서의 효율성은 전자의 의미가 강하다. 왜냐하면 정부기관장을 진행 할 경우 임무 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나 임무의 집중정도가 심한 경우가 있을 시 장례집행위원회의 팀원들 뿐 아니라 유족들 역시 장례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무의 최적화와 여러 상황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정부기관장을 진행함을 의미한다.

다. 건전성

마지막으로 비용의 건전성이다. 건전함이란 타당하고, 전제들이 모두가 좋은 것을 뜻하는데 즉, 형식뿐 아니라 내용도 올바른 것을 말한다. 또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도 일치하는 면을 보인다. 즉,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하게 정부기관장을 진행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건전성은 허례허식이 없으며, 그 의례의 전제 자체를 행함에 있어 타당함을 의미한다.

2. 정부기관장 규정(안) 주요내용

장례의 절차 및 방법, 장례위원회 운영 등 기관별 차이가 나는 이유로 행정적 비효율성이 발생되며, 장례절차의 통일성 부족으로 각양각색의 정부기관장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기관장의 대상, 비용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식 및 절

차, 규모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장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기관장이 시행 될 경우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정부기관장의 대상자, 비용 지원범위 등이 기관별로 상이하게 되어 행정적인 혼란이 발생됨을 이미 지적하였다. 전례(前例)를 보면 각 부처 내에서도 직급, 장례장소, 조문객 수 등에 따라 비용 지원의 차이가 상당하여 정부차원의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

가. 목적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장은 기관장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나 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였을 때 거행한다.

정부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망하거나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애도와 조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기관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규정으로 제정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정부의 신뢰와 국가의 위상을 높이도록 한다.

〈표 3-1〉 목적 규정(안)

이 규정은 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고인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며, 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대상자 선정

최근 3년간 정부기관 대상자 분석(제2장 참조)에 따르면, 정부기관장의 대상자는 대부분 현직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인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기관장의 대상자로서 전직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상근인력(안양

시, 부천시 등)을 포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공훈을 남긴 시민들도 포함(진도군, 목포시 등)하고 있어 전직의 공무원들을 포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고 있다.

우선 전·현직 공무원 대상자 선정 문제를 살펴보면, 전직 공무원의 경우 예우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직 공무원이나 전직 정부기관장은 정부의 공무수행에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수에 대하여 행정소요 비용이 증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기관장의 대상자는 현재 근무하다가 사망한 경우로 한다. 따라서 표준안에서는 현직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로 국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정부기관장의 대상자는 정부기관의 장이거나 부처 직무에 현저한 공훈이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하는 경우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전술한 정부기관장의 기본방향 중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대상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저한 공훈과 국민의 추앙이란 말의 의미는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장례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또한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공적인 업무 - 산 불 진화 등에 동원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정부기관장 대상으로 함으로써 정부기관장의 대상에 일반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각 개별 부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상황 등의 경우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기관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표 3-2〉 대상자 규정(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족 등을 고려하여 장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기관장으로 행 할 수 있다.

1. 현직 정부기관장이 사망한 경우
2. 소관 부처 직무에 현저한 공훈을 남기고 사망한 현직 공무원
3.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하는 사람(일반 국민도 포함한다.)

다. 정부기관葬의 명칭

명칭이란 정부기관葬에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이름을 말하는데, 명칭을 통하여 전체적인 장례 규정의 성격과 주체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장례 명칭을 통하여 장례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명칭의 대표적인 서식은 명정이라 할 수 있는데 남성의 경우 ‘모관모공지구(某官某公之柩)’로 쓰며, 여성의 경우 ‘某封某官某氏之柩(모봉모관모씨지구)’이라 사용한다. 이것은 직함과 이름의 순서를 놓고 보았을 때 직함을 먼저 사용하고 이름은 나중에 쓴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명정 서식과 같이 이름보다 직함이 앞서는 경우가 많으나 이름보다 직함이 뒤로 올 경우에는 예우를 뜻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葬은 일반적인 葬과 비교했을 때의 고인의 희생 뜻을 기리며, 유족의 예우 차원을 고려하였을 때 직함보다 이름이 앞에 표기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고 이용삼 국회의원 국회장, 고 이동원 전 외무부 장관 영결식, 고 신주범 의원 경상남도회장 영결식 등이 있었다.

〈표 3-3〉 정부기관葬 명칭 규정(안)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기관葬의 명칭은 ‘고 + 고인의 이름 + 직함 + 정부기관 명칭 + 葬’으로 사용한다. 2. 합동장례식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

라. 장례위원회

장례위원회는 정부기관의 장례를 집행할 때 임시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정부기관葬 대상자 확정과 빈소운영, 영결식, 안장식(화장할 경우 봉안)의 절차 방법 등 지원 사항 결정,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장례위원회는 장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또한 장례기간 중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 시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진행

한다.

특히, 정부기관葬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을 기관長을 하는 의미는 예우의 차원과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정부기관葬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정부기관葬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규정하는데 이것은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현실성 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장이나 국민장의 경우 너무 많은 장례위원회의 위원 구성으로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표 3-4〉 장례위원회의 구성 규정(안)

1. 정부기관葬의 장례를 집행할 때에는 그때마다 정부기관葬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기관長으로 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장례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기관長이 사망한 경우 직무대행자가 장례위원장이 된다.

〈표 3-5〉 장례위원회의 직무 규정(안)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빈소운영, 영결식, 운구, 안장식 등의 진행에 관한 사항
2. 정부기관葬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정부기관葬에 관한 중요사항

마. 장례집행위원회

장례위원회의 간사는 장례집행위원회를 운영팀, 재무팀, 홍보팀 등으로 구성한다. 장례집행위원회는 실무단이라고 말 할 수 있으며, 실제 정부기관葬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표 3-6〉 장례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1. 정부기관葬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장례집행위원회는 실제 장례절차를 추진하는 주체가 된다.
2. 장례집행위원장은 장례위원 중에서 한 명을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3. 장례집행위원회는 총무, 의식, 재무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

바. 고문

고문이란 일정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직책을 말한다. 따라서 정부기관葬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 뿐 아니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자가 고문의 역할을 수행하면 의사결정 및 장례 진행이 매끄러울 수가 있다.

〈표 3-7〉 고문 규정(안)

1. 장례위원회는 정부기관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장례위원장이 위촉한다.

사. 간사

간사는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장례위원회의 간사는 정부기관葬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표 3-8〉 간사 규정(안)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과 총무를 주무로 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총무부서 또는 운영지원의 부서장이 된다.

아. 장례기간

정부기관葬은 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3일 이내의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망의 원인이 사고이거나 기타 및 불상, 해외 및 국내외의 출장 중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장례기간은 연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장례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

현재 장례기간에 관해 명시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제4장 제12조(장일)에 따르면 ‘장일(葬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라 정하였다. 따라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葬으로 하되, 장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장례위원회는 유족과 협의를 거쳐 장례기간을 조정하도록 한다. 참고로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²⁴⁾에서 국장은 9일, 국민장은 7일로 장례일정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새로 제정된 국가장법은 장례 기간을 5일로 규정하고 있다.²⁵⁾

고인의 상태나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은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이거나 해외에서 사망하여 국내로 이송하는 과정 등의 경우를 말한다.

〈표 3-9〉 장례기간 규정(안)

1. 정부기관葬의 장례기간은 3일로 한다.
2. 고인의 상태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장례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일정은 변경할 수 있다.

자. 장례비용 지원

장례의 진행은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하며, 장례의 규모와 빈소(장례식장) 운영·영결식·운구·안장식에 따른 진행에 관한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장례

24) 법률 제1884호, 1967. 1.16, 제정됨.

25) 국가장법은 2011. 8.31부터 시행되며, 법률 제10741호, 2011. 5.30, 전부개정 됨.

지원 비용은 당해 연도 기관의 예산에서 집행 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기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장례위원회의 결정으로 예산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정부기관葬의 진행시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따르지만, 고인의 유언 또는 유가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나 고인이 종교인인 경우 그 의사에 따라 의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거나 종교의식을 반영할 수 있다.

실제 정부기관葬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모든 장례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경우와 별도로 정한 품목의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품목을 지정하지 않고 예산 내에 비용 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새로 개정되는 국가장법 시행령의 장례비용 지원 제외 범위를 보면, 조문객의 식사비용, 노제 비용, 삼우제 비용, 사십구제 비용,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자연장·봉안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 그 밖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비용으로 제한을 둘 예정으로 있다.²⁶⁾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무엇보다 장례비용은 장례의 진행이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해야 하며, 정부기관의 예산에서 집행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²⁷⁾

〈표 3-10〉 장례비용 지원 규정(안)

1. 장례 진행은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2. 장례비용 지원은 정부기관葬의 준비, 빈소운영, 영결식, 운구, 안장식에 한한다.
3. 장례비용은 당해 연도 정부기관의 예산에서 집행한다.
4. 만약 특수한 상황의 경우 장례위원회의 결정으로 예산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6)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235호 2011.7.1. 참조

27) 현재 행안부는 국가장법에 대한 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차. 장례공고

정부기관葬 공고의 의미는 정부기관葬에 대한 사항을 일반 대중에게 일간신문 또는 다른 공개적 방법으로 널리 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례공고의 방법에는 일간신문 등이 있으나 현재 정부기관葬이 3일 밖에 되지 않아서 준비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되어 생략 할 수 있다. 그래서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나 해당 기관의 연락 가능한 내부 통신망의 매체(이메일)를 이용한 경우 등은 가능하다.

〈표 3-11〉 장례공고 규정(안)

일간신문 또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장례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3. 정부기관葬 규정(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고인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며, 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족 등을 고려하여 장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기관葬으로 행 할 수 있다.

1. 현직 정부기관長이 사망한 경우
2. 소관 부처 직무에 현저한 공훈을 남기고 사망한 현직 공무원
3.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하는 사람(일반 국민도 포함한다.)

제3조 (정부기관葬 명칭) ① 정부기관葬의 명칭은 ‘고 + 고인의 이름 + 직함 + 정부기관 명칭 + 葬’으로 사용한다.

② 합동장례식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장례위원회의 구성) ① 정부기관葬의 장례를 집행할 때에는 그때마다 정부기관葬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기관장으로 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장례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기관장이 사망한 경우 직무대행자가 장례위원장이 된다.

제5조 (장례위원회의 직무)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빈소운영, 영결식, 운구, 안장식 등의 진행에 관한 사항
- 2. 정부기관葬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 3. 그 밖의 정부기관葬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 (장례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정부기관葬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장례집행위원회는 실제 장례절차를 추진하는 주체가 된다.

- ② 장례집행위원장은 장례위원 중에서 한 명을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장례집행위원회는 총무, 의식, 재무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 (고문) ① 장례위원회는 정부기관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장례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 (간사)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과 총무를 주무로 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총무부서 또는 운영지원의 부서장이 된다.

제9조 (장례기간) ① 정부기관葬의 장례기간은 3일로 한다.

- ② 고인의 상태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장례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일정은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장례비용 지원) ① 장례 진행은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 ② 장례비용 지원은 정부기관葬의 준비, 빈소운영, 영결식, 운구, 안장식에 한한다.
- ③ 장례비용은 당해 연도 정부기관의 예산에서 집행한다.
- ④ 만약 특수한 상황의 경우 장례위원회의 결정으로 예산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장례공고) 일간신문 또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장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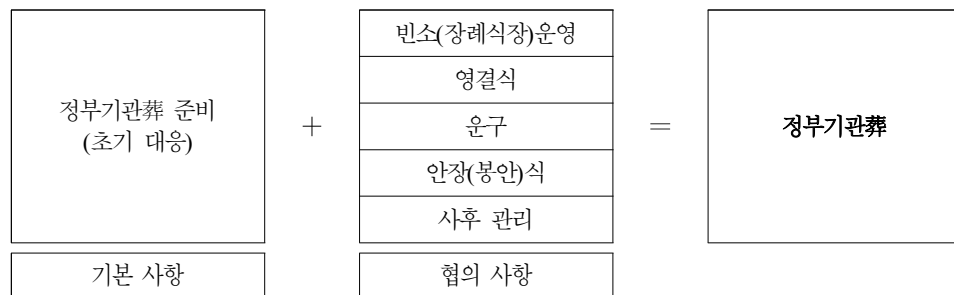
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3절 정부기관葬 운영방안(매뉴얼)

1. 매뉴얼 구성의 기본방향

- 정부기관葬 매뉴얼 구성의 기본 방향은 기본 사항과 협의 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 사항의 경우 정부기관葬을 운영하기 위한 앞선 준비 작업이라든지 공통 사항들을 담고 있다. 반면 협의사항은 정부기관葬을 시행하는데 유족 및 예산 범위 안에서 상황을 고려한 협의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 우선, 기본 사항으로는 정부기관葬 준비 단계로서 초기대응을 의미한다. 반면 협의 사항은 빈소(장례식장)운영, 영결식, 운구, 안장(봉안)식, 사후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실제 정부기관葬에서 행하는 절차적 단계를 말하며, 실제적인 정부기관葬의 핵심 아이тем들이다.

[그림 3-2] 정부기관葬의 기본방향



주: 정부기관葬의 표준의례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선호에 따른 선택은 제외 됨.

- 따라서 정부기관葬 기본적으로 기본사항을 이행하고, 협의사항에서 각각의 항목들을 선택하게 된다. 어떤 경우 안장식이 생략 될 수도 있다.

2. 정부기관葬의 흐름

〈표 3-12〉 정부기관葬의 흐름

대분류	중분류	내용	행동
정부기관 葬 준비 (초기대응)	별세보고	사망 접수를 하는데, 사망 내용 확인 및 사망자 신원 확인 인적사항 및 사망원인 확인 해당 기관 운영지원팀한테 내용전달 보고 및 유족 통지	운영지원 팀
	장례위원회 구성	장례위원회 구성; 장례위원장, 고문, 위원, 간사 장례위원회는 정부기관葬 대상자 결정, 장례 일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결정,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 의 집행에 관한 사항 결정 등을 함	간사
	장례위원회 회의진행	장례위원회 회장이 회의를 진행함. 회의자료 준비; 심의의결서는 사전에 간사가 작성 함	장례위원 장 간사
	장례집행위원회 구성	장례집행위원회는 운영팀(의전반, 빈소지원반, 영 결식반, 운구반, 안장식반), 재무팀, 홍보팀으로 구 성 역할은 정부기관葬 실무단 임무 수행	
	부고(장례공고)	부고(장례공고)는 회의가 끝난 후 곧바로 행함 공고 방법은 일간지 등을 이용 할 수 있으며, 그 상황에 맞게 내부 전상망을 이용한 알림도 있음.	간사
빈소 (장례식장) 운영	안치	고인을 일정한 장소로 운구 및 안치를 하여 빈소 설치를 할 수 있게 함. 안치는 사망 종류에 따라서 자연사인 경우와 외인 사, 기타 및 불상에 따라서 차이를 보임, 그리고 외국에서 사망 시 조치 방법이 다름. 사망진단서 발급 받음	의전반
	빈소운영	빈소 결정 빈소 설치로서 제단화 설치, 헌화, 영정사진 제작, 빈소 용품 준비 등은 장례지도사와 함께 상의하여 결정 기본적인 빈소지원(안내 등)	빈소지원 반
	염습 및 입관	장례용품 준비로써 수의, 관, 입관용품 등을 준비 염습 시신메이크업 입관	장례지도 사 주관
	성복	변복을 함 상장(완장, 리본 등) 착용을 함	장례지도 사 주관
	발인	사용하던 물건 및 사용할 문건 등을 잘 챙김 발인은 빈소 → 안치실 → 영구차로 이동함	운구반

		행렬은 빈소에서 안치실 혹은 영구차까지 운구행렬	
영결식	영결식	개식 → 국민의례 → 고인에대한 묵념 → 고복 → 약력보고 → 훈장 → 조사 → 육성녹음 청취 생시 영상 시청 → 종교의식 → 헌화, 분향 → 추모공연 → 유족대표인사 → 폐식	영결식반
운구	운구	운구 노선은 영결식 혹은 장지로 가기 전에 들리는 곳 등을 미리 정함 운구행렬 및 영구차 내 위치 등을 사전에 점검함	운구반
안장식	준비사항 안장식 진행	행사의 진행 순서 안장식 장소의 배치	안장식반
사후 관리	감사의 글	감사의 글 발송 일주일 이내 발송함	간사
	비용 정산	지원 가능한 범위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며 비용 제외는 조문객의 식사비용, 노제 비용, 삼우제 비용, 사십구재 비용,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자연장·봉안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 그 밖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비용이 있음	재무팀
	기록 관리	기록물 및 관련 미디어 자료 정리 기록물 및 관련 미디어 자료	간사

3. 매뉴얼 세부 내용

I. 정부기관葬 준비 (초기 대응)

1 별세보고

□ 사망접수

- 정부기관의 관계자가 사망했다는 연락이 오면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사망에 대한 소식을 접수 받는다.
- 접수자는 사망에 대한 내용 및 신원 등을 확인한다.
 - － 보고자로부터 사망에 대한 발생 지역(주소)과 간단한 접수 내용을 적어 둔다.
 - － 사망자의 신원 확인을 한다. 사망자의 소속과 이름, 연락처(휴대폰, 집 전화 등의 연락 가능한 번호) 등의 간단한 개인 정보를 기록해 둔다.
- 접수자는 해당 기관의 운영지원팀(운영팀 혹은 총무과)으로 연락을 한다.
 - － 사망접수 내용과 신원 확인 사항 등의 내용을 해당 기관의 운영지원팀으로 연락을 하여 내용을 전달한다.

□ 인적사항 확인

- 운영팀은 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 － 고인의 성명과 직급(계급)
 - － 생년월일, 주소, 출생지, 주요경력
 - － 사망 장소 및 일시
 - － 사망 원인
 - － 유족의 성명, 연락처(휴대폰, 집 전화 등), 주소, 고인과의 관계
 - － 그 밖의 사망 및 상황 등의 정보들을 수집

□ 사망원인 확인

- 일반적인 사망일 경우

- 사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해당 정부기관의 운영지원팀은 사망 장소(병원 또는 자택)로 이동하거나 유족과의 유선 통화 등을 통하여 사망(별세)의 원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운영팀은 기초적인 사망접수 및 고인의 인적사항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사고로 인한 사망일 경우

- 사망의 원인이 사고에 대한 것이라면 첫 번째 단계로서 사고 정보에 대한 수집이 이뤄져야 한다. 이때 현장에서 접수된 사고 현황 파악과 유관기관 상황 전파(보고) 혹은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 두 번째 단계로서 사고 정보의 분석 및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즉, 사고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발생 지점으로 대책반을 조직하여 급파를 하거나 필요하다면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세 번째 단계로서 현장 대응 및 사고에 대한 수습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때 대책반은 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이를 상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뿐 아니라 피해 상황에 대한 2차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보고 및 유족 통지

○ 보고 시기

- 상황 접수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보고계통(체계)

- 최초로 보고 받은 자로부터 운영팀 혹은 부서 담당자가 보고 받은 뒤 부서장과 해당 정부 조직의 보고 체계를 따른다.
- 이런 보고 체계는 해당 기관의 업무 분장에 따른 비상체계 보고에 따라서 절차를 밟는다.

○ 유족에게 연락을 할 때 주의사항

- 가급적 사망자에 대한 소식을 유족에게 알리기 전에 동료들이나 주변 이웃들이 먼저 알게 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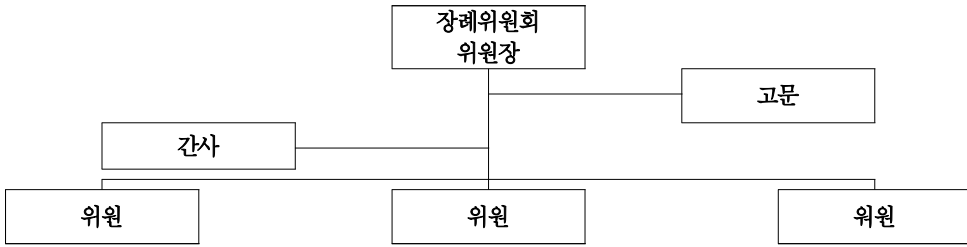
- 유족에게 알리는 것은 최대한 신속히 하되, 정확한 사망원인 및 상황을 파악 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 유족에게 알릴 경우에는 가급적 상급 직원이 직접 알리는 것이 신뢰를 줄 수 있다. 또한 유족과 접촉 시에는 사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정중히 표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을 다짐한다.
- 동료 직원에게 연락을 할 때 주의사항
 - 동료 직원들에게는 가능한 빨리 알려져서 사고 수습 및 장례준비를 조속히 준비 할 있도록 한다. 이때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정보가 조사 및 지시가 있을 때까지 누설 되지 않도록 당부한다.

2 장례위원회 구성

□ 구성

- 장례위원회는 정부기관葬을 집행할 때 임시적으로 설치되어 장례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정부기관葬의 경우 어느 한 팀만으로 운영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팀 뿐 아니라 유관부처 등의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고인 뿐 아니라 유족을 위해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장례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정부기관葬이 발생 할 때마다 위원회 소집을 한다면 시간적인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각 부처별로 협의하여 위원회 조직을 구성하여 놓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그림 3-3] 장례위원회 조직도



- 위원장
 - －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당연직으로 하며 정부기관의 장이 맡는다. 다만, 정부기관장이 사망한 경우 직무대행자가 장례위원장이 된다.
 - － 장례위원장은 장례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총괄하고, 장례위원회를 대표한다.
- 고문
 - － 고문은 역대 정부기관의 장이나 타 정부기관의 장, 장례 전문가(교수 등)가 맡는다. 그리고 고문의 위촉은 장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
 - －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기관의 실 혹은 국의 부서장이 책무를 맡는다.
- 간사
 - － 간사는 1인으로 하며, 운영지원팀의 담당자가 그 역할을 맡는다.
- 장례위원회 구성의 예

〈표 3-13〉 장례위원회 구성 예

구분	내용
장례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1명)
부위원장	제1·2차관 (2명)
장례위원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조직실장, 인사실장, 정보화전략실장, 재난안전실장, 지방행정국장, 지방재정세계국장, 지역발전정책국장, 감사관 (10명)

자료: 2011년 7월 6일 행정안전부葬

□ 역할

- 정부기관葬 대상자 결정
- 장례의 일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결정
 - － 빈소, 운구, 영결식 등
-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결정
- 기타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 － 그 밖의 장례기간 중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 시 장례위원회의 결정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고인이 해외나 섬·산간 지역에서 이송되어 올 경우 장례기간이 특별히 길어 질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장례위원회에 결정에 따른다.

□ 장례위원회 소집

- 장례위원회 소집은 정부기관葬 운영 규정에 따라 소집한다.
- 장례위원회 간사는 고인에 대한 사망 소식 및 정부기관葬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위원장 뿐 아니라 위원, 고문에게 간략하게 보고하고, 회의에 대한 안내를 한다.
-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회의 참석자들을 파악하고 참석을 독려한다.

□ 회의자료 준비

- － 장례위원회 개최를 위한 회의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
- － 회의 자료 내용에는 기본적인 고인에 대한 인적사항, 장례명칭, 장례기간, 영결식 및 안장식의 일시와 장소, 장례위원회 구성, 조치사항 등을 포함시킨다.
- － 과거 정부기관葬 선례는 회의의 참고 자료로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그뿐 아니라 유족과 고문 등의 의견을 회의 자료에 반영하는 것도 좋다.
- － 이때 중요한 것은 정부기관葬에 대한 심사의결서 초안을 만들어 내야 한

다.

〈표 3-14〉 회의자료 예

구분	내용
의결주문	정부기관葬으로 거행 할 것을 의결함
인적사항	고인에 대한 인적사항 - 이름, 생년월일, 소속 및 직급 등
장례명칭	고 + 고인의 이름 + 직함 + 정부기관 명칭 + 葬
장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일)
영결식	일시 : ○○○○년 ○○월 ○○일 ○○시 장소 : ○○○○○○○○○○
안장식	일시 : ○○○○년 ○○월 ○○일 ○○시 장소 : ○○○○○○○○○○
장례위원회 구성	장례위원장 : ○○○ (1명) 장례위원 : ○○○, ○○○, ○○○, ○○○, ○○○, ○○○ (10명 이내) 간사 : ○○○ (1명)
조치사항	기관長 명의 조화환
참고자료	과거 선례, 유족의견

3 장례위원회 회의진행

□ 회의 진행

- 장례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고문 등이 회의 장소에 모이면 장례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 모든 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회의 진행 규칙들을 제시하고, 의사일정을 따르며 참석자들이 토론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회의 진행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한다.
-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간사로부터 보고된 사안들에 대해서 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한다.

□ 의사결정

○ 흐름

- 장례위원회의 의사결정 흐름은 제안자(장례위원회 간사 등)가 제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한 뒤에 의문점이 있는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진다. 그리고 토론 후 의사결정을 한다.

[그림 3-4] 의사결정 흐름



○ 제안 설명 및 질의

- 장례위원회 간사는 정부기관葬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 예를 들면 정부기관葬의 실행 여부와 장례 일정 및 영결식 장소, 예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모인 위원들은 이러한 제안 설명에 질의를 하여 의안에 대해 의문점을 물어서 제안자가 답변을 한다.
- 고문은 상황에 따라서 보충 설명을 통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토론

- 먼저 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발언권을 먼저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찬성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이 좋다. 이후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을 다른 위원에게 권유하는 뜻으로 동의를 얻는다.

○ 결정

- 질의 및 토론이 끝나게 되면 안건에 대한 결정²⁸⁾을 하게 되는데 표결은

28) 일반적으로 결정의 종류는 과반수와 3분의 2이상, 종다수 방법이 있으며 이런 방법은 결정하는 참석자의 수를 어떻게 하느냐이다.

1. 과반수 결정 방법은 안건에 대해서 결정자가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찬반을 가르는 것이다.

2. 3분의 2이상 결정 방법은 결정자가 2/3이상이 참석하여 찬반을 가르는 것을 말한다.

3. 종다수 결정 방법은 종족수와 관계없이 찬성과 반대를 비교하여 많은 쪽의 의견이 결정되는 방법이다.

종다수의 방법을 선택하며 구두표결을 한다. 이것은 회의 결과를 빨리 실행에 옮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심의의결서

○ 회의 결과보고서

- － 장례위원회 간사는 이렇게 장례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 및 심의 안건 등을 담은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심의의결서는 간사가 사전에 작성하는데 이때 예측 가능한 사항들을 담아서 초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 － 즉, 정부기관葬의 심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부기관葬의 계획 및 방침들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한 위원들의 명단이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 심의의결서 사례 예시

〈표 3-15〉 심의의결서 표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의 안 번 호</td> <td style="width: 50%;">제 〇〇〇〇호</td> </tr> <tr> <td>의 결 연 월 일</td> <td>〇〇〇〇. 〇〇. 〇〇. (제 〇〇회)</td> </tr> </table>	의 안 번 호	제 〇〇〇〇호	의 결 연 월 일	〇〇〇〇. 〇〇. 〇〇. (제 〇〇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riting-mode: vertical-rl;">의결사항</div>
의 안 번 호	제 〇〇〇〇호				
의 결 연 월 일	〇〇〇〇. 〇〇. 〇〇. (제 〇〇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0 auto; width: 80%;"> <p>고 + 고인의 이름 + 직함 + 정부기관 명칭 + 葬</p>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제 출 자</td> <td style="width: 70%;"></td> </tr> <tr> <td>제출 연월 일</td> <td></td> </tr> </table>		제 출 자		제출 연월 일	
제 출 자					
제출 연월 일					

〈표 3-16〉 심의의결서 내용

<p>1. 의결주문 및 제안이유</p>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명칭 / 장례기간 - 영결식 / 안장식 - 장례위원회 구성 / 장례집행위원회 구성
<p>3. 주요 토의 과제</p>
<p>4.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 / 예산조치

〈표 3-17〉 심의의결서 서명서

<h2>심의결과</h2>					
<p>심의 일시 : ○○○○년 ○○월 ○○일</p>					
<p>심의 결과: ○○○○의결 사항에 대한 시행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p>					
구분	직책	직급	성명	의견	서명
위원장					
위원					
간사					

4 장례위원회 심의 내용

□ 정부기관葬 대상자

〈표 3-18〉 정부기관葬의 대상자

구분
1. 현직 정부기관長이 사망한 경우
2. 소관 부처 직무에 현저한 공훈을 남기고 사망한 현직 공무원
3.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하는 사람 (일반 국민도 포함)

○ 대상자 결정 방식

- 정부기관葬의 대상자 결정은 일반적으로 중앙행정 기관의 경우 실·국장으로 구성된 장례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대상자 결정 방식 예

- 국토해양부葬의 경우 대상자선정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1차관)과 10인이내의 위원(실국장급)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목포시葬의 경우 장의심의위원회에서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의 제청이나 시민·관련 단체의 추천으로 장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였다. 장의심의위원회 구성은 (장의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市長), 부위원장 1명, 15명이내의 위원(목포시인사위원회위원, 인사위원회위원 외의 국·소·단장)으로 구성되었다.²⁹⁾

○ 대상자 선정 시 고려할 사항

- 대상자 결정은 생전의 공적과 직위, 사망 당시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

29) 제세한 정부기관葬 선정기관 및 결정방법은 〈표 2-3〉 참조바람.

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현저한 공훈이란 말의 의미는 그 상황을 고려하여 장례위원회에서 결정을 따른다.³⁰⁾
- 또한 일반인 즉, 국민이 정부기관葬 대상자로 포함을 되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정부기관葬 명칭

- 정부기관葬의 공식적인 명칭은 ‘고 + 고인의 이름 + 직함 + 정부기관 명칭 + 葬’으로 사용한다.³¹⁾
- 이러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고 이용삼 국회의원 국회의장, 고 이동원 전 외무부 장관 영결식, 고 신주범 의원 경상남도회장 영결식 등이 있었다.

〈표 3-19〉 정부기관葬 명칭

고 + 고인의 이름 + 직함 + 정부기관 명칭 + 葬

30) 공훈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1. 현저한 공훈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는 현직 공무원이 재해 복구 등의 당면 현안을 추진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하며, 다른 예로서 사무실에서 업무 수행 중에 쓰러져 사망한 경우가 있다.
2.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인데, 예를들면 우체부가 우편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혹은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진화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다.

31) 예외적으로 군대의 경우 직함과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 사용하기도 한다.

[그림 3-5] 정부기관葬 명칭 예



주: 합동葬의 경우 정부기관葬의 명칭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 정부기관葬의 기간

- 정부기관葬은 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3일 이내의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사망의 원인이 사고이거나 기타 및 불상, 해외 및 국내외의 출장 중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장례기간은 연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장례위원회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
-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사망의 원인이 사고이거나 기타 및 불상인 경우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고인을 운구하거나 장례를 진행할 수 없다. 또한 해외 및 국내외의 출장 중에 사망한 경우 국내로 이송할 때까지 장례지도사(Funeral Director) 섭외, 위생처리(방부처리, Embalming), 항공예약, 행정처리 등의 문제들이 때로는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될 수 있다.

〈표 3-20〉 정부기관葬의 장례기간

구분	장례기간	비고
정부기관장의 표준 장례기간	3일	
고인이 특수한 상황인 경우 예를 들면, 고인의 국외에서 사망한 경우	협의가능	장례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기간 변경이 가능

〈표 3-21〉 정부기관葬의 장례기간 예

장례기간	내용	비고
3일인 경우	1. 고 권영준 조사과장 행정안전부葬 2. 고 이용삼 국회의원 국회葬 3. 고 박용교 전 서울국토청도로서설국장 국토부葬	
3일 이상인 경우	1. 고 김병화 안양시청葬 (4일) 2. 고 오근섭 前양산시장 양산시葬 (5일) 3. 고 박태영 前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葬 (5일) 4. 고 천암함 용사 합동영결식 (33일)	천암함 용사 합동 영결식의 경우 사고 발생은 3월 26일이며 이후 33일째에 합동영결식을 진행하였음.

□ 정부기관葬의 영결식 장소

- 정부기관葬의 영결식 장소는 장례의 품격에 맞으며 사람들이 모여 추모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정부기관葬의 영결식 장소로서 청사마당(회의장)과 장례식장의 영결식장, 제3의 장소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유족과 협의 후 장례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는 장소로 결정한다.

〈표 3-22〉 정부기관葬의 영결식 장소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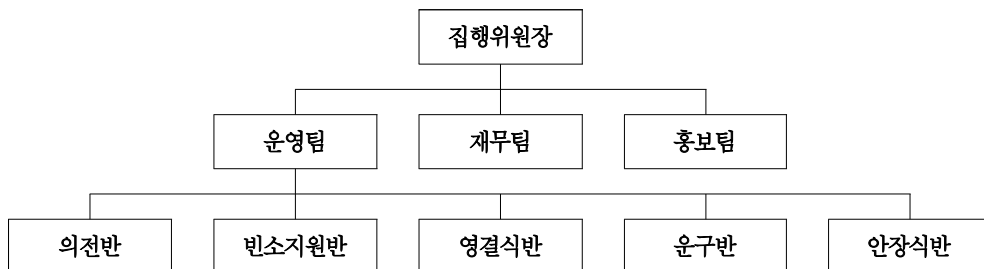
기관	장례명칭	성명(직위)	영결식 장소	참석인원
국토부	국토부장	양준승 (전 규제법무담당관)	천주교 잠원동성당	200명
	국토부장	박용교(전 서울국토청도로시설국장)	서울아산병원	200명
농식품부	농식품부장	김영준외 6인 (전 지역개발과장)	삼성 서울병원	1,000명
산림청	산림청장	박용규외 2명 (전 전문계약직)	광주 금호장례식장	300여명
	산림청장	강현종외 2명 (전 전문계약직)	충북대 장례식장	200여명
경기도	경기도청장	이주영 (지방행정사무관)	경기도청운동장	1,000명
	안양시청장	김병화(기능8급)	샘안양병원 장례식장	150명
	의왕시의회 장	박근석(의왕시의회의장)	의회청사 앞	800명

5 장례집행위원회 구성

□ 구성

- 장례집행위원장은 장례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위촉하며, 정부기관葬에 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추진한다.
- 장례집행위원회는 운영팀, 재무팀, 홍보팀으로 구성하며, 운영팀은 의전반, 빈소지원반, 영결식반, 운구반, 안장식반으로 구성한다.

[그림 3-5] 장례집행위원회 조직도



□ 역할

- 장례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는 정부기관葬의 역할 분담 등을 정해야 한다. 즉, 빈소운영, 영결식, 안장 및 봉안식 중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시행할 것인지 추진 할 내용들을 정한다.
- 장례집행위원장
 - － 장례위원회에서 논의되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세부적인 내용들을 장례집행위원회의 소속 팀원들과 논의를 시작한다. 이때 논의 되는 내용들은 각 팀별로 실행해야 할 일들 뿐 아니라 타 기관 협조 사항, 장례지도사 섭외, 유족 상담 등등의 구체적인 것을 포함한다.
- 운영팀
 - － 운영팀은 정부기관葬의 운영을 총괄한다.
 - － 의전반은 유족과의 협의 업무를 맡는다. 즉, 유족과의 창구 일원화로서 역할로 의전반이 맡는다.
 - － 빈소지원반은 장례지도사와 상의하여 빈소설치(제단설치, 영정사진 제작, 빈소 용품 준비 등)을 및 조문객을 안내한다.
 - － 영결식반은 영결식에 관한 사항들을 맡는다.
 - － 운구반은 빈소 운구, 그리고 장지나 화장장으로의 이동시 운구 등을 기본적으로 관리하며, 그 밖의 이동에 관한 사항들을 맡는다.
 - － 안장식반은 안장식과 관련된 사항을 맡는다.
- 재무팀
 - －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챙긴다.
 - － 비용 정산 시 지원 되는 범위와 그렇지 않는 범위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 홍보팀
 - － 부고 및 정부기관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 － 대외적으로 언론 대응 및 홍보를 맡는다.
 - － 빈소 운영, 영결식, 안장식 등의 각 종 현황들을 수집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한다.

6 장례공고

□ 방법

- 장례공고는 시간적 여유를 두어 공고하기 보다는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 곧바로 행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공고를 할 경우 개별 부고는 생략해도 좋다.
- 공고는 일간지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되, 그 상황에 맞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 정부기관葬의 장례기간이 3일로서 짧은 기간에 일간지 등에 공고를 내는 것이 무리인 경우에는 기관내의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공고라든지 다양한 매체(이메일 등)를 통한 방법도 강구 할 수 있다.

□ 내용

- 장례공고의 내용에는 빈소 장소 및 연락처, 발인·영결식·안장식 장소 및 일시는 포함하며, 기타 사항 등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함께 공고한다.

□ 장례공고 예

행정안전부葬 공고

고 ○○○님께서 ○○○○년 ○○월 ○○일 ○○시에 별세하여,
행정안전부葬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1. 빈 소 : ○○○○○○	연 락 처 : ○○○○○○
2. 발 인 : ○○○○○○	일 시 : ○○○○○○
3. 영 결 식 : ○○○○○○	일 시 : ○○○○○○
4. 안 장 식 : ○○○○○○	일 시 : ○○○○○○

○○○○년 ○○월 ○○일
장례위원회 위원장 ○○○

II. 빈소(장례식장)운영

1 안치

□ 개요

- 고인을 일정한 장소(장례식장 안치실)로 운구 및 안치를 하여 빈소를 설치한다. 운구반은 고인과 함께 동행하며, 유족과 함께 고인의 운구 및 안치를 확인해야 한다.
- 장례식장 안치실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고인을 모실 차량(이송차량)을 준비시킨다.³²⁾ 병원에서 운명 하실 경우는 간호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문의

32) 이때 고려할 사항은 장례식장의 빈소 사용 가능 여부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안치를 할 경우

하고, 자택에서 운명하신 경우는 응급실을 통해서 의사의 검안 후 사망 진단 후 장례식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 이러한 사항은 유족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운구반은 이용 가능한 장례식장 연락처, 고인의 신분증³³⁾, 영정사진으로 사용할 사진 등을 챙기도록 돕는다.

□ 안치

- 운구반이 안치실로 운구한 후 안치용 스트레처(Stretcher)³⁴⁾에 고인을 눕힌다.
- 고인의 부패방지 및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한 위생용품을 사용하거나 수시³⁵⁾를 거둔 후 안치냉장고 안에 고인을 정중히 모신다.
- 의전반은 유족과 함께 장례지도사가 고인의 인적사항 (고인 성명, 성별, 연령, 상주 성명, 사망 장소)을 적은 안치냉장고³⁶⁾를 함께 확인한다.

□ 사망 종류에 따른 안치 방법

- 자연사인 경우는 담당 진료의사에 의하여 사망 신고 후 고인을 안치 할 수 있다.
- 외인사·기타 및 불상의 경우는 반드시 경찰 신고와 함께 검사 검시 후 고인 안치가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담당검사의 수사지

보통 바로 빈소를 차리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빈소가 없다면 다른 장례식장으로 이동을 하거나 빈소가 이용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 33) 고인의 신분증은 신원확인 및 장례식장 이용 시 필요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영정사진은 장례식으로 고인을 운구하고 안치하면 곧 바로 빈소 설치가 이뤄져서 다시 집에 오는 번거로움과 신속하게 빈소를 차리기 위하여 함께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 34) 이것은 물건을 실어 나르는 기구의 하나로써 네모난 거적이나 천 따위의 양면에 막대기를 달아 앞뒤에서 맞들게 되어 있으며, 장례식장에서는 스테인레스로 만든 것을 사용하고 있다. 같은 말로는 들것(Litter)이 있다.
- 35) 수시(收屍)는 시신을 거둔다는 뜻으로서 고인이 굳기 전에 몸을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고인이 사후강직으로 인하여 굳기 전에 곧게 바로 잡음으로서 염습을 행할 시에 수월하게 수의를 입힐 수 있다.
- 36) 안치와 냉장고의 합성어로서 장례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이다. 냉장고의 의미는 식품이나 약품 따위를 차게 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저온에서 보관하기 위한 상자 모양의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안치냉장고는 일정기간 동안 고인이 부패하는 진행을 늦춘다.

회에 따라 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더욱이 주말이나 공휴일은 부검을 실시할 수 없어 장례기간이 길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운구반은 이러한 것을 숙지한 뒤에 장례기간 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할 정부기관葬 진행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표 3-24〉 외인사·기타 및 불상인 경우 대처방안

구분	내 용	비고
외인사·기타 및 불상인 경우	응급실에서 담당검안의가 사망 신고 후, 해당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가 유족의 입회하에 고인을 안치실로 모신다. 시신의 손패가 일어나서는 아니 되므로 수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경찰 신고 검시필증 필요

○ 외국에서 사망시 조치 방법

- 외국에서 임종한 경우 운구반에게 연락하여 운구에 협조 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족과 같이 동행하여 항공기 도착 시간에 맞추어 미리 차량을 준비한다.
- 대개의 경우 외국에서 고인을 모실 경우 자국내 공항에서 공항직원이 고인을 차량까지 모시기 때문에 운구반은 이런 상황을 숙지하고, 장례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³⁷⁾

□ 사망진단서 준비

-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이송 할 때 사망진단서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좋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운구 후 빠른 시간 내로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 화장장 또는 매장신고를 할 때 반드시 첨부 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망진단서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망진단서는 사망신고시에도 필요하며, 특

37) 고인의 사망원인에 따라 감염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족의 경우에도 접촉을 금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공항도착 당일에 해당 국가에서 발급 받은 사망확인서 혹은 사망진단서 등을 필요의 경우 공증 받도록 안내한다.

히 장례식장 사무실에 내야 되는 경우에는 고인에 대한 사망 원인, 종류를 확인 뿐 아니라 염습 및 입관을 하기 전에 장례지도사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히 제출을 해야 한다.

- 사망진단서는 고인을 진료한 담당의사의 소속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주며, 사체검안서의 경우 검안을 담당한 의사의 소속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준다. 경황이 없는 유족을 대신하여 의전반은 사망진단서 발급을 도와준다. 사망 진단서의 용도는 〈표 3-25〉와 같다.

〈표 3-25〉 사망진단서 제출처 및 용도

용도	제출처	부수	비고
화장신고, 매장신고	화장장, 매장지 관할 읍면의 사무소	1부	원본
사망 신고 시 ³⁸⁾	주소지 관할 소재지의 읍면의 사무소	1부	원본(30일이내)
사망의 종류 및 기재사항 확인	장례식장 사무실	1부	원본 대조필
장례에 따른 휴가신청	회사 및 학교	각 1부 씩	원본 대조필
보험금 신청 등	보험회사	각 1부 씩	원본

38) 사망신고(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를 말한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신고적격자의 자격으로서 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게을리 한 때에도 과태료 처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망 신고의 경우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따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 그 재판 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빈소 결정

- － 빈소 결정은 유가족 대표와 장례집행위원장, 장례지도사가 함께 협의하여 예산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이때 예상 조문객을 추정 시 일반적으로 저녁에 한꺼번에 몰린다는 것을 인지하여 빈소의 크기를 결정 하는 것이 좋다.
- － 장례식장의 빈소는 그 넓이에 따라 요금이 차등적용 되는데, 해당 장례식장에 각 빈소별 넓이 및 요금표를 참조하여 결정한다.³⁹⁾

□ 빈소설치

○ 제단화 설치

- － 제단 장식은 조문을 받는 빈소의 넓이에 차이가 있으며, 제단화는 다양한 종류의 모양과 크기가 있으므로 정부기관葬이란 것을 고려하여 유가족 대표와 장례집행위원장, 장례지도사가 함께 협의 후 결정한다.
- － 일반적으로 제단 장식의 설치는 1~2시간 이상의 작업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찍 조문 온 조문객이 있다면 영정부터 준비 후 조문을 받을 수 있으나, 가급적 준비가 끝난 후에 조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9) 빈소 요금의 적용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빈소 사용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이상의 경우 1일 요금으로 산정하며, 미만의 경우 시간당 요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발인 일정이 확정되면 요금의 산정이 가능함으로 해당빈소의 요금을 기록 후 추후 소요예산에 반영이 가능하다.

[그림 3-6] 제단 장식 예



- 생전에 수여 받은 훈장이 있는 경우 훈장은 제단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놓는다. 다만 전(奠)⁴⁰⁾이나 상식(上食)⁴¹⁾ 등이 제단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감안하여 놓는다.
- 훈장, 추서가 있는 경우에는 영결식에서 수여하도록 한다.

○ 헌화

- 헌화는 향을 피우지 않는 조문객이 사용하거나 고인의 애도를 위해서 예의로 제단 위에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헌화를 준비한다.
- 헌화의 의미는 헌화 곧 꽃을 바치고 꽃을 선사하는 것은 사람들의 존경이나 畏敬(외경)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난 것이다. 그러한 꽃은 어떤 신앙의 대상자에게 소망을 빌 때 사용 되었다.⁴²⁾
- 헌화 방향에 관해서는 꽃송이가 제단의 영정 방향으로 향하는 경우와 조문객 방향으로 향하는 경우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헌화의 방향은 꽃송이가 영

40) 전은 장례 전 영좌(靈座) 앞에 간단한 술과 과일을 차려 놓는 예식을 말한다.

41) 상식은 상가(喪家)에서 아침저녁으로 제연(几筵, 죽은 사람의 영좌(靈几)와 그에 딸린 모든 것을 차려 놓는 곳) 앞에 올리는 음식을 말한다.

42) 꽃을 신에게 바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바쳐 신에게 귀의하고 복종할 것을 뜻한다. 즉 아름다운 꽃을 神佛(신불), 聖賢(성상) 또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 등에게 바침으로써 자신의 존경, 외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다.

조선시대 궁궐에서 꽃은 존경과 축하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헌화의식이 있었고 이는 일정한 격식 하에 순서 절차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왕실에서는 높은 분에게 진화(進花, 獻花, 供花)의식이 있었고 문무백관 이하에게 꽃을 나누어 주는 반화(頒花)의식이 있었다. 그리고 꽃잎을 뿌렸다는 화려한 개념의 산화의식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연회 외의 헌화에 대한 것으로는 제례에서 제사상에 직접 꽃을 바쳤다는 기록은 보기 힘들다. 그리고 장례에 쓰여 진 꽃을 살펴보면, 흔히 꽃상여라고 부르는 상여 장식의 꽃이 쓰이는데, 이는 한번 쓰고 태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로 지화를 이용하였다고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을 뿐이다.

정을 향하며, 헌화 후 분향을 하는 것으로 정리한다.⁴³⁾

○ 영정사진

43) 이주연은 “꽃이란 근본 개념에서 그 의미는 본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꽃의 아름다움이란 모양과 향기로 볼 수 있다. 향기는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나 맡을 수 있다. 향기를 고인에게 드린다면 굳이 뿌리가 고인에게 향하지 않아도 향기는 전달되는 것이다. 비록 그 꽃이 고인에게 드리는 것이지만 보는 사람은 사자가 아닌 생자인 것이다. 제단장식을 할 때에도 전체 꽃이 표현해내는 의미도 생자를 향해 표현되고 있지 사자를 향해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드린다는 의미는 받는 사람이 무엇이든 손에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받는 사람이 안전하게 잡기 좋게 드려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다음의 의견도 보충 하였으니, “헌화에 대한 음양오행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음양의 위치로 꽃을 설명 하면 뿌리는 땅속에 있었던 부분이기애 음이고, 꽃송이는 하늘을 향해 올라온 것으로서 양이 된다. 오방색에서 백은 死(사)이고 청은 生(생)으로 구분 된다. 이의 색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효자의 마음이 아직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차마 백인 꽃송이를 고인에게 드리지 못하고 청인 뿌리를 드리는 것이다. 학문적 측면에서 獻(헌)이란 ‘드린다’, ‘바친다’라는 의미로 두 손을 공손히 하여 공경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영결식 때 행하는 의식으로 아직 우체 전으로 죽음을 인정 할 수 없기에 차마 죽음의 색인 백을 드릴 수 없는 효자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설명 하고 있으며, 헌화법에 합의가 쉽지 않다면 우리 전통 방식의 향아리 도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황근식은 “현재 미국이나 일본에서 헌화 하는 방법은 꽃송이의 손잡이가 영정사진 쪽을 향하는 방법이고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꽃송이가 영정사진 쪽을 향하는 방법으로 헌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헌화가 서구에서 유래된 의례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정서와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는 꽃송이가 영정사진 쪽을 향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 하였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해결책의 근거로 김시덕의 전통상례의 구조적 분석에서 “우제는 혼과 신주를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상례의 절차상 대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제를 지내기 전까지 영좌 앞에서 행해졌던 奠에서는 상주 대신 축관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절차 역시 간단하게 진행되었다. 奠物의 진설방법 역시 살아 있는 사람의 식사 형태로 동쪽을 上位로 하는 右設로 차린다.”라고 하였다. 이는 곧 상례의 절차상 대전환점인 우제 이전에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곧 헌화는 화장, 매장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영정(고인)에 뿌리가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헌화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음양을 따지고 위치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주연의 의견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의 것이 있고, 황근식의 사례 역시 미국에서 꽃송이가 조객 쪽으로 하고 뿌리 쪽이 영정 쪽으로 한다는 사실은 근거가 없다. 그리고 헌화에 대한 인식 출발이 잘못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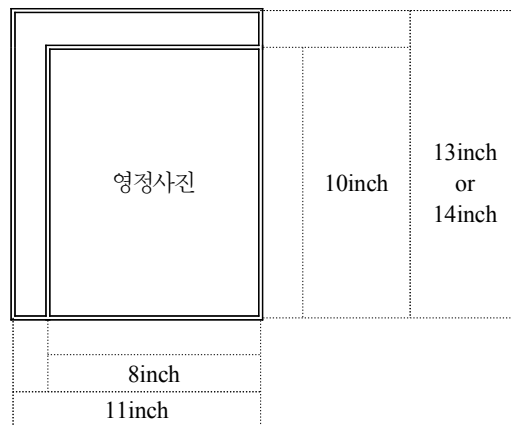
즉, 헌화를 하는 것은 한 마디로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이와 유족의 입장, 아직 죽음에 이르지 못한 고인의 상태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헌화는 다시 말하지만 추모하는 마음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위해서 이다. 헌화는 꽃의 아름다움과 향을 드리는 일로서 존경과 사모의 마음을 담은 것이다. 그러므로 받는 사람 쪽으로 꽃송이가 향해야 한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 꽃을 줄 때 어떻게 주는가? 꽃을 반듯하게 세워서 주면 받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아래쪽 줄기를 잡아 받는 형태가 된다. 이때 받는 사람이 꽃줄기를 잡았다고 하여 줄기 쪽이 받는 사람 쪽으로 가게 하였다고는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꽃을 주는 사람은 꽃송이의 화사한 모습이 가장 잘 보이고 향을 가장 잘 맡을 수 있는 방향으로서 꽃송이를 위로 가게 주게 되는 것이다.

영정 앞에 꽃을 바치는 것 역시 이와 동일한 개념이다. 사실 꽃을 꽃꽂이 세워서 향을 받들 듯 받든(奠) 다음에 자연스럽게 영정 앞에 내려놓는다고 생각해 보면 된다. 꽃송이가 당연히 영정을 향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상징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김시덕은 헌화의 경우 절을 하지 않는 서구식의 의식으로 기독교 계열의 신도들의 상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의 상례에서는 향을 피우고 고인을 향해 절을 하고, 상주와 큰절로써 인사하며 상주의 슬픔을 위무하는 것이 문화적 전통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적 충동에 따라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는 헌화 하고 분향 하며 절도 하는 형태의 절충형으로 진행 되는 경우가 많다. <중략> 이러한 혼합 중복 현상이 일어난 것은 문상을 할 때는 분향하고 절을 해야 한다는 문화적 전통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모습이며, 분향과 재배 하지 않은 종교적 문상객에 대한 현실적 배려에서 헌화 후 분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리한다.

- 제단 장식과 동시에 영정사진을 제작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경우 8R⁴⁴⁾(8inch⁴⁵⁾X10inch), 11R(11inchX13inch or 14inch) 크기가 많으며 사전에 제작한 경우 그 사진을 사용하며, 액자가 없을 경우 장례식장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 8R과 11R 사이즈는 장례식장의 제단에 올리는 영정사진의 크기이다. 만약 영결식에서 영정사진이 필요 할 경우 더 큰 크기의 영정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사전에 더 큰 사진을 준비토록 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20R 정도의 크기를 사용하며, 이상의 것은 주문·제작해야 할 것이다.
- 사진을 제작하여야 하는 경우 원본사진은 고인의 얼굴이 선명하고 크게,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의 사진으로 제작한다. 단 고인의 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또한 유족과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유족은 고인의 얼굴이 크고 선명한 사진을 준비하도록 한다.

[그림 3-7] 영정사진 사이즈



○ 빈소용품

- 빈소운영을 할 때 필요한 용품인데, 예를 들면 위패, 축문, 향, 초, 액자리

44) R의 의미는 Rectangular로서 직사각형을 의미한다.

45) 인치는 야드파운드법에 의한 길이의 단위를 말한다. 1인치는 1피트의 12분의 1, 1밀(mil)의 1,000배로 약 2.54cm에 해당한다.

본, 차량리본, 예식장갑, 부의록 등을 준비한다.

- 차량리본과 예식장갑은 발인을 할 때 필요한 용품이며, 나머지 물품들은 빈소가 운영됨과 동시에 필요한 용품들이어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 빈소지원

○ 근조리본 준비

- 고인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서 정부기관葬을 진행하는 동안 조문객 및 장례 위원들이 패용 할 수 있도록 입구나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하도록 한다.

[그림 3-8] 근조리본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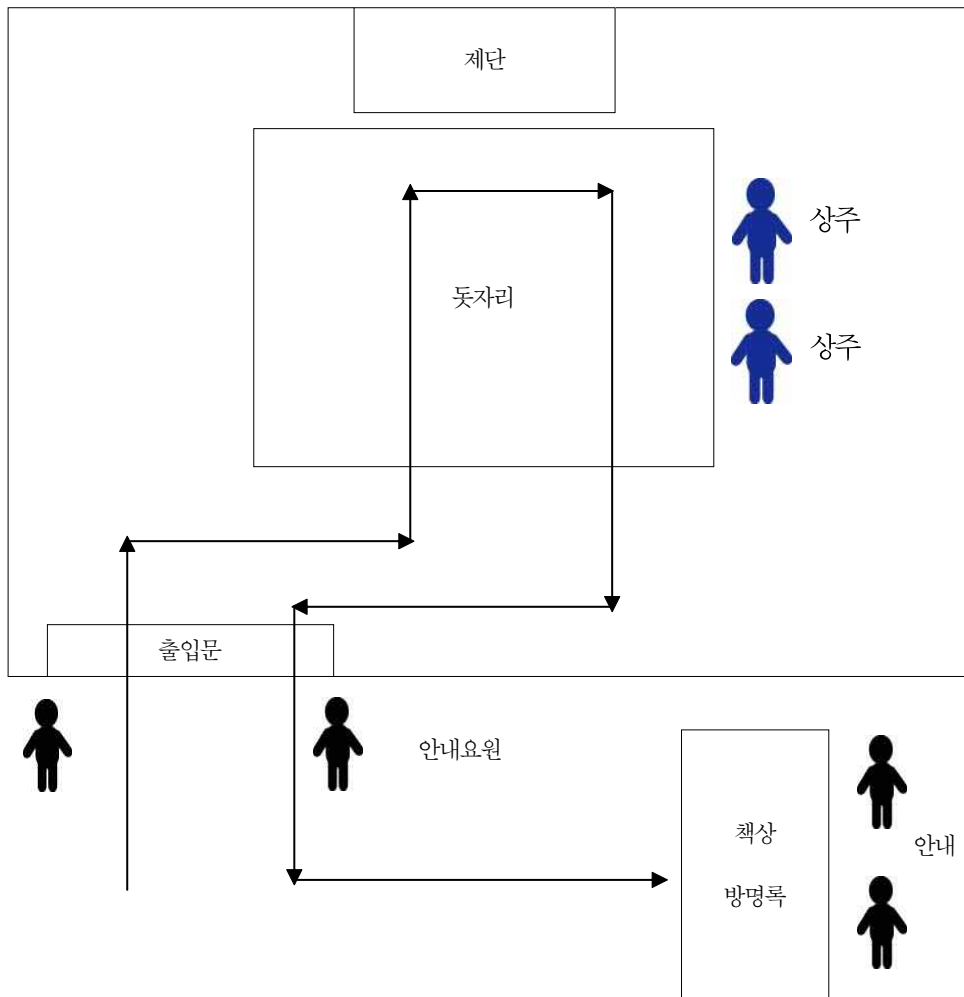
장례위원회 및 관계자

안내요원

○ 안내요원 배치

- 장례 기간 동안 운영팀 중 빈소지원반을 기본적인 안내 및 빈소·접객실 지원을 위해서 배치한다.
- 조문객 안내와 접대, 조문록 비치하여 기록 정리를 하며, 장례지도사와 연계가 필요하다면 유족과 협의 후 지원하도록 한다. 이것은 해당 기관의 인력지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림 3-9] 빈소(분향소) 안내요원 배치



- 대개의 경우 상주의 위치는 출입문을 바라보고 대각선 위치에 선다. 그리고 안내요원들은 출입문에 서서 조문객의 순서를 정렬하거나, 조문을 마친 조문객을 접객실로 안내한다. 이런 안내요원들은 사서의 기능도 할 수 있다.
- 이렇게 안내요원들을 배치하는 이유는 정부기관葬의 성격상 고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의 조문 뿐 아니라 타 기관과 일반 시민이 조문을 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 대개의 경우 조문의 순서는 맨 처음 빈소 도착하여 빈소에 들어서면 우선

제단 앞에서 분향 또는 헌화를 한 후 고인에게 두 번 절하거나 종교별 의식을 행한다. 그런 다음 상주와 맞절을 하거나 상주의 종교에 맞는 예를 표하고 난 뒤에 다시 빈소를 나와 방명록에 서명한다. 그리고 난 뒤에 빈소 옆의 접객실로 이동하게 된다.

- 만약 단체 조문일 경우에는 빈소에 모두 들어가 함께 조문을 하되, 예는 단체의 대표만 행한다.

□ 안내요원 교육

○ 조문 지원 예절

- 빈소에 조문을 온 조문객을 위하여, 먼저 빈소의 안내요원은 상주에게 알린다. 그리고 빈소에서 조문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빈소에서 영정이나 상주에게 예를 표하고 난 뒤에 다시 빈소를 나오면 접객실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

○ 안내 요원의 복장

- 남성의 옷차림은 상하 흑곤색 계통의 단색 정장(흰색계통의 와이셔츠에 검정넥타이) 착용을 한다. 그리고 구두는 가능한 검정색으로 통일하며, 될 수 있으면 검정색 양말을 신도록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흰색장갑을 착용한다. 또한 헤어스타일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반지와 목걸이 등의 악세사리 착용을 금한다.
- 여성의 경우 상의와 하의가 가급적 같은 색 계통의 투피스를 입거나 재킷의 앞여밈을 열지 않은 정장을 입는다. 신발은 가능한 검정색으로 통일한다. 그리고 단정하고 수수한 느낌을 주는 화장(화장은 자연스러우며, 화려하지 않고, 차분하게 함.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은 피함)을 한다. 헤어스타일은 단발머리가 아닐 경우, 흘러내리지 않도록 머리망을 이용해 머리를 묶는다. 마찬가지로 머리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또한 반지, 귀걸이 등의 악세사리 착용을 금한다.

○ 안내요원의 어법

- 말씨는 명령형이 아닌 설명형, 권유형 어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오른

쪽으로 가십시오”보다는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사용한다. 또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로써 응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 안내를 받을 방법까지 반드시 알려주도록 한다. 예를 들면 “출입문을 통과하신 후 오른쪽 2층 출입구로 가시면 됩니다”이다. 그 뿐 아니라 과도한 미소는 삼가며 표정을 온화하게 한다. 대기 중 짝다리로 서지 않으며,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3 염습과 입관 (장례지도사 주관)

□ 개요

- 염습과 입관은 고인을 알코올 솜 등으로 깨끗하게 목욕 시킨 후 준비된 수의로 갈아입혀 드리고 고인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눈 후 관에 모셔 안치를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장례기간 중 엄숙한 절차이다. 이것은 장례지도사가 행하며, 사전에 정해진 수의, 관, 기타 장례용품 등을 준비한다.

□ 염습과 입관 용품

○ 수의

- 수의를 사전에 준비한 경우 준비된 수의로 고인에게 입혀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는 장례식장에서 판매하는 수의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후자의 경우 유족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관

- 관의 역할은 매장할 때 고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함에 따라 나무의 단단함 뿐 아니라 곱팡이가 생기거나 나무가 빨리 썩지 않고 봉분의 무게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관을 만드는 재료는 주로 오동나무, 소나무, 향나무가 있으며, 때로는 돌로 만드는 석관을 사용하기도 한다.

- 나무 관의 두께는 6푼, 1치, 1치5푼, 2치가 있는데, 목재의 치수 단위인 1치는 약 30.30mm이다.

○ 입관용품

- 입관용품에는 한지, 탈지면, 알코올, 칠성판, 초석, 소창, 베습신⁴⁶⁾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화장·매장에 따른 방법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 입관 후 관을 덮는 ‘관보’는 정부기관葬의 성격에 따라서 달리 사용 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한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葬의 경우 태극기를 사용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숙지하고 준비하도록 한다.
- 고인의 유지 혹은 유족의 의견에 따라 고인이 평소에 애용하던 물품이나 틀니 등의 물품을 넣기도 하는데 화장의 경우 천연섬유, 종이류는 무방하나 합성섬유는 유골의 변색 및 환경오염 등이 우려됨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 염습

- 빈소지원반은 장례지도사에게 염습을 시작하기 전에 유족 대표와 장례위원회 위원장 혹은 관계자와 함께 고인의 얼굴을 확인 할 수 있게 제안을 하여 고인의 상태 및 신원을 확인을 한다.
- 운영팀은 염습을 참관하면서 장례지도사의 무리한 물리적 행동이나 상주나 유족에게 노잣돈 등의 금품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며, 염습 중 유족이 격한 행동을 하거나 심하게 곡을 할지라도 제지하지 말고 유족 옆에서 위로를 해준다.
- 무엇보다 유족이 원하는 것에 대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도록 협조한다.

□ 시신 메이크업

- 경우에 따라서 고인이 질병으로 피부가 변색되어 있거나 사후 창백해진 피부를 자연스럽게 복원하기 위하여 시신메이크업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46) 베로 만든 신으로서, 이는 염습 할 때 고인에게 신기는 신을 말한다.

- 메이크업의 주된 목적은 생전의 모습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입관

- 장례식장에는 염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 둔 수의와 관, 입관용품 등을 준비하면 간단하게 진행 할 수 있다.
- 수의를 입힌 후에 행하는 것이므로 이때 입관 전 종교에 따라서 입관 미사, 예배 등을 행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유족에게 문의를 해야 한다.
- 입관이 끝날 때까지 유족 옆에 있어주며, 입관이 끝나면 다시 안치 냉장고에 고인을 안치하게 되는데, 이때 안치냉장고의 안내판에 쓰여 있는 인적사항을 재차 확인한다.

4 성복 (장례지도사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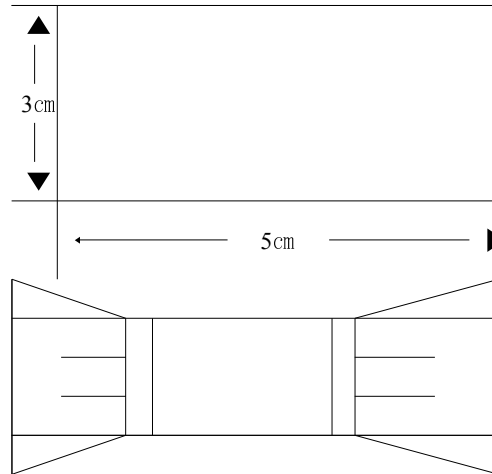
□ 성복(成服)

- 성복은 전통 상례에서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음을 뜻(변복, 變服)하며, 보통 초상난 지 나흘 되는 날부터 입는다. 하지만 현대 장례는 전통의 굴건제복을 하기보다는 남성의 경우 검정양복 위에 상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성복은 대개 상주와 복인(8촌 이내)들이 상복을 입으며, 상주는 상복을 입고 성복 때 상장을 착용하는 정도로 행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완장을 착용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흰색 혹은 검정색의 머리실핀을 꽂는다.
 - 사실 변복은 입관 이후 성복이란 절차 때 행 하지만 현대에는 조문객이 일찍 조문을 오는 경우도 있어 상주는 검정양복 또는 여상복으로 변복만을 한다. 그리고 입관 후인 성복이란 절차 때 기존에 입고 있던 검정양복과 여상복 위에 장례의 표식(예를들면 흰색 실핀)을 착용한다.

□ 상장 및 완장

- 건전가정의례준칙⁴⁷⁾ 에서 가슴에 상장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현대의 장례문화로서 통상적으로 상장 및 완장을 착용한다.

[그림 3-10] 상장 규격



주: 형고는 두겹으로 한다.

[그림 3-11] 완장 착용 예

스타일	타입	내용
	2줄	아들, 사위, 아들이 없을 시에는 장손이 착용
	1줄	기혼인 복인(8촌이내)이 착용
	무(無줄)	미혼인 복인(주로 손자들이 착용하게 된다.)이 착용

47) [시행 2008.10.14] [대통령령 제21083호, 2008.10.14, 전부개정]

□ 준비사항

- 발인 시 예배나 종교의식이 있는지를 점검하며, 영결식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간 안배를 한다. 개인동행차량이 있을 시 미리 준비하도록 하고, 대기한 차량에 짐(예를들면, 빈소에서 유족들이 사용한 물품이라든 장례위원회 및 장례집행위원회에서 사용하던 사무용품 등이 있다.)을 싣도록 안내한다.
- 운영팀 중 운구반은 발인 스케줄을 확인하고, 30분전에 미리 운구시 주의사항 및 의전용품(예식장갑, 마스크 등)을 챙겨 착용한다. 그리고 동선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준비 물품은 〈표 3-26〉과 같다.

〈표 3-26〉 준비물품

구분	식 순
일반식	빈소에서 지내는 경우 : 향, 양초, 향로, 촛대, 축문, 정종, 술잔, 제식용 상, 퇴주 그릇, 제사음식 영구차량 앞에서 지내는 경우 : 병풍, 돛자리 등이 추가됨.
불교식	향, 양초, 향로, 촛대, 축문
기독교식	성경책, 찬송가, 음향장치 및 스피커, 헌화용 국화, 화병
천주교식	상장예식, 성수, 부활초, 유족용 초, 행렬용 십자가, 양초, 촛대, 헌화용 국화, 화병

□ 발인

- 일반적인 경우 발인은 빈소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장례식장에 따로 장소가 마련된 경우 그 장소에서 지내는데 상주 및 유족을 제외한 인원은 발인식에 참여한다.
- 발인을 진행하는 순서는 〈표 3-27〉와 같다.

〈표 3-27〉 발인 식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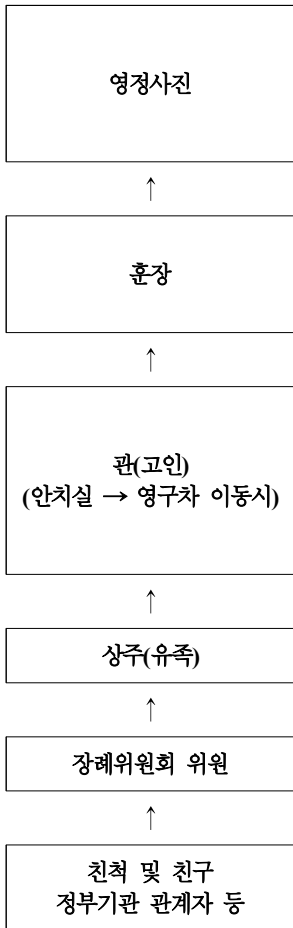
구분	식순 내용
일반식	개회사 → 분향 → 참신례 → 초헌 → 독축 → 아헌 → 종헌 → 사신례 → 폐식사
기독교식	개회사 → 묵도 → 찬송 → 기도 → 성경봉독 → 조가(찬송) → 설교 → 약력보고 → 조사 → 헌화 → 축도 → 출판(운구)
천주교식	개회사 → 말씀전례(복음/강론) → 성찬전례(영성체예식) → 마침예식 → 고별식(성 수분향) → 헌화 → 운구
불교식	개회사 → 삼귀의례 → 청혼/착어 → 헌화/헌양 → 독경 → 사홍서원 → 폐식사(운 구)

□ 행렬

- － 행렬은 고인의 영정을 모시고 빈소를 떠나 안치실로 이동 후 다시 영구차
로 이동할 때의 행렬을 말한다.
- － 발인 행렬 순서는 [그림 3-12] 과 같다.

[그림 3-12] 발인 행렬

〈앞쪽 방향〉



· 영정사진은 유족 중 상주가 아닌 사람이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 영정사진을 드는 사람은 예식장갑을 착용한다. 만약 혼백이나 위패를 함께 사용했을 경우에는 양손에 보기 좋게 든다.

· 훈장이 있을 경우에는 영정사진과 마찬가지로 유족 중 상주가 아닌 사람이 든다.
· 훈장은 영정사진을 뒤 따라 가면 된다.

· 빈소에서 안치실까지는 관(고인)이 없이 운구 행렬이 이어진다.
· 안치실에서 영구차까지의 운구 행렬 시에는 바로 영정사진 다음에 위치한다.
· 운영팀 중 운구반은 관의 양쪽에 서서 6~8명이 운구를 하던다.

· 상주를 비롯한 유족

· 장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유족의 뒤를 따른다.

III. 영결식

1 준비사항

□ 체크리스트 작성

- － 영결식은 짧은 시간 안에 준비 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기관
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확인한다.
- － 체크리스트에 포함 될 내용으로는 영결식장 준비사항(예를들면, 태극기, 조
기48), 마이크 등이 있다.), 영결식장 지원인력, 예식장갑, 근조리본 등이 있
다.

〈표 3-28〉 영결식 체크리스트 실제 예

시간	장소	준비사항	담당
영결식 D-day	영결식장	- 식장 준비 내용 태극기, 조기, 마이크, 연주곡 음원, 음향설 비 시험, 의자셋팅, 근조리본, 예식장갑, 좌 석라벨 등	○○○
00:00 ~ 00:00	영결식장	- 지원인력 행사장 도착 및 배치 - 지원인력 담당업무 교육 - 식장 준비 확인 및 미비점 보완	○○○
00:00 ~ 00:00	장례식장 발인장	- 장례위원장 및 장례위원 영접 - 예식장갑 및 근조리본 전달 - 식장 내 좌석 안내	○○○
00:00 ~ 00:00	영결식장	- 행사진행 전반 체크 - 묵념곡, 헌화곡 재생(사전준비 차원) - 운구차량 출발 후 위원장 등 배웅	○○○

□ 좌석배치

○ 고려사항

- － 음향시설이나 영상시설, 그리고 많은 인원으로 인하여 혼잡하지 않도록 동
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 － 영결식 당일 눈이나 비가 내릴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함으로써 당일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여야 한다. 우산과 비닐
우의, 수건 등을 준비하고 도보 및 운구구간을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조문객의 입장, 주차장 관리 및 각종 비품 등에 세심한 주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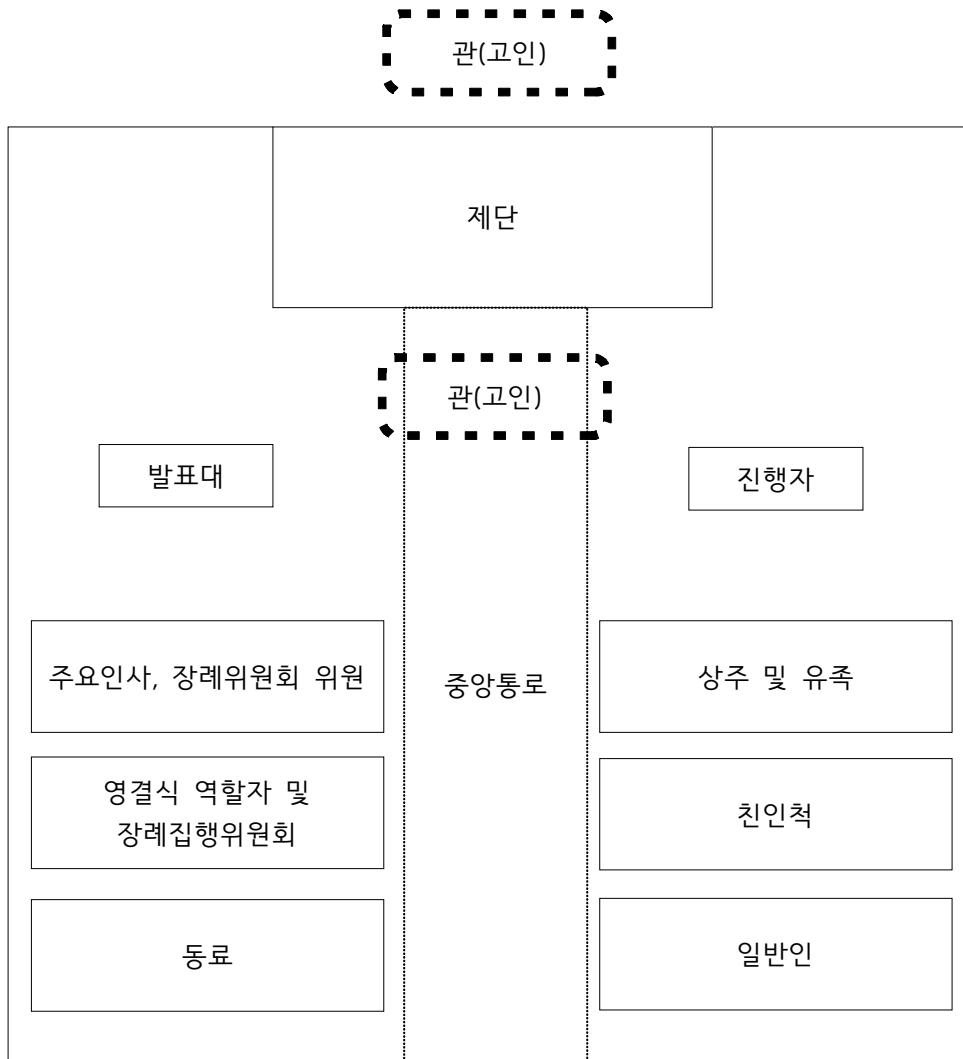
48) 조기으로써 게양 할 수 있는 기는 태극기와 해당 기관의 기가 있다. 태극기의 경우 국가장법에 해당되는
葬이 아닌 경우 게양이 제약되며, 다만 지방자치 조례로 재정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리고 해당 기관의
기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단독 청사일 경우 해당 기관기가 있을 경우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시스템(음향, 영상 등)의 사용여부와 주차장의 수용능력 등 시설물들의 사용여부를 파악한다.

○ 배치

- 영결식장의 배치는 헌화자, 장례위원 등 역할 있는 자는 앞면으로 일반조문객은 뒷면으로 배치하고 입구도 구분하여 두면 안내하기가 편리하다. 특히 영결식 진행시의 역할자(조사, 약력보고자, 조가, 종교집례자 등)는 별도의 좌석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즉, 앞줄에는 유족과 영결식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주요 인사라든지 종교지도자 등을 배치하고 있고, 그 뒤에는 고인과 친분이 있거나 장례위원회 위원 등을 배치한다.
- 의자의 준비 및 좌석배치를 위하여 좌석배치도 작성한다.

[그림 3-13] 영결식 좌석배치



- 주1: 영결식에서 관의 위치는 영결식장에 따라서 제단 앞으로 나올 수 있거나 제단 뒤쪽에 위치 할 수 있다.
 주2: 영결식 역할자는 종교집례자, 조사, 조가 등을 행하는 자로서 영결식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맡은 자를 칭한다.
 주3: 발표대는 영결식 역할자들이 발표하는 곳으로서 발표대는 제단을 향하게 배치한다.
 주4: 기본적인 동선은 중앙통로를 기준으로 하며, 영결식의 경우 T자 모형의 동선을 그리는데 일반적이다.
 주5: 진행자는 식순에 따라서 영결식을 진행하며, 방향은 제단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 및 참례자들을 향하게 한다.
 주6: 영결식 필요에 따라서 안내, 진행 요원으로 활용하며, 배치는 영결식장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곳곳에 배치한다.

□ 기타 사항

-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구급차 등 비상대비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만큼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응급(의료)차·소방차 등을 배치하며, 예기치 않은 정전사태에도 미리 대비한다.

□ 제단설치

- 영결식 제단 설치는 [그림 3-14]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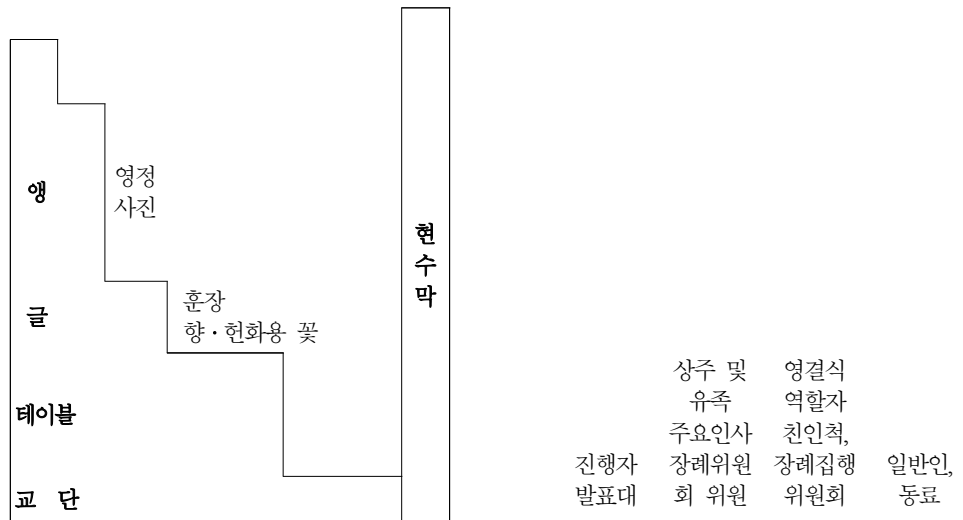
[그림 3-14] 영결식 제단 설치(정면)

謹 故 ○○○ 職銜 정부기관 명칭 葬 永訣式 弔				
일시 ○○○○○○○○ 장소 ○○○○○○○○				
현수막				현수막
	제단장식			
	제단장식	영정	제단장식	
	제단장식			
	향 혹은 헌화용 꽃 훈장			

- 중앙을 가로지르는 제단 상단에는 정부기관葬의 명칭과 동일한 문구에 영결식이란 단어를 삽입하여 현수막을 설치한다.
- 양쪽으로는 고인을 애도하는 무구의 현수막을 설치한다. 예를들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와 같은 문구이다.
- 훈장의 위치는 영정을 바라보고 영정 아래의 오른쪽 위치에 놓는다.

- － 제단에는 분향 뿐 아니라 헌화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준비하여야 하며, 전반적인 색상은 흰색과 검정색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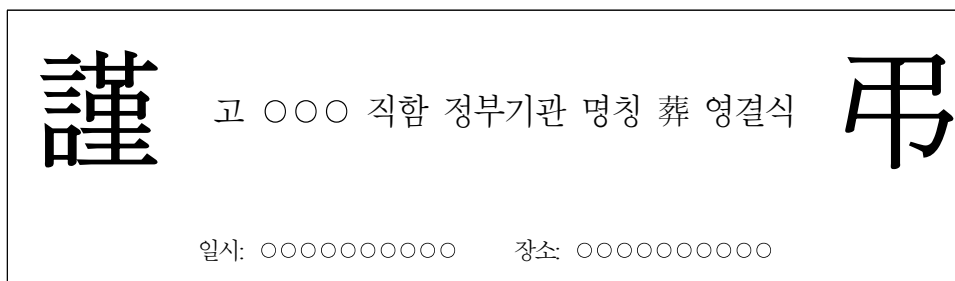
[그림 3-15] 영결식 제단 설치(측면)



○ 현수막 예

- － 장례식장이나 도로변 등에 현수막이 필요 할 때에는 [그림] 과 같은 문구로 사용한다.

[그림 3-16] 정부기관葬 영결식 현수막 예



[그림 3-17] 영결식 제단 설치의 예

<p>< 사진 > 해양경찰 제주항공대 순직 경찰관 영결식 자료출처 : 제주연합뉴스</p>	<p>< 사진 > 산림 항공공무원 합동 영결식 자료출처 : 크레이티브티비(www.crey.tv)</p>
<p>< 산림항공공무원 합동 영결식 > 자료출처 : 강릉연합뉴스</p>	<p>< 애국지사 고 김영일 광복회장 사회장 영결식 > 자료출처 : E중앙뉴스</p>

2 식순

□ 진행순서

- 최근 3년 동안 정부기관葬의 영결식 진행순서를 재정리 한 결과는 〈표 3-29〉와 같다.
- 다만, 필수를 제외한 선택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한다.

〈표 3-29〉 영결식 진행 순서

순서	소절차	선택	비 고
1	개식	필수	
2	국민의례	필수	정식/약식 절차 구분함.
3	고인에 대한 묵념	선택	고인에 대한 묵념은 헌화 분향 등으로 중복적 의례임.
4	고복	제외	추모 공연의 일부로 수용함.
5	약력 보고	필수	고인의 업적을 돌아보며 추모함.
6	훈장추서	필수	있을 시 당연히 행하며 배열 위치를 신중히 함.
7	조의금 전달	제외	의례의 격을 떨어뜨리기에 제외함.
8	조사	필수	영결사, 조사, 추도사 고별사, 애도사, 조전은 조사로 통일함.
9	육성녹음 청취 생시 영상 시청	선택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가장 좋은 방법임.
10	종교 의식	선택	유족의 요청 시 해당 종교의식만을 행함.
11	헌화, 분향	필수	헌화나 분향은 선택이나 이 절차는 필수로 처리함.
12	추모 공연	선택	선택적으로 실시함.
13	유족 대표 인사	선택	유족의 요청 시 호상이 대표로 실시함.
14	폐식	필수	

① 개식

- 영결식 시작을 알린다.
- 개식 이전에 영구 도착 시 묵례, 헌화, 분향의 순서, 퇴장 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한 공지를 한다.

② 국민의례

- 국민의례란 각종 공식적인 의식이나 회의 또는 행사(이하 “공식행사”라 한다)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愛好)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일련의 격식을 말한다.⁴⁹⁾
- 행사유형별 국민의례 절차의 적용은 영결식의 의미를 고려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만을 실시하는 약식 절차가 알맞은 것으로 판단된다.

49) 행정안전부의 국민의례 규정 참조바람(제정 2010.7.27 대통령훈령 제272호).

1. 정식절차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

-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등 정부 주요행사나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공식행사

구분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목념	행 사 유 형(예시)
정식 절차 1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1~4절	목념 곡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정부시무식
정식 절차 2		1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취임식, 국무총리 이·취임식 시무식, 종무식, 기념식, 워크숍 1주 이상 교육 과정의 입교식·수료식

2.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

- 행사의 유형(성격, 규모, 빈도 등)이나 행사장의 여건 등으로 볼 때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경우

구분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목념	행 사 유 형(예시)
약식 절차 1	전주 없는 애국가 1절 연주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없음	목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 * 행사 성격에 따라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月) 단위 이하로 실시되는 정례회의 체육행사, 부서 단위 이하의 소규모 워크숍 기관장 이·취임식 1주 미만 교육 과정의 입교식·수료식 기공식, 준공식 음향 재생설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의 소규모 행사
약식 절차 2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약식 절차 3	구령으로만 실시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③ 고인에 대한 목념

- － 국민의례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이루어지는데⁵⁰⁾ 여기에 이어서 고인에 대한 묵념의 절차는 의례의 의미 분석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 돌아가신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화, 신격화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 － 또한 헌화와 분향이라는 고인에 대한 애도 절차의 중복이 되어 버린다. 이에 고인에 대한 묵념 절차는 제외 될 수 있다.
- － 다만 영결식의 의미를 고려하여 국민의례를 국기에 대한 경례만을 실시한다면, 고인에 대한 묵념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④ 고복⁵¹⁾

- － 고복은 전통상례의 첫 소절차인 初終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로써 초혼하고 발상(發喪)하는 의식이다.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는 그 민족의 가치관을 표현해 주며 그 민족 구성원간의 결집력을 더해 주는 내적인 힘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발견하고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전통문화에 대한 재발견과 그것의 복원사업이 다방면에서 전개되고는 있으나, 고복을 영결식의 소절차로 구성하기에는 의례의 의미와 순서에는 맞지 않다. 그러나 전통의 계승, 국민 참여를 위한 방안 모색으로, 추모 공연의 일부로 계승 되어야 할 문화이다. 절차로써는 제외되어야 한다.⁵²⁾

⑤ 약력 보고

- － 고인이 한평생 걸어온 발자취를 적은 이력으로써 잠시 돌아보며 고인의 행적을 회고 하면서 외경심을 갖고자 하는 목적이다.
- － 약력보고는 고인의 생년월일, 태어난 곳을 시작으로 연도별로 고인의 행적을 그대로 기록하면 된다. 또한 고인의 상벌과 특이사항들 역시 포함하며, 가족사항도 포함시킨다.

50) 약식 절차로 따르는 경우 그리고 선택적 관례로서 행해지고 있다.

51) 고복(告復)은 초혼하고 발상(發喪)하는 의식을 말한다.

52) 노무현전대통령 때처럼 추모공연의 하나로 승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정부기관에서 초혼을 한다는 것은 절차 및 의미상 문제가 있다. 이는 이미 고인이 운명하는 시점에서 행하는 것으로 기관의 장례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절차로써는 생략 되어야 한다.

⑥ 훈장(勳章)⁵³⁾추서(追敘)⁵⁴⁾

- 추서는 죽은 뒤에 관등을 올리거나 훈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고인에 대하여 훈장을 추서한다면 고인의 영예를 높여주는 것으로 당연히 필요한 절차이다.

⑦ 조의금 전달

- 전통상례에서는 발인 이전 그리고 장지에서 일반적으로 받았으므로 제외되어야 하는 소절차로 의견이 모였으며, 타당성에 대한 재차 논의 시에도 이미 장례식장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관의 영결식을 거행하는 장소에서는 필요가 없는 절차이다.
- 만약 이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별도로 선택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의례의 엄숙성과 의미, 고인 추모의 격을 떨어트릴 가능성 등으로 제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 조사

- 하나의 절차로써는 문제점은 없으나, 다양한 용어로 호칭 되는 것이 문제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는 “고인을 기리는 심정에서 지인이나 가족에 의해 진행되어지며 조사의 경우 일부 추모사, 추도사, 조사, 영결사, 등으로 명칭을 달리하여 진행하고 있다.
- 다른 향으로 한문문체 분류에 의해 애제문(哀祭文)으로 분류가 되기에 명칭 및 절차를 통합 하고자 하였으나, 제문까지도 포함하기에 포괄적 용어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조사’라는 용어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조사의 작성 내용은 조사의 내용은 과거를 추억하며 지난날의 두터웠던 정의를 말하고, 고인의 인간성 및 기대했던 장래성 등의 심정을 나타내도록

53) 훈장(勳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그 공로를 기리고자 나라에서 주는 휘장을 말한다. 나라에서 주는 포상 가운데 으뜸가는 훈격(勳格)으로, 무궁화 대훈장, 건국·국민·무공·근정·보국·수교·산업·새마을·문화·체육·과학 기술 훈장의 열두 가지가 있다.

54) 추서(追敘)는 죽은 뒤에 관등을 올리거나 훈장 따위를 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 상황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을 실천하다가 사망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사회 전체의 귀감이 된 사람, 생전에 큰 공을 세워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덕망을 갖춘 사람에게 준다. 참고로 서훈(敘勳)은 나라를 위하여 세운 공로의 등급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쓴다. 어려운 구절이나 감동적인 어귀를 너무 많이 쓰지 않는다. 지나친 과장과 슬픔을 꾸미지 말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쓴다. 또한 경건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쓴다.

⑨ 육성녹음 청취 및 생시 영상 시청

- － “고인의 유지를 받들고 그 뜻을 널리 알림으로써 고인의 죽음이 더욱 기억 되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인의 영상시청이나 육성녹음청취는 포함 되어야 할 것이며, 순서 역시 고인을 기리는 조사가 마친 후 실시되는 「의전실무」의 순서에 의해 진행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진다.⁵⁵⁾”라고 했다.
- － 영상기기와 전파미디어의 발달로 이 절차의 목적인 유지를 받들고, 널리 알리며, 기억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다.

⑩ 종교 의식

- － “유족의 희망에 따라 진행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고인을 추모하는 과정에서 참석 조문객의 종교가 종교단체의 장례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단일 종교로 진행하기 보다는 불교·천주교·기독교의 순으로 진행함으로써 조문객의 조문에 종교적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조문하도록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⁵⁶⁾” 라고 했다.
- － 일단 종교의식 절차는 유족의 요구에만 시행하고 타종교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⑪ 헌화 및 분향

- － 먼저 헌화 곧 꽃을 바치고 꽃을 선사하는 것은 사람들의 존경이나 외경(畏敬)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난 것이다. 그러한 꽃은 어떤 신앙의 대상자에게 소망을 빌 때 반드시 사용 되었다. 꽃을 신에게 바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바쳐 신에게 귀의하고 복종할 것을 뜻한다.⁵⁷⁾ 통상적으로 보면 헌화는 꽃 봉우리가 영정을 향하게 한다.

55) 유재철, 위의 글, P95

56) 유재철, 위의 글, p95

57) 앞 절의 빈소(장례식장)운영의 헌화 부분 참조바람.

⑫ 추모 공연

- 통상적인 영결식의 절차로 운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선택적으로 시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이주연은 “이번 노제는 문화적 퍼포먼스로 행사를 통한 국민들의 슬픈 감정을 적절히 달랠 수 있는 의례 행위였다. 국민의 슬픔을 덜어 주었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⁵⁸⁾”라고 하였다.
- 추모 공연 절차는 의례의 의미를 더 높일 수 있기에 하나의 절차로 정착되어야 한다. 추모 공연을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고인이 생전에 즐겨 들던 노래를 듣기, 조가(弔歌) 독합창, 초혼 의식 등으로 차분하고 약간은 정적인 기관의 영결식을 거행하는 장소 내에서 고인과 맥이 통하는 선택적 의례로 정착 시키도록 한다.

⑬ 유족 대표 인사

- 아직 상례가 끝나지 않은 상중에 인사 절차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될 수도 있으나, 현대의 짧은 장기(葬期, 장례기간)를 고려한다면 절차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하여 정착 시킬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논의로 김시덕은 “상례를 마친 후에는 조문을 온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도 잊지 않는다. 감사편지의 기원은 이미 오래된 것으로서 상례의 절차에서 卒哭(졸곡)을 지낸 후에 감사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⁵⁹⁾”고 오늘날의 일반적인 형태를 조사 하였다. 졸곡은 삼우제를 지낸 뒤에 강일에 제사를 지내고 곡을 마치는 절차로 위문편지에 답장 하는 양식까지도 의례서는 포함 하고 있다.
- 졸곡은 삼우제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기에 가능한 것이기에, 오늘날 영결식의 필수 절차로는 어려우며, 유족의 요청이 있을 시 호상이 대신하는 것으로 정리 한다.

⑭ 폐식

- 영결식의 끝마침을 알린다.

58) 이주연, 앞의 글, p73

59) 김시덕, 위의 글, p121

- 폐식 후 개식과 마찬가지로 엄숙한 마무리를 위한 사회자의 역할로 운구행렬이 영결식장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 현 위치 유지, 영구차가 지날 때 애도를 표하기, 헌화를 하지 못한 분들에게 헌화하기 등을 안내 한다.

□ 시나리오 진행 예시

〈표 3-31〉 시나리오 진행 예시

식순	사회 시나리오	행동
개식 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시 후 () 헌신 하고 돌아가신 故 성함 직책님의 영결식이 시작 되겠습니다. ○ 영결식이 거행되기에 앞서 몇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잠시 후 영구차가 식장 안으로 들어올 때 조문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시 정면에 게양 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헌화 및 분향은 시간관계상 호명하는 분들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화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영결식이 끝나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영결식이 끝나고 운구 행렬이 이 곳 영결식장을 출발 할 때까지 현 위치에 계시다가 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소지하신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날씨 관련) 경건하고 엄숙한 영결식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이상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p>조문객 입장 완료시</p> <p>사회자 안내 말씀</p>
영구차 입장	<p>(영구차 입장 전 장내를 다시 정리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 영구차가 입장 하고 있습니다. 조문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목례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차 입장
1. 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부터 고 성함 직책님의 영결식을 거행하겠습니다. 	
2. 국민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게양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정면 국기를 향함 애국가 1절 연주
3. 약력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은 성함 직책 고인의 약력을 보고 하겠습니다. 	
4. 훈장 추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은 **훈장 추서가 있겠습니다.60) 	
5.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은 성함 직책으로부터 조사가 있겠습니다. 	

6. 영상 시청	o 다음은 고 성함 직책님의 생시 업적을 담은 영상을 시청 하겠습니다.	영상
7.종교 의식	o 다음은 고 성함 직책님을 추모하고 영면을 기원 하는 종교의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o 생시에 고인께서 다시시던 교회 성함 목사(직책)에 의해 거행 되겠습니다.	
8. 헌화 분향	o 다음은 고인을 애도하는 헌화 및 분향의 순서입니다. o 먼저 상주와 직계 유족 분들께서 헌화 및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o 계속해서 ***께서 헌화 및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서 헌화 분향
9. 추모 공연	o 다음은 성함 직책의 고인을 추모하는 조가를 부르겠습니다. o 다음 곡은 고인이 생시에 즐겨 부르시던 (노래 제목)입니다.	
10. 유족 대표 인사	o 다음은 성함 유족 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11. 폐식	o 이상으로 고 성함 직책님의 영결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식 후	o 조문객 여러분들께서는 운구행렬이 영결식장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o 조문객 여러분들께서는 영구차가 지나갈 때 애도를 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했던 시간을 되로하고 떠나는 고인의 마지막 길에 삼가명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o 헌화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잠시 후 안내원의 안내를 받아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IV. 운구

1 준비사항

□ 개요

- 영결식이 끝난 뒤 화장장 혹은 매장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운구반은 장거리를 이동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미진한 부분과 누락된 사항들이 없

60) 행정안전부(2008), 정부의전편람, 행정안전부, p195의 추서 개식 및 추서 조문에 대한 내용 참조.

는지 꼼꼼하게 챙긴다.

- 대외기관 협조(예를들면 교통경찰이 있다.)체계가 필요하다면 사전 요청을 한다.
- 운구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 운구경로, 운구 준비사항, 운구 행렬, 이동 간 에스코트 및 교통통제, 시간대별 세부 계획 및 조치사항 등을 포함시킨다. 운구에 필요한 준비 사항은 영구차 임차 및 꽃장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시 운구에 덮을 태극기를 준비한다. 그밖에도 유족 뿐 아니라 정부 기관葬 관련 인원들을 탈 수 있는 임차 버스를 준비시키며, 구급차 등의 안전 요원도 필요하다.

□ 영구차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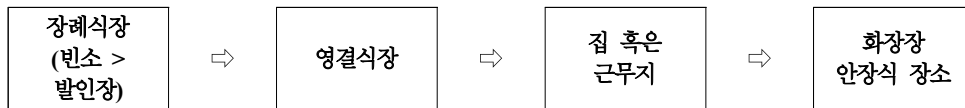
- 영구차는 장지까지 고인 및 유족, 지인을 싣는 차량으로, 영구차의 종류로는 캐딜락, 버스, 소형버스 등이 있다.
- 캐딜락의 경우 2인승, 5인승 두 종류가 있다. 선도차가 없을 시에는 캐딜락에는 고인과 영정이 함께 움직인다.
- 버스는 대부분이 40인승이며 장지의 길이 협소한 경우 35인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차량의 선택은 유족이 하며 이때에 장지에 대하여 파악한 후 선택을 하도록 한다.

2 운구행렬

□ 운구 노선

- 대개의 경우 장례식장(빈소)에서 발인을 하고 난 뒤에 고인이 생전에 머물렀던 집이나 혹은 근무를 했던 곳 또는 고인이 평소에 아끼던 장소를 지나거나 잠시 머물러 전(奠)을 드리는 게 보통이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전은 생략해도 무방하다.

[그림 3-18] 운구 노선 흐름



○ 그림 [그림 3-19] 는 운구 노선 중에 영결식을 마치고서 근무지에 도착하여 간단한 예식을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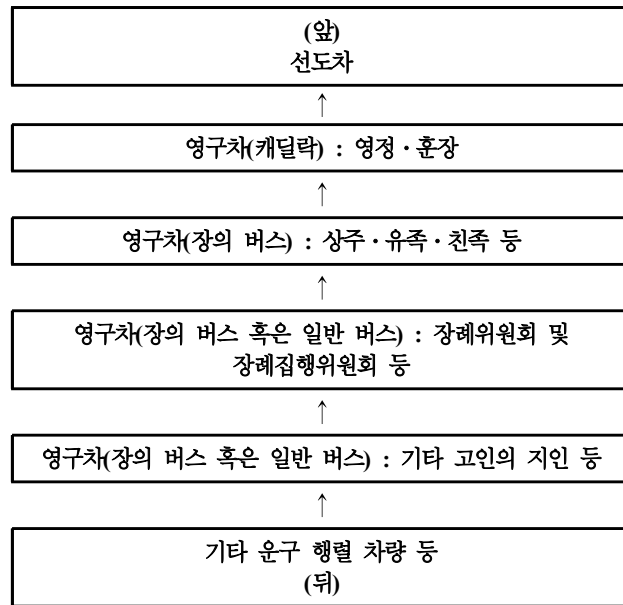
[그림 3-19] 운구 노선 예



□ 운구행렬

－ 운구행렬은 [그림 3-20] 와 같다.

[그림 3-20] 운구 행렬



- 운구행렬은 장거리 이동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게 된다. 우선, 운구행렬의 제일 앞은 선도차가 위치한다. 선도차는 행렬의 제일 앞서서 행렬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 선도차 뒤에 바로 오는 영구차(캐딜락)는 고인과 함께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정과 함께 이동하며, 훈장도 함께 움직인다. 이때 영정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장례식장 발인 때 영정을 들었던 사람이다.
- 그 다음으로 영구차(장의 버스 및 일반버스)는 상주 및 유족 그리고 친족 등이 탑승하게 된다. 이때 고인이 같은 차에 탑승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 내의 버스도 가능하다.
- 마지막으로 장례위원회 및 장례집행위원회 사람들이 타고, 그 뒤를 기타 고인의 지인 등이 이동하며, 때에 따라서는 구급차도 동행한다.

□ 차량 탑승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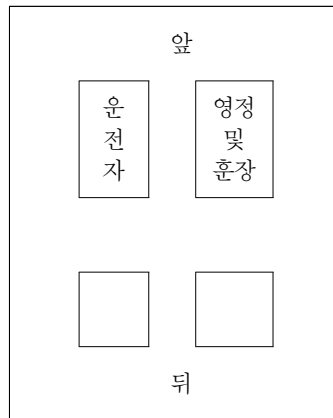
- 영구차의 행렬 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선도차+영구차(캐딜락)을 이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영구차(캐딜락)만을 이용하는 경우이

다. 전자의 경우에는 선도차에 영정과 혼장만을 탑승하며, 고인은 선도차 뒤를 따르는 영구차(캐딜락)에 탑승시킨다. 후자의 경우는 영구차(캐딜락)에 영정 및 혼장 뿐 아니라 고인과 함께 탑승하는 경우이다.

○ 영구차 내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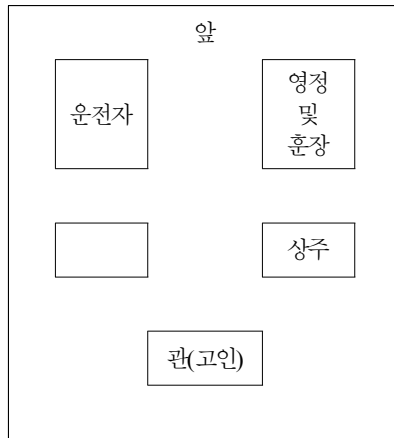
- － [그림 3-21] 처럼 선도차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이때에는 선도차에 영정 및 혼장이 탑승을 한다. 이것은 전통 상례의 영여(靈輿)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인의 혼을 실어 나르는 의미이다. 그리고 고인은 선도차를 뒤 따르는 영구차(캐딜락)에 탑승시킨다.

[그림 3-21] 선도차



- － 반면 [그림 3-22] 은 영구차(캐딜락)만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이때에는 고인이 모셔져 있는 관과 함께 탑승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선도차와 마찬가지로 영정 및 혼장은 같은 위치에 놓이며, 관은 별도 뒤쪽으로 안정적으로 고정하여 이송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22] 영구차(캐딜락)



V. 안장식⁶¹⁾

1 준비사항

□ 개요

- 안장식은 대개 화장(火葬)하여 유골함에 모신 후 매장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영결식을 마친 후 당일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장소는 국립현충원 혹은 미리 준비된 곳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들은 유족과 협의된 사항을 기준으로 준비, 계획, 실시된다.
- 정부기관장을 정부에서 주관하는데, 국립묘지가 아닌 경우 유족의 별도 매장지를 이용 할 경우 불법 묘지 조성·설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행사의 진행 순서

- 운구(안장의례 장소로 이동) → 하관 의식 → 폐회로 만약 매장의 경우에는 영결식장에서 운구가 이루어질 것이나 화장하여 유골함을 매장하는 경

61) 안장식의 경우 현충원 등의 안장의식을 기본적으로 준용하였다.

우에는 화장장에서 운구를 하며, 이 경우에는 화장에 소요되는 시간과 운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하관 의식이 진행되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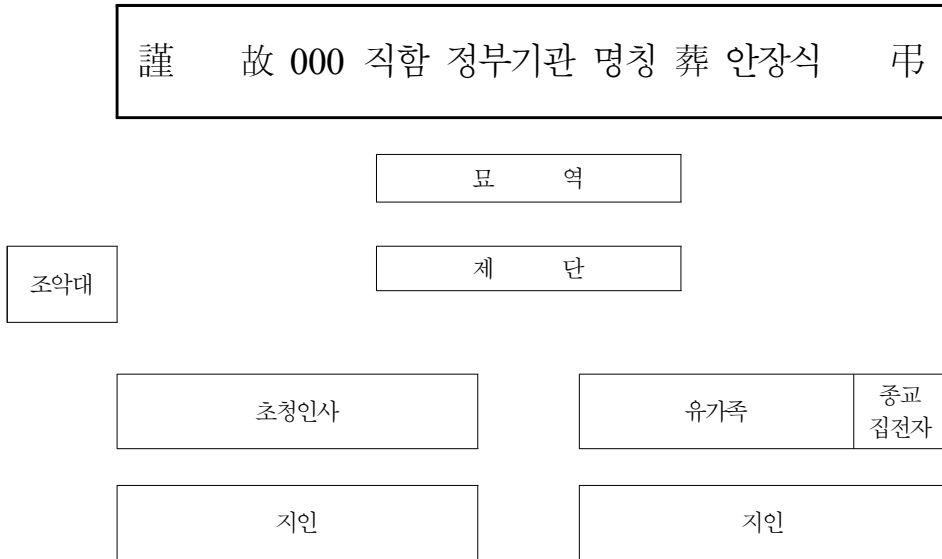
□ 참석대상

- － 유족, 초청인사, 지인 등이며 종교행사가 포함 될 경우 종교인사까지 포함하여 준비를 하여야 한다.
- － 안장 의식 제단의 설치는 검소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 － 장식은 흑백 단색으로 처리하되 흑백의 배열을 상하 세로로 교차하게 하는 것이 좋다.

□ 안장식 장소의 배치

- － 헌화자, 장의위원 등 역할 있는 자는 앞면으로 하며, 지인은 뒷면으로 배치하고 입구도 구분하여 두면 안내하기가 편리하다. 특히 행사 진행시의 종교집전자 등은 별도의 좌석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 － 안장식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기본적인 배치도를 보면 [그림 3-23] 과 같다.

[그림 3-23] 안장식 배치도



□ 준비사항

- － 제단 : 영정, 훈장, 촛대, 대형향로, 중형향로, 장식용 국화
- － 음향시설 : 조사용, 사회용
- － 의자의 준비 및 좌석배치(좌석배치도 작성)
- － 종교집전자 및 관계자 좌석배치
- － 의료요원(구급차)
- － 교통통제, 소방차 등 배치
- － 안내(식순) 팸플릿 준비 및 배부

2 안장식 진행

□ 진행순서

- － 안장식은 경건하고 애도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함이 필요하다. 유

족이 원하는 경우는 종교의식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순서는 〈표 3-32〉와 같다.

〈표 3-32〉 안장식 식순

순서	행사 내용	비고
1	개식	장례집행위원장
2	국기에 대한 경례	
3	고인에 대한 묵념	장례집행위원장
4	종교의식	종교 집전자
5	헌화 및 분향	유가족 → 장례위원회 위원장 → 주요인사 → 지인
6	하관	현충원 전례요원
7	허토	유가족 → 장례위원회 위원장
8	폐식	장례집행위원장

① 영구차 도착 및 안치

－ 영구차가 식당입구에 도착하면 사회자는 “지금 영구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조문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진혼곡을 연주하며 영구차가 제단 안에 안치되면 조악을 멈춘다.

② 개식

－ 사회자는 “지금부터 고 ○○○ 전(직함) 기관장 안장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안장식을 거행한다.

③ 국기에 대한 경례

－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국기를 향하여 경의를 표하며, 이때 경례곡을 연주한다.

④ 고인에 대한 묵념

－ 묵념을 드리는 동안 진혼곡을 연주한다.

⑤ 종교의식

－ 고인의 종교와 유족 측의 의사에 따라 종교의식을 추가하거나 집례순서를 변경하며, 일부 종교의식을 생략할 수도 있다.

⑥ 헌화 및 분향

- － 헌화순서는 장례위원장, 유족, 장례위원, 각 기관별 대표, 고인의 친지 순으로 하되, 헌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안장 의식이 산만해지므로 헌화 대상자를 정하여 두고 안내하는 것이 좋다. 안장식 중 헌화를 못한 조문객은 영결식이 끝나고 헌화를 하도록 안내한다.

⑦ 하관

- － 사회자는 “이어서 하관을 하겠습니다. 유가족대표 한분이 나오셔서 하관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를 한다.

⑧ 허토

- －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유가족이 한사람씩 허토를 하고 장례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진행하며 사전에 허토를 하는 인원제 조율을 하여야 한다.

⑨ 폐식

- － 기관장 안장 의식을 마침을 안내하며 시간 관계상 헌화 및 분향을 하지 못한 참석자 분들께 안내를 하며 마친다.

VI. 사후관리

1 감사의 글

□ 감사의 글

○ 개요

- － 정부기관葬이 끝난 후 감사의 글을 발송하게 되는데, 보통 감사의 글은 영결식 이후 1주일 이내에 발송한다.
- － 감사의 글은 장례위원장의 명의로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 － 발송은 기관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에 공고 및 영결식 발송대상에 대하여 서

신 발송을 한다. 혹은 일간지 등은 유족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감사의 글 예시

[그림 3-14] 감사의 글 예시1

<p>삼가 인사드립니다.</p> <p>지난번 저의 부친 상중에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애도의 뜻을 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려해 주신 덕택으로 무사히 장례를 마쳤습니다. 의당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인줄 아오나 황망중이라 우선 서면으로 예를 드리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오며 간곡하신 은혜는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201 년 월 일</p> <p>배상</p>

[그림 3-15] 감사의 글 예시2

<p>존경하는 ○○○님께</p> <p>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지난 ○○월 ○○일 별세하신 전 (직함) ○○○의 ○○○○○○○(기관명)장에 각별하신 조의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기관명) 전 직원을 대신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풀어주신 따뜻한 관심과 위로 덕분에 장례를 엄수할 수 있었으며, 유족분들도 보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리는 것을 관용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건안하심을 기원 드립니다.</p> <p>201 년 월 일</p> <p>전 ○○(직함) 고 성명 장례위원회 장례위원장 직함 ○○○ 배상</p>
--

[그림 3-16] 감사의 글 예시3

<p>인사 올립니다.</p> <p>지난 월 일 도 시 군 “ **** ” 화재현장에서 소방* 故 *** 님의 순직과 관련하여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시해 주신데 대하여 유족과 **소방서 직원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아오나 여의치 못하여 우선 지면을 통하여 대신 하오니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소방서 전 직원은 故 人의 119 소방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날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맡은바 직무에 더욱더 정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성취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p> <p>201 년 월 일</p> <p>前 ○○(직함) 故 성명 장례위원회 장례위원장 **소방서장 * * * 拜上</p>

2 정부기관葬 비용 정산

□ 지원 가능한 범위

- 장례의 진행은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하며, 장례 지원 비용은 당해 연도 기관의 예산에서 집행하되, 특수한 상황의 경우 장례위원회의 결정으로 예산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표 3-33〉 정부기관葬의 지원 세부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준비	운구 및 안치	고인 운구 및 안치와 관련 된 비용	
빈소운영	빈소 및 제단 장식 비용	장례식장 빈소, 제단에 관련된 비용	
	영정사진 및 장례용품 비용	영정사진, 고인 및 상주의 장례용품 등	
	장례식장 의전 비용	고인에 대한 염습 및 입관 비용 등	
영결식	영결식 무대 설치 비용	영결식장에서의 무대 설치비용 등	
운구	운구비용	장의차 또는 캐딜락 사용 비용 등	
안장	의례지원 비용	의례장갑 및 마스크 등 의례 지원 비용	

주: 표준의례에서 제시된 항목 중 인력지원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 나머지 금전적인 비용 부분만을 제시함.

□ 비용 지원 제외 범위

- 조문객의 식사비용
- 노제 비용
- 삼우제 비용
- 사십구제 비용
-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자연장·봉안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 비용
- 그 밖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비용

□ 기록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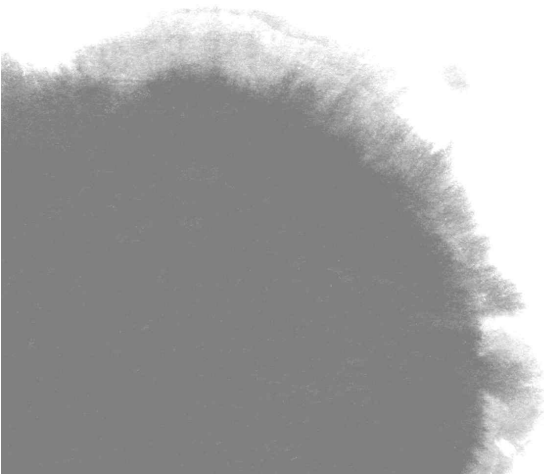
- 기록이 필요한 자료는 운영팀의 의전반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 장례집행위원장은 사전에 관련 서류 및 미디어 자료의 기록, 보존, 이관을 사전에 지시한다.
- 그뿐 아니라 동영상 및 미디어자료의 경우 의전반에 그 소속을 두고 담당자를 배치한다.
- 기록 할 사항은 대개 정부요인 및 초청인사 조문 시, 견전(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기타 장례 내용 전반을 기록한다.

□ 기록물 및 관련 미디어 자료

- 기본적인 것은 회의록이 있는데 이것은 장례위원회 회의록을 기본적으로 한다. 이러한 수집 및 관리는 다음번의 정부기관葬을 실시 할 때 귀중한 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다.
- 그 뿐 아니라 장례식장을 이용한 경우 관련 계약서 등과 관련된 문서와 일간지 광고용 부고 자료 및 공고문, 안내장 그리고 영결식, 안장식 동영상 및 사진 자료, 소요경비 예결산서 등이 있다.
- 이러한 관련 기록물은 분류하여 책자의 형태로 발행하여 보존하며 회의록을 제외한 서류 일체는 유족과 협의하여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제외하고 유족에게 제공한다.

04

결론 및 정책제언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부속기관에서 근무하던 종사자들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유족들과 협의하여 기관장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장례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관장의 대상, 비용지원범위 등이 기관별로 상이하게 시행되어 합리적이지 못하는 지적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통일된 규정(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기관장의 대상자는 국가 행정정부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망한 현직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도 대상자선정심의를 거쳐 애도와 조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무수행에 참여한 일반인도 대상자로 포함을 하여 정부기관장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직의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정부의 업무를 하였던 전직 공무원이나 전직 정부기관의 장은 정부의 공무수행에 지속성을 띄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계속 배출되는 정부기관의 전직 長 및 공무원에 대한 수요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기 어렵기에 정부기관장의 대상자는 정부의 현행업무에 관련이 있는 자로 국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둘째, 장례위원회를 집행하기 위해서 장례발생 상황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한다면 시간적인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각 부처별로 협의하여 장례위원회의 조직을 구성하여 놓는 것이 좋다. 더불어 운영지원팀(또는 운영지원과)에서는

정부기관장의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장례업무담당(공무수행 중 기관내의 사망자 발생시 현장 출동 및 확인)을 주무로 하고 있는 직원을 별도로 배치해야 한다.

또한 장례위원회는 장례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장례기간 중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시 장례위원회의 결정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정부기관장으로 진행할 경우 많은 업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행하여 할 업무 분장 및 해당직무를 파악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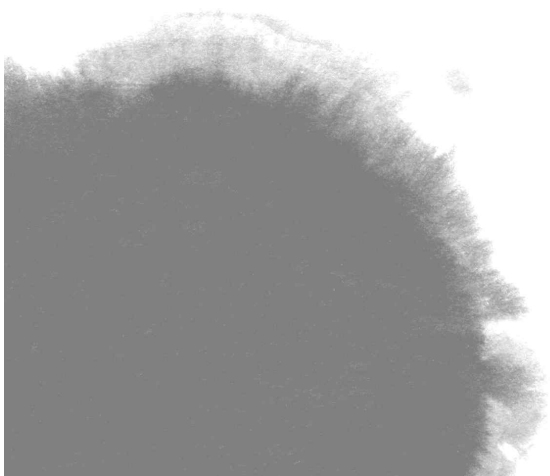
장례집행위원회는 장례 전반적인 행사의 총괄 및 진행을 주도하며, 타부서와의 협력을 끌어내고, 장례업무를 분담하여 원활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장례위원장 역시도 미리 구성해 놓아서 정부기관장 발생시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보통은 운영지원과장, 또는 운영지원팀장).

셋째, 기관장의 비용 또한 별표에 의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한선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지원 금액은 각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비용의 지원을 영결식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 등의 빈소를 마련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였다.

넷째, 장례행사 기간은 가정의례준칙에 의거 3일장을 원칙으로 하나, 사고사이거나 기타 및 불상, 해외 및 국내외의 출장 중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장례 일정이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장례위원회의 결정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장례행사 표준매뉴얼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각 기관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행사를 중심으로 통일성을 지켜나가되 각 기관 및 고인의 담당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추가하거나 제외되는 행사들을 유족과 협의 하에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부 록



참 고 문 헌

- 국립대전현충원(2007), 최규하 전대통령 안장 매뉴얼.
- 국회사무처 국제국(1997), 국회의전편람.
- 기술표준원(2005), 『봉안당 서비스 용어』
- 기술표준원(2004), 『화장장 서비스 용어』.
- 기술표준원(2002), 『장례식장 서비스 용어』.
- 문화관광부(2006), 『국가의전의 문화적 개선 방안 연구』, p. 106.
- 이주연(2010), 국장·국민장 사례분석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국장 및 국민장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만석(2008), 아름다운 고별을 위한 장례연출의 이해, 하늘문화
- 조경태(2008), 『국립묘지 국가의전현황과 개선방향, 정책자료집』, p. 4.
- 조현범(2000), 「현대 한국의 국가의례에 대한 시론적 연구」, 종교연구, p. 216.
- 총무처, 국민장 장의 의식준비 참고자료
- 총무처(1997), 우리나라 전례체계에 대한 연구, 예문관.
- 한국통신(1998), 의전실무편람.
- 황근식(2010), 국장 및 국민장의 의례절차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생사의례학과 석사학위논문
- 행정안전부(2008), 『정부의전편람』, 행정안전부(의정관실), pp. 362~380.
- 행정자치부, 국장·국민장 장의행사 매뉴얼, 행정자치부 의정관실
- 행정자치부, 대한민국 정부관련 장의 전체목차.
- 행정자치부, 기타 정부관련 장의 I 권.

행정자치부, 기타 정부관련 장의 II권.

행정자치부, 박정희 대통령 국장 I권.

행정자치부, 박정희 대통령 국장 II권.

행정자치부, 육영수여사 국민장.

Department of Commerce(2010) Division of State Fire Marshal, 「Firefighter
Line-of-Duty Death Guidelines」, U.S.A.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2009), 미국의 소방관 사고 보고서,
USA.

부록

- [부록 1] 국가장법
- [부록 2] 건전기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부록 3] 건전기정의례준칙
- [부록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부록 5] 사망조위금 신청 절차와 사망진단서

[부록 1] 국가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1. 전직·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제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 ①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 ②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 ① 제2조에 따라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殯所)를 설치·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장례비용)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6조(조기 게양) 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중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장의된 사람”을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 제1항 제2호 중 “국장기간·국민장일”을 “국가장기간”으로 한다.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제3호 중 “국장·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록 2-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 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가정의례의 개발·보급 및 실천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가정의례 관련 학술기관 단체 등의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

[전문개정 2008.3.28]

第4條 삭제<2008.3.28>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② 공무원, 공공기관 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숙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④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단체 및 국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8조(명예가정의레지도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계몽하기 위하여 명예가정의레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② 명예가정의레지도원의 위촉방법·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부칙 <제5837호, 1999.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等) 家庭儀禮에 관한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종전의 家庭儀禮에 관한 法律 第5條 내지 第11條, 第14條와 法律 第4637號 家庭儀禮에 관한 法律改正法律 附則 第2項 第3項 前段의 規定중 儀禮式場營業(葬禮式場營業)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規定은 埋葬및墓地等에 관한 法律改正法律의 施行전까지 이를 적용한다.

第3條(家庭儀禮審議委員會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家庭儀禮審議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家庭儀禮審議委員會로 본다.

第4條(行政處분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전의 종전의 家庭儀禮에 관한 法律 위반행위에 대한 行政處分(課徵金處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家庭儀禮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이후 附則 第2條 但書의 適用時限까지 종전의 家庭儀禮에관한法律 중 儀禮式場營業에 관한 規定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에 관하여는 同 適用時限 이후에도 종전의 家庭儀禮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家庭儀禮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第15條의 規定을 제외한다.

②이 法 施行이후 附則 第2條 但書의 適用時限까지 종전의 家庭儀禮에관한法律 중 儀禮式場營業에 관한 規定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同 適用時限이후에도 종전의 家庭儀禮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健全家庭儀禮의定着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㉖부터 ㉗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31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 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 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가정의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단체 및 가정의례 관련 시민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1. 가정의례에 관한 지도·계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청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지도원이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④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부칙 <제21028호, 2008.9.23>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 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26> 까지 생략

[부록 3]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례(成年禮)”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2. “혼례(婚禮)”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新行)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3. “상례(喪禮)”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4. “제례(祭禮)”란 기제사(忌祭祀) 및 명절에 지내는 차례(이하 “차례”라 한다)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5. “수연례(壽宴禮)”란 60세 이후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6. “주상(主喪)”이란 상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제주(祭主)”란 제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종교의식의 특례)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제4조(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장 성년례

제5조(시기) 성년례는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할 수 있다.

제6조(성년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이 성년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성년례의 식순, 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혼례

제7조(약혼) ① 약혼을 할 때에는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쪽 집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약혼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2의 약혼서를 교환한다.

1.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일부 또는 전부(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8조(혼인) ① 혼인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혼인예식의 장소는 혼인 당사자 어느 한 쪽의 가정 또는 혼인예식장이나 그 밖에 건전한 혼인예식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한다

2. 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3. 혼인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4. 하객 초청은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간소하게 한다

② 혼인을 할 때 혼수(婚需)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

③ 혼인예식을 마치고 치르는 잔치는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

④ 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상례

제9조(상례)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殯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발인제) ① 발인제는 영구(靈柩)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한다.

② 발인제의 식장에서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한다.

제11조(위령제) 위령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매장의 경우: 성분(成墳)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한다.

2. 화장의 경우: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제1호에 준하는 절차로 한다.

제12조(장일) 장일(葬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제13조(상기) ①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일까지로 한다.

② 상기 중 신위(神位)를 모셔두는 제연(?筵)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한다.

제14조(상복 등) ①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②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로 한다.

제15조(상제) ①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가 된다.

②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③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한다.

제16조(부고)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구) 운구(運柩)의 행렬순서는 명정(銘旌), 영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서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아니한다.

제18조(발인제의 식순 등)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5장 제례

제19조(제례의 구분) 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

제20조(기제사) ①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②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1조(차례) ①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②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2조(제수)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제23조(제례의 절차) 제례의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제24조(성묘)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

제6장 수연례

제25조(회갑연 등) 회갑연 및 고회연 등의 수연례는 가정에서 친척과 친지가 모여 간소하게 한다.

부칙 <제21083호, 2008.10.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1.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12.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중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중 장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 장기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중 장기계획 중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 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범위·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

④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①매장하려는 자가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매장·화장 및 개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와 시체나 유골의 소각 정도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연장의 방법) ①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묘지의 일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체(無緣故 屍體)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4조(시설묘지의 설치 등) ①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시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⑤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5.31>

⑥시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시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시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화장 시설 또는 시설·보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설·보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보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보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보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설·화장시설 및 시설·보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립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시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⑤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른 시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5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시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중

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묘적부의 기록 관리) ①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산립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①법인묘지·사설 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사설 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인묘지·사설 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법인묘지·사설 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

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래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시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시설묘지·시설봉안시설 또는 시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금의 적립금액,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관리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을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4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묘지 또는 시설자연장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시설 화장시설·시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무연분묘의 처리 등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②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장례식장영업

제29조(장례식장영업)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

④장례식장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게시한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장사시설 정비·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제30조(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1. 감염병의 전파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2. 풍수해 등의 재해로 토사유출, 지반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하여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제31조(시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시설묘지·시설 화장시설·시설봉안시설 및 시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3항 또는 제6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시설묘지를 설치한 때
2.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시설 화장시설 또는 시설봉안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
4. 제24조에 따른 신고 의무, 가격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제25조를 위반하여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격표 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营业을 하면 해당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청문)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5.30>

1.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가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정의 기준 절차,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과징금 처분) ①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법인묘자·시설 화장 시설·시설봉안시설 또는 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대신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①국가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검사 및 보고) ①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산립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중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

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체에 약품처리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

6.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8.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9.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1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2.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산장·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 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3조(이행강제금) ①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연고자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한다.

③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시장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등은 제31조에 따른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3.28>

부칙 <제8489호, 2007.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봉안묘 또는 봉안탑부터 적용한다.

②제19조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제3조(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묘·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묘·화장시설 및 봉안시설로 본다.

제4조(납골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묘·납골당·납골탑 등 납골시설 및 화장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봉안시설 및 화장시설로 본다.

제5조(시설납골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종교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시설납골시설은 제1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묘지허가를 받은 구역 내에서 이 법에 따른 자연장지를 조성 중이거나 조성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장지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615호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20일 당시 설치 중인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615호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전의 제15조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시설은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등설치제한지역
-----	--------------------	-----------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030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염병예방법)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7까지 생략

⑤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로 한다.

⑤9부터 ⑧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國葬國民葬에관한法律) <제10741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국장·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사목에서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장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5. 「정신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6. 「이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동복지 시설의 장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0.3.15>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조성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

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1.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사시설의 수요 변동 추세와 공급 전망
3.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5.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6.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계획의 기본방향
2.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4.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

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15>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중장기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1.5.3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

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제7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

가.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화장

가.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3. 개장

제1호에 따른 매장과 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한다.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2.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③ 제2항의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제9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체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연고 시체 등을 화장하지 아니하고 매장 또는 봉안한 경우에는 회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목장립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3. 전체 면적과 수목장립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규모
4. 사용료와 관리비 등 이용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수목장립이나 자연장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과 수목장립 등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종중묘지만 해당한다)

3. 가족묘지등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8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2.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10.3.15>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 및 봉안에 관한 사항

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19조(개인·가족자연장지의 변경 신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개인·가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가족자연장지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3. 가족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20조(중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중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5.4, 2010.11.2>

1. 중중·문중자연장지

가. 중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중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삭제 <2010.11.2>

다. 실측도

라. 중중·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마.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중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등자연장지

가. 종교단체 자연장지 <2010.11.2>

1) 종교단체 등록증

2) 삭제

3)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4)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5)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

계획서

나. 법인자연장지 <2010.11.2>

-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2) 삭제
- 3)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4)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5)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6)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 계획서

- 7)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8)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을 받으면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자연장지의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21조(시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시설자연장지(사

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법 제17조제1호에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조성하는 10제곱미터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를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

③ 법 제17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8.9.22, 2010.3.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

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도로법」 제49조와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다만, 자연장지는 요존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8.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9.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방지(砂防地)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23조(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 상석 1개

3.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① 법 제20조제5항과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공설묘지·사설묘지의 설치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5.30>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4.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한다)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1. 법인이 설치(조성)·운영하는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3.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

제2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15>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와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3.15>

④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보존묘지등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존묘지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9조(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3.15>

③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3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소유자,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4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국가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36조(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묘지소유자등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시·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시·도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보존묘지등의 지정 해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등이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3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등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1.4.22]

부칙 <제20791호, 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구성되었거나 설치·구성 중인 묘지·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4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7586호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 이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단서 중 “화장장”을 각각 “화장시설”로 한다.

별표 1 제2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6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화장장·납골당”을 “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지”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을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로 한다.

⑧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시설화장장·시설납골시설”을 “시설화장시설·시설봉안시설”로 한다.

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호 중 “제13조 및 제14조”를 “제14조 및 제15조”로, “시설화장장 또는 시설납골시설”을 “시설화장시설 또는 시설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2 중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을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로 한다.

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골시설”을 각각 “봉안시설”로 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을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로 한다.

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마목 중 “제20호나목의 납골당”을 “제26호나목의 봉안당”으로 한다.

⑬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⑮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시설화장장·시설납골시설”을 “시설화장시설·시설봉안시설”로 한다.

<16> 지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7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1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1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10호 중 “화장장 및 납골당”을 “화장시설 및 봉안당”으로 한다.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 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19>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 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9>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073호, 2010.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 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6항·제7항 전단·제8항 전단·제9항 및 제10항, 제17조제6호, 제27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21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3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 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7> 까지 생략

<1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 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 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 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45호, 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

제25조제2호 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로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장 등의 신고)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장·화장 또는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시체의약품처리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매장하려는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공고)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체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주소·성명·성별·연령·사망일·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체의 특징에 관한 사항

2. 시체의 발생상황: 발생 장소, 발견 경위, 사망 당시의 착용 복장

3. 매장·화장·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 연락처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0.9.1>

2. 평면도

3.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1. 가족묘지

가. 삭제 <2010.9.1>

나. 평면도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한다)

2. 종중·문중묘지

가. 종중·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삭제 <2010.9.1>

다. 실측도

라.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마.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묘지

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삭제 <2010.9.1>

다.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바.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사.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영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설치(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시설화장시설 또는 시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1. 시설화장시설

가. 삭제 <2010.9.1>

나.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다.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라.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마.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2. 시설봉안당

가.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1) 종중·문중은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등록증

(2) 삭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가족봉안당은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건물·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해당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한다)

나. 법인봉안당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삭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 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3. 시설봉안묘[봉안탑과 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1) 삭제 <2010.9.1>

(2) 평면도

(3)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만 해당한다)

나.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묘

(1) 종중·문중은 봉안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등록증

(2) 삭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5)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인봉안묘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삭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 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묘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영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묘적부) 법 제22조에 따른 묘적부(墓籍簿)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6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다만,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장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설묘지의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한 때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연분묘를 처리한 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 제6조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3.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4.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5. 제12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제10조(화장·봉안·자연장 상황의 기록·보관) ① 영 제18조제2항·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화장·봉안 또는 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체(죽은 태아, 개장 유골) 화장·봉안·자연장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장·봉안·자연장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신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체(죽은 태아, 개장 유골) 화장·봉안·자연장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 ①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1. 삭제 <2010.9.1>
2. 평면도
3.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영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중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중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중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발급하여야 하는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법인묘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장등

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

② 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 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방법·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라.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

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다시 할 것

②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에 따른 개장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이하 "법인묘지등"이라 한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 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이용 요금

2. 관리비 : 잔디 조성비, 벌초 등 묘지·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관리비용

② 법인묘지등을 설치(조성)·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관리비,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에 따른다.

제1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법 제25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관리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관리금은 해당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금액

과 사용 내역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시장 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등 재해 예방과 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2. 기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에 매장·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유골이나 유골의 골분(骨粉)에 대한 조치계획서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매장·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유골이나 유골의 골분의 연고자 또는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계약을 한 자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는 폐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4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2. 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공고를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

제20조(시체의 위생적 관리 등) ① 장례식장영업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 안의 시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체실과 염습실(殮襲室)을 설치할 것
2. 시체실과 염습실은 실내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을 갖추는 것
3.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시체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설치할 것(시체에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에 출입하는 자의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할 것
5.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은 매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하고 이를 기록한 대장을 갖추어 놓을 것
6. 시체로부터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을 출입하는 사람에게 미리 감염 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시체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것
7.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및 위생복을 착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시체를 보관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및 운송장비를 소독할 것
9. 시체실, 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할 것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의 게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행정처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등은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 : 2개월 이내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경우 : 10일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등은 법 제32조제2항·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23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1.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2. 사회장 대상자 등의 묘지 또는 분묘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묘지 또는 분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제24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종교단체 및 법인이 설치하는 봉안시설만 해당한다), 사설자연장지(종교단체 및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만 해당한다)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인은 반기별로 매장,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는 반기별로 장례식장의 관리·운영 상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5호, 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의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제2호 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무연분묘의 개장 등의 공고방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1회차의 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체의 위생적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 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록 5] 사망조위금 신청 절차와 사망진단서

사망조위금은 단기급여로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하거나, 공무원이 사망한 때 공무원연금공단(<http://www.geps.or.kr>)을 통해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사망의 경우 부조급여 산식은 아래와 같다.

※ [중진법 적용]: 보수월액×3배 (관련법령 法41 ①)

[개정법 적용]: 기준소득월액×195/100 (관련법령 法41의2 ③)

■ 급여안내(부조급여) 이용방법

공단에 접수된 부조급여 지급내역을 조회

The screenshot shows the GEPs portal interface. On the left is a navigation menu with options like 'Salary Guide', 'Subsidy', 'Pension', etc.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급여안내' (Salary Guide) and '부조급여' (Subsidy). It includes a table of subsidy payments and a form for '사망조위금' (Death Subsidy).

접수구분	연월일	신청일자	결정일자	지급금액	지급일자
사망조위금	2000/03/01	2000/03/01	2000/03/01	1,189,480	2000/03/01
사망조위금	2000/03/01	2000/03/01	2000/03/01	1,189,480	2000/03/01

Below the table, there is a section for '사망조위금' (Death Subsidy) with a form to input the deceased's information.

1. 고객지원시스템 상단 “급여안내-부조급여” 클릭

- 본인명의로 지급받은 부조급여에 대한 내역이 자동조회

※ 공단에서 지급되는 부조급여로는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이 있으며,

○ 재해부조금이란

⇒ 공무원의 재산이 화재,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

○ 사망조위금이란

⇒ 공무원 본인,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의 직계존속,

공무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지급

2. 사망조위금의 사망자 정보 파악창 표시

- 조회결과에 대하여 진행단계의 내용을 클릭하시면,

- 해당 부조급여에 대한 세부사항이 열람이 가능

사 망 진 단 서

병록번호

(시 체 검 안 서)

연 번 호

원부대조필 인

1	성 명		2	성별	남·여	3	주민등록번호	
4	실제생년월일		년 월 일			5	직 업	
6	본 적							
7	주 소							
8	발병일시	년 월 일 시 분 (24시간제에 의함)						
9	사망일시	년 월 일 시 분 (24시간제에 의함)						
10	사망장소	주 소						
		장 소	①주택내 ②의료기관 ③사회복지시설(양로원,고아원등) ④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⑤도로 ⑥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⑦산업장 ⑧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⑨병원 이송 중 사망 ⑩기타()					
11	사망의원인	(가)	직접사인		발병부터 사망 까지의 기간			
	※(나)(다)(라)	(나)	(가)의 원인					
	에는 (가)와 직접 접 의학적 인과관 계가 명확한 것 만을 적습니다.	(다)	(나)의 원인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연월일	년 월 일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12	사망의 종류	① 병사 ② 외인사 ③ 기타 및 불상						
13 외 인 사 사 항	사고종류	① 운수(교통) ② 중독 ③ 추락 ④ 익사 ⑤ 화재 ⑥ 기타()			의도성 여부	① 비의도적 사고 ② 자살 ③ 타살 ④ 미 상		
	사고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24시간제에 의함)						
	사고발생장소	주 소						
		장 소	① 주택 ② 의료기관 ③ 사회복지시설(양로원,고아원등) ④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⑤ 도로 ⑥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⑦ 산업장 ⑧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⑨ 기타()					
<p>위와 같이 진단(검안)함.</p> <p>년 월 일</p> <p>의료기관 주소</p> <p>명칭</p> <p>○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p> <p>성명 (서명또는날인)</p> <p>※ 주의 : 사망신고는 1월 이내에 관할 구청·시청·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p>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09. 4. 29>

210mm×297mm

